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경기도의 기록

앞서 가는 길
함께 걷는 길
G방역

CONTENTS 목차

발간사 4
타임라인 6
사진으로 보는 G방역 12
숫자로 보는 G방역 28
INTRO 30

I 경기도의 G방역 대응체계

1 도지사 직속, '재난안전대책본부' 36
2 24시간 비상체제 '방역대책반' 42
3 특사경 중심의 강력대응 '방역지원단' 45
4 민관협력의 '긴급대책단' 50
5 수도권 협력 네트워크 55
6 유관기관과 원팀체제 59
7 의료기관과 전방위적 협력 네트워크 65
8 경기도의 첨단기술, 세계를 밝히다 69
9 경기도의 10대 제안 74

II 보건방역

1 선제적 방역 조치 90
2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 단속 113
3 신천지 사태와 긴급 행정명령 118
4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125
5 사회적 거리두기 7대 전략 129
6 전국 최초 최첨단 설비 갖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133
7 집단감염 대응과 행정명령 137
8 초유의 개학연기 및 긴급돌봄 156
9 가정같이 편안한 생활치료센터 165
10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173
11 해외입국 도민무료검사 및 공항서비스 178
12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181
13 '위험도 사전평가'로 행사 안전관리 184
14 따뜻한 방역, 착한 기부 188

III 경제방역 – 연대와 응원의 방역

1 선제적 경제방역 196
2 경기도의 결단 '재난기본소득' 208
3 전국 최초, 금융복지형 '극저신용대출' 226
4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229
5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 234
6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238
7 위기도민 발굴 · 지원 '긴급복지' 241
8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247
9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소비' 운동 250

IV 심리방역 – 공감과 배려의 방역

1 선제적 심리방역 260
2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비상 가동 265
3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전담 선별진료소 269
4 도민의 마음 돌봄 프로젝트 276
5 심리지원을 위한 안심정보 프로젝트 280
6 사회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284
7 현장과 공감하는 심리방역 287

V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응

1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294
2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대응 296
3 마스크 의무화 및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 300
4 도민과 의료인을 향한 긴급 호소 303
5 도지사 호소에 의료인들 나서다 307
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13

VI 부록

1 코로나19 확산 과정 318
2 대한민국 방역체계 331
3 코로나19 관련 용어 334
4 방역현장의 이야기 341

PREFACE 발간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역 현장 일선에서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긴 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경제 방역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경기도의 기록」은 경기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모범 사례 위주로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눠 알기 쉽게 풀어내었습니다. 긴급했던 코로나19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시행착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교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파력 높은 감염병 앞에서 방역의 주체와 대상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의 협조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이 코로나19 종식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쁘신 중에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지침 제작에 힘을 모아 주신 경기도 의료진과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370만 경기도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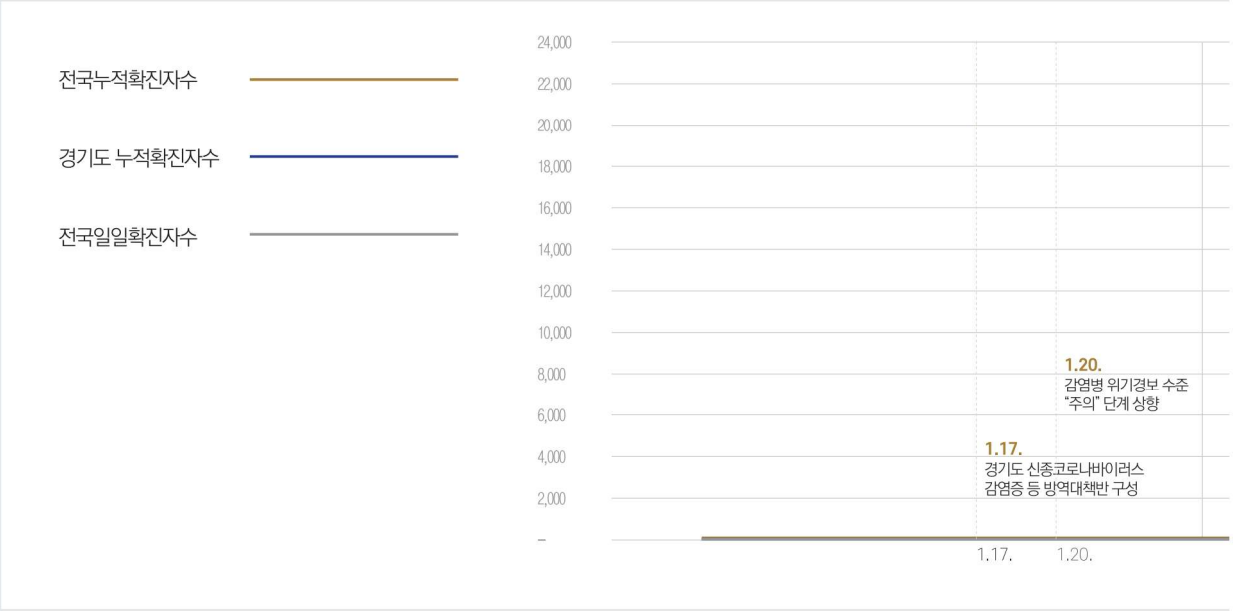
TIMELINE 타임라인

경기도 G방역이 걸어온 길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연대하고 지원하라"

1월

1.17. 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방역대책반 구성
1.20.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 상향
1.23. 시 · 군 선별진료 의료기관 지정 · 운영 실시
1.27.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29. 민간역학조사관 임명(6명,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전문가)
1.2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행사 취소 · 축소 방침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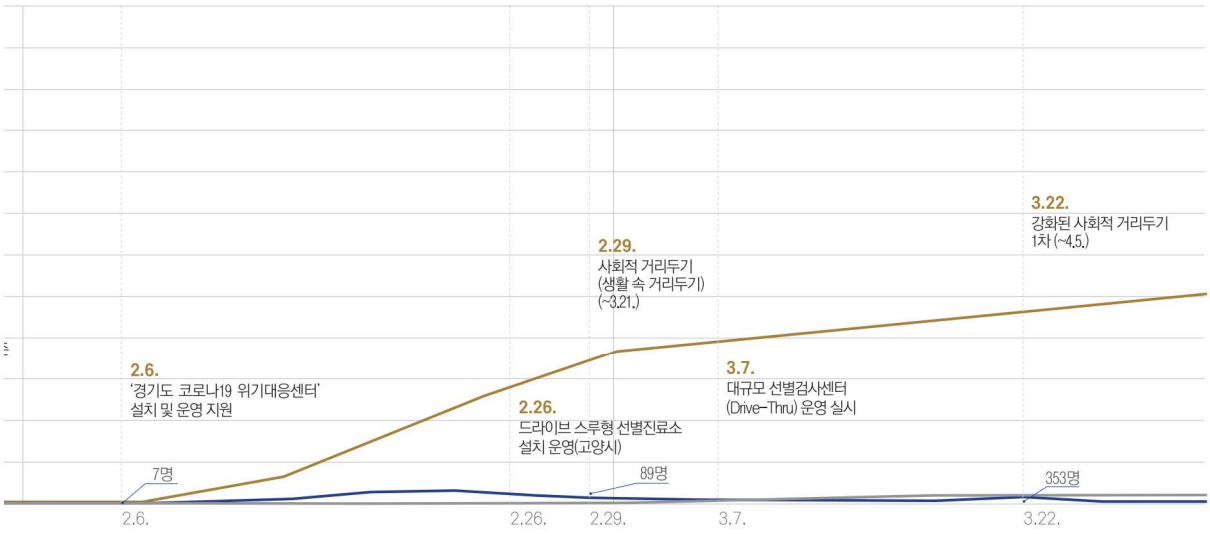


2월

2.6.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2.6.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
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도 공공병원 격리병원 확대 운영 계획 발표
2.10.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 임시생활시설 설치 결정에 따른 도지사 긴급브리핑
2.14. 취약계층에 마스크 1인당 50매 씩 긴급지원(191억 원 긴급 투입)
2.1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2,000억 원 긴급지원 등 얼어붙은 지역상권살리기 대책 마련
2.2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신천지 관련 긴급조치 발표
2.25. 신천지교회 과천본부 강제역학조사
2.26. 드라이브 스루형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고양시)
2.28. 경기도 '선한 건물주 임대관리 방안' 확산 캠페인 추진
2.29.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3.21.)

3월

3.2.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가평연수원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3.7. 대규모 선별검사센터(Drive-Thru) 운영 실시
3.11.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 출범
3.12.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
3.14.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긴급 대출 상담 보증지원
3.18.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3.19.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 운영(한화생명연수원)
3.20.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3.2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4.5.)
3.22.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 임대료 분쟁조정 지원
3.24. 세계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지사 · 도의회 의장단 긴급 브리핑
3.25.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융자' 추진
3.26. 코로나19 해외입국 경기도민 대상 무료검사 원스톱서비스 추진



TIMELINE 타임라인

4월

4.1. 31개 시군, 14개 금융기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체결

4.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속보증 추진

4.3.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4.3.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

4.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차(~4.19.)

4.7. 경기 극저신용대출 실시

4.8. 11개 시군 도와 함께 시행 재난기본소득지급 발표

4.9.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4.11. 코로나19 극복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공익적 일자리 사업 추진

4.11.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극복 사업 추진

4.12.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참여 취약계층 교육 지원

4.12. 학교급식 농가 돕는 착한소비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4.1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정책' 추진

4.14. 문화예술관광 분야 위기극복 위한 '경기도 문화뉴딜 대책' 추진

4.15.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

4.16. 코로나19관련 도내 자영업자 대상 경영환경 실태 조사 실시

4.19. 저소득층 30여만 가구, 한시 생활지원비 지원

4.19. 코로나19 해외입국 도민 대상 「AI콜센터」 운영

4.20.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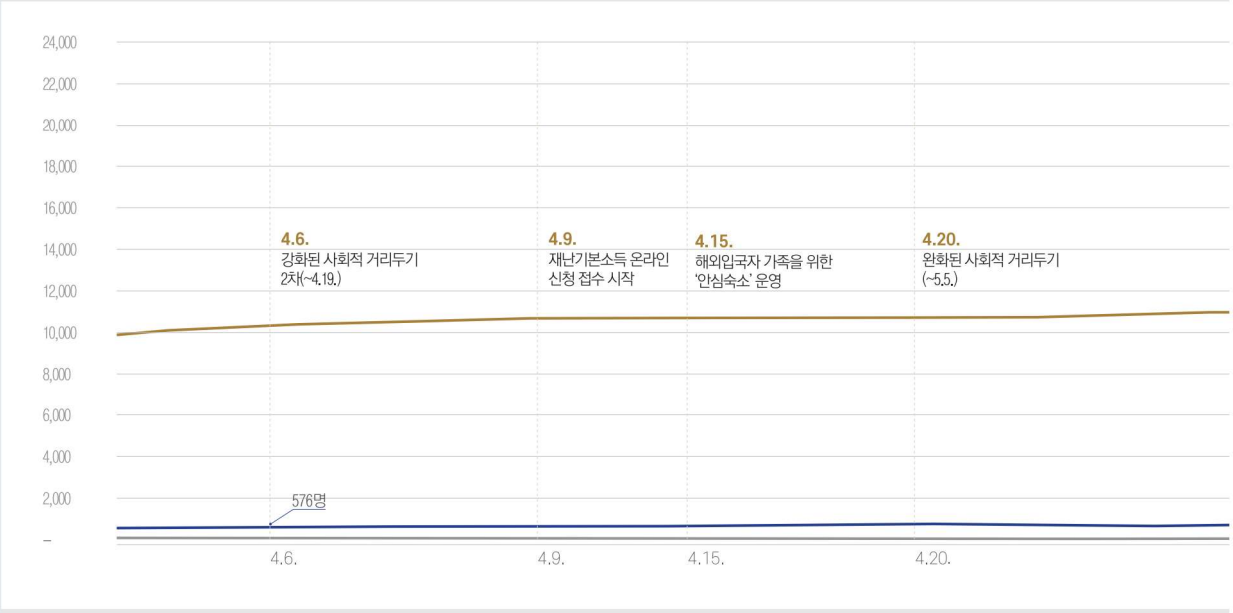
4.20. 섬유기업 생산 항균마스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21.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추진

4.25.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 활성화 추진

4.26. 도예인을 위한 긴급 자금 대출지원

4.2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조례 개정(영주권자·결혼 이민자 포함)



5월

5.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여행 캠페인' 추진

5.6. 생활 속 거리두기(5.6.~)

5.6. 코로나19 직 · 간접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추진

5.7.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한시적 감면

5.10.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검사의무화 도 공무원 대민 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동

5.1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5.14. 코로나19 대응연계,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5.18. 코로나19 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업무협약

5.19.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5.25.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 시행

5.27.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고교 취업 활성화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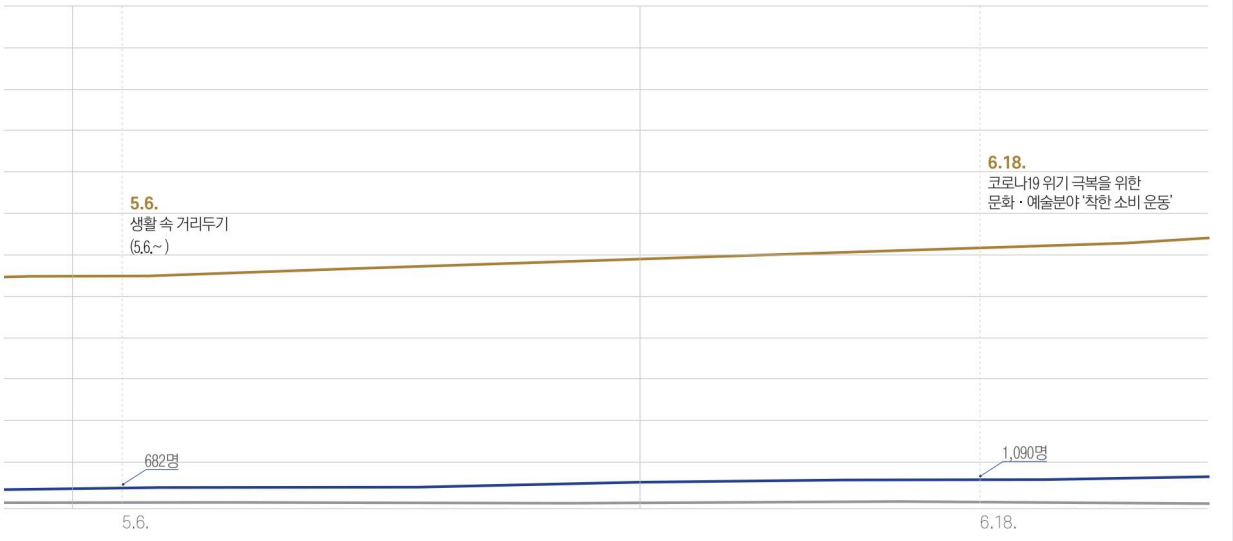
6월

6.5.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6.13. 여름철 대비 냉방장치가 설치된 워크스루형 부스 및 컨테이너 지원

6.1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 · 예술분야 '착한 소비 운동'

6.26.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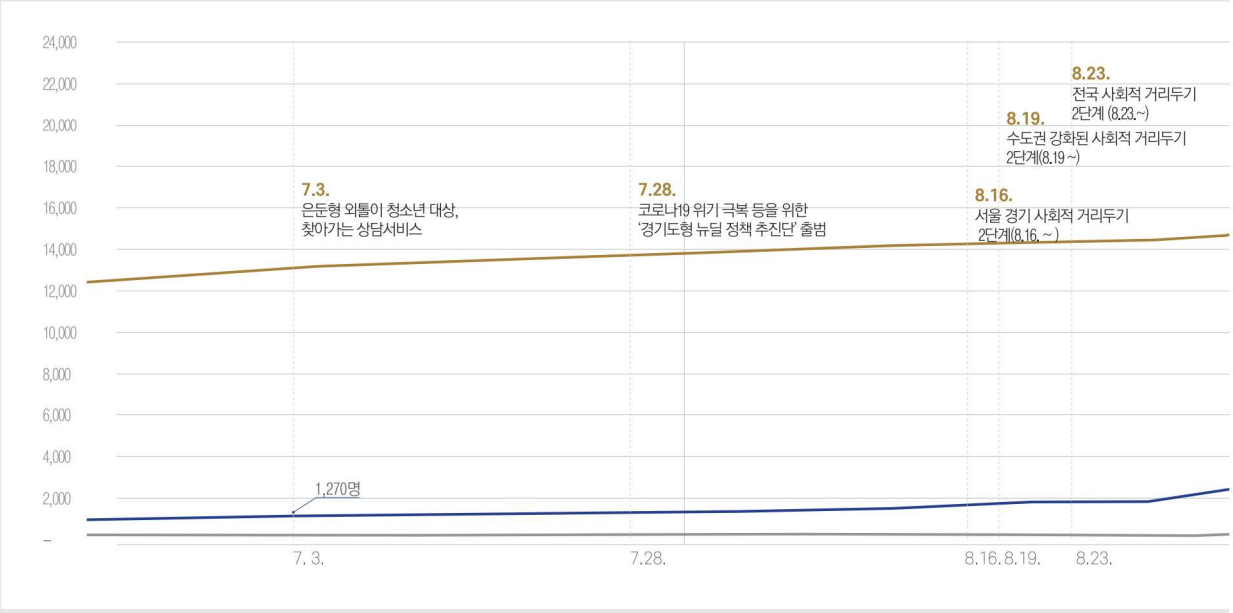
TIMELINE 타임라인

7월

7.1.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기도 언택트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7.2. 道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서울대 보건대학원 공동, 코로나19 심리조사
7.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7.7. 道 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신고코너 운영
7.13. 포스트코로나 대비, 외국인 권리구제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운영
7.13. 보건환경연구원, 마스크 성능검사 시스템 구축
7.16. 안성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가동
7.24.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스트코로나 대비 '모바일 보증서비스' 시행
7.28.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출범

8월

8.14. (도지사브리핑) 종교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8.15.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道 · 평택시 · 외교부 · 주한미군 워킹그룹 결성
8.16.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6. ~)
8.18.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 명령
8.18. 경기도 – 교육청 – 경찰청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8.19.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9 ~)
8.19.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
8.21. 도시사, 코로나19 수도권 내유행에 따른 내도민 긴급호소
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23.~)
8.25. 결혼식장(뷔페식) 소비자 분쟁 처리 강화
8.27.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총력 대응
8.3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31. ~ 9.6.)



9월

9.2.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 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
9.4. 「코로나19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진단검사 거부자 20명 고발
9.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9.7. ~ 9.13.)
9.8. 국군수도병원, 감염병관리기관 추가 지정
9.10.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9.13. 추석연휴 성묘객 및 장사시설 방역대책 발표
9.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14 ~ 9.27)
9.1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석 특별경영자금 운영 · 지원
9.27.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9.28.~10.11, 2주간)

10월

10.1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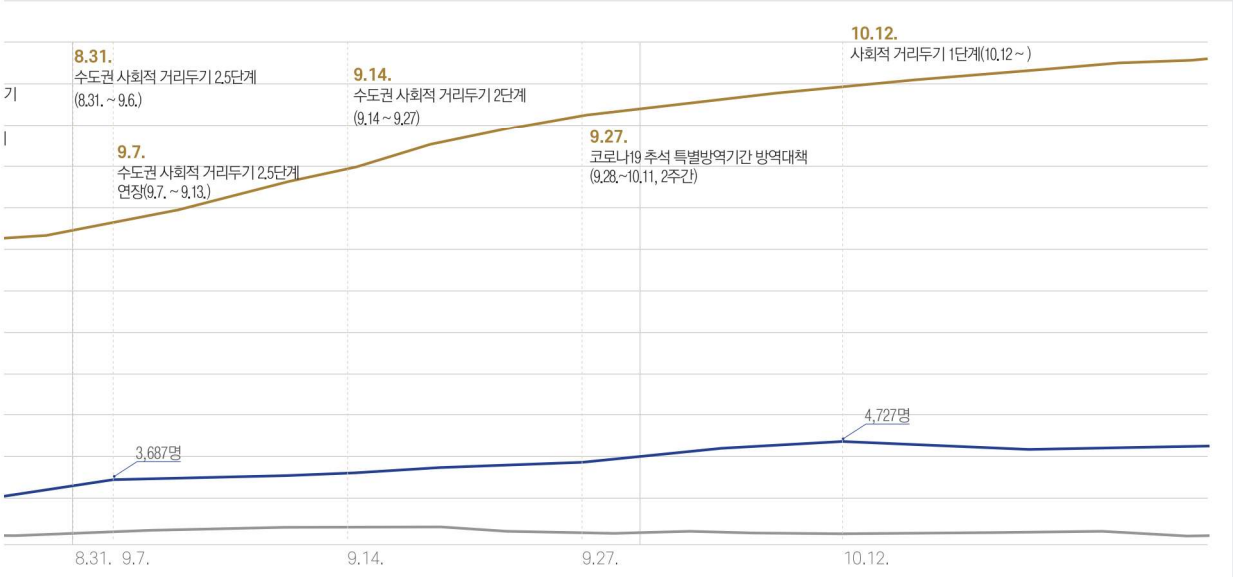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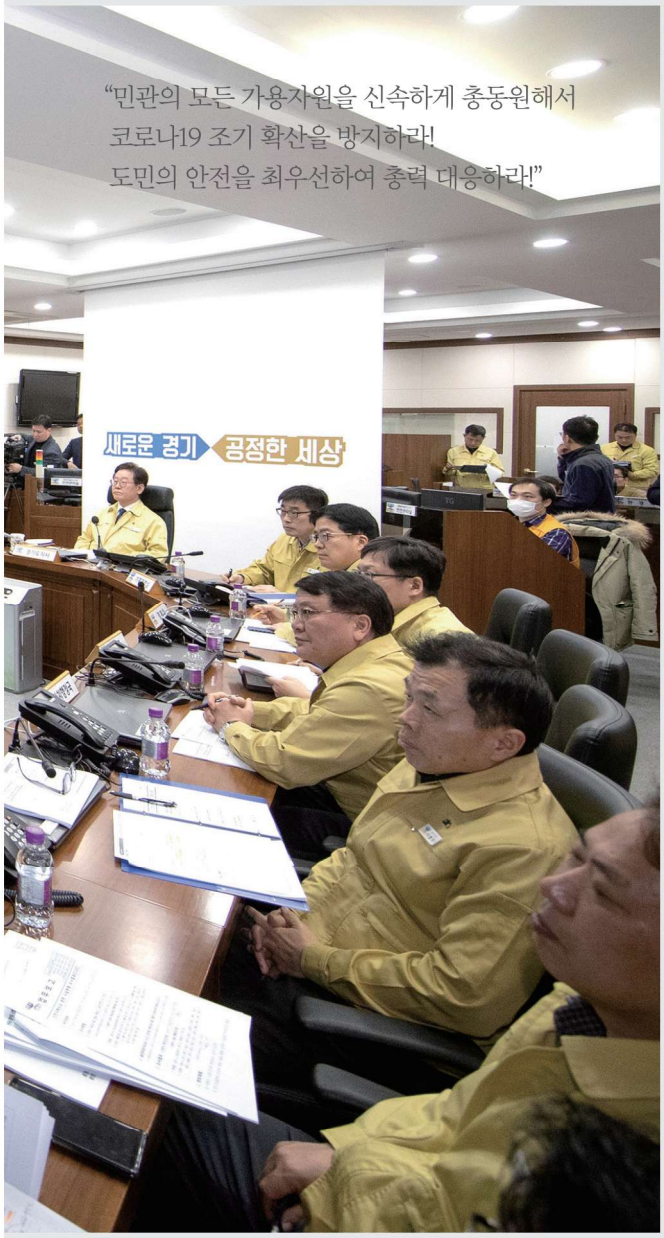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선제적 대응, 총력 대응의 시작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즉시 도는 각 시군, 각 보건소, 그리고 민 · 관 합동으로 비상대책을 협의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선제적 방역에 돌입했다.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방역의 골든타임, 긴급행정명령

2월 신천지 사태 발생! 도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본부(과천) 진입 '강제 역학조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초강력 방역을 통해 도내 확산 고리를 차단했다.





초기에는 확진자 등을 개별관리하는 '낚시' 방역이었다면
지역 확산 단계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전체를 집중 관리하는
'투망' 방역을 펼쳐야 한다.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경기도의 결단,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고 '경제방패 8대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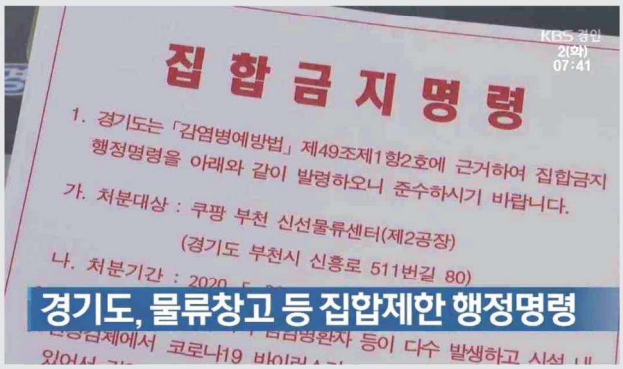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코로나19와의 동거, 집단감염 신속 대응

서울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체제와 심층 역학조사,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차단해 나갔다.



코로나19와의 동거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사수해야 한다.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도내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집처럼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중국 우한 교민(3차 입국자)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했다.



집과 같이 편안한 치료시설을 제공하라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라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도민과 함께 '착한 기부', '착한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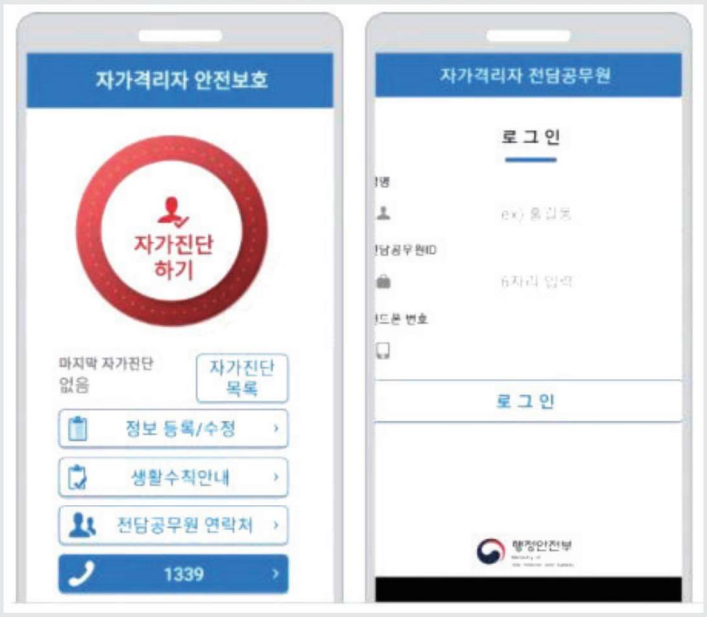
도내 기업, 기관, 도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에 동참하여 착한 기부 물결이 이어졌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의 드라이브 스루 장터,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착한소비' 운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했고 이러한 착한 소비 운동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 양보하는 마음
연대와 응원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는 방역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방역

언택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실현해 나갔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코로나맵, 마스크맵, 경기안전대동여지도 등의 어플을 개발 및 지원하는 한편, 안심밴드, QR 코드(의무화)를 활용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 불안 대신 안심, 혼란 대신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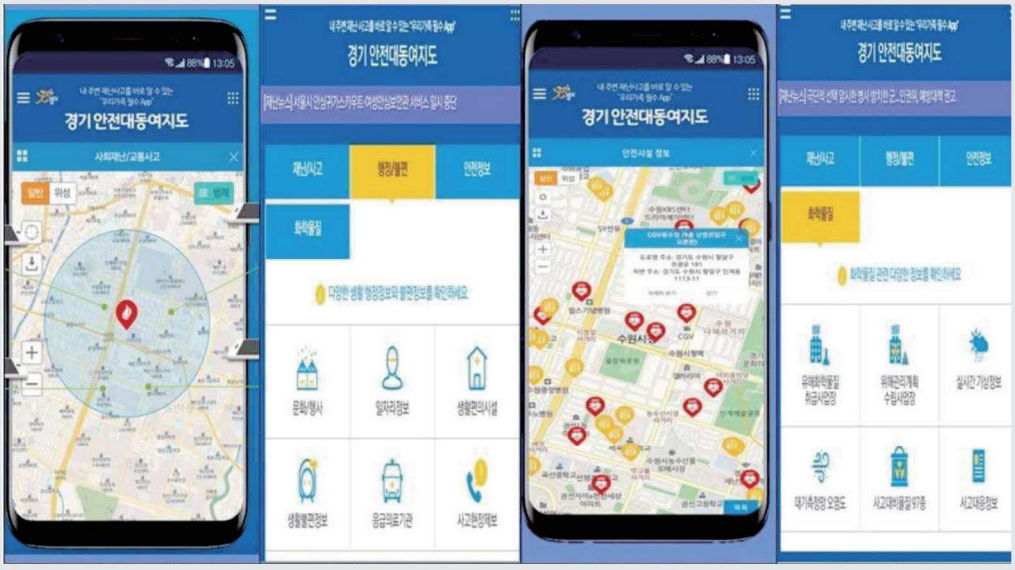


PHOTO 사진으로 보는 G방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했다. 특히 '긴급대책단'을 통해 전문의료진들이 대민 소통의 전면에 나섰으며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방역의 최전방을 사수했다.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NUMBER 숫자로 보는 G방역

1 First

국내 최초 '마스크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1월 31일 마스크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내 최초 '실시간유전자증폭' 및 '검체취합' 진단방법 도입

1월 31일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eal-time RT-PCR)을 도입하여 진단 소요시간을 1~2일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4월 18일 검체취합검사방법(풀링검사, pooling)을 도입하여 집단감염 전수조사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확진자 이동경로 상세정보 공개

1월 31일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개인 방역을 효율화했습니다.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

1일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같은 의료 · 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 최소 AI 케어콜 시스템 가공

3월 9일 성남시는 인공지는(AI)를 활용하여 능동감시자 관리를 위한 1일 2회 방역, 진단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기록 관리 서비스 실시로 과학적 K방역의 기초를 단단히 했습니다.

국내 최초 진료 네트워크 구축

4월 20일 병상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내 19곳의 병원과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광역 단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1일 1조 3,642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최초 홈케어시스템 가동

8월 28일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홈케어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가 병증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병상을 배정받아 이송합니다.

65

1월 29일 전문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6명의 민간 역학조사관을 임명한 데 이어 3월 4일 시·군 공중보건의사 59명을 역학조사관으로 대거 추가 투입했습니다.

700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700억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했습니다.

373억

1월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에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지원한 데 이어서, 1월 30일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 각 1억 원씩, 소방재난본부에 89억7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72억2백만 원 등 총 373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했습니다.

1조 1,917억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차적으로 1조 1,91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사용됐습니다.

2조 4,518억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 2조 4,518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경영자금 규모 확대, 고용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670

9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해 16개 병원에 670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보였던 6월 25일 15개 병원에 580개 병상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간 감염병 전담병상이 90개(16%) 늘어난 것입니다.

86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RO

경기도의 행동주의 리더십
“코로나19보다 더 빨라야 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 1월 20일. 그리고 경기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월 26일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약 3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시간과의 긴박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싸움이었기에.



선제적 초기 대응이 향방을 갈랐다

재난의 현장에서는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며 사회·경제적 기반 확보를 통해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귀중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은 전체 방역의 기반을 다진 일이었다.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1월 20일은 경기도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경기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본부'을 긴급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동시에 설 연휴를 앞두고 시군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미리 나섰다.

이후 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1월 27일에는 방역대책본부를 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모든 것을 총괄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의료원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대 방역! 보건만이 아닌, 경제, 심리까지 챙겼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이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건방역뿐만이 아니라 경제방역, 심리방역을 아우르는 '3대 방역정책'을 일찌감치 추진했다.

보건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수행을 위해 1월 31일 이미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여 선제적 경제방역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 도민에게 차별 없이 10만 원씩 지급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방역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결단한 것이었으며 중앙정부에서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려할 때 과감하게 전 도민 지급이라는 보편적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도 전국 최초 금융복지형 '극저신용대출',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경기도형 한정판 지역화폐 등 도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경제정책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여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또한 보건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지역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음을 간파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을 긴급 파견하여 방역현장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전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방범의 안전을 지켜나갔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방역의 표준을 세우다

경기도의 정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역학조사관 확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 설치,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선제적이고(preemptive), 신속하고(prompt), 적절하게(proper)' 등 '3P 원칙'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정책은 중앙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로 전파되어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마스크 수급조절, 폐렴환자 전수조사, 확진자 상세 이동경로 공개 등은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기일수록 코로나19 리더십은 빛났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일선의 야전 지휘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등에 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종일관 보건방역 '투망론'을 주장하면서 발로 뛰었다. "초기에는 확진자 중심의 개별관리인 '낚시' 방식을 했다면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관리하는 '투망'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투망론'은 보건방역 현장에서 시종일관 주효했고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신천지 측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와 명단 확보,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시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 도민 및 도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 8.15광화문집회 참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경기도의 총력 대응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그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발로 뛰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전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라는 초강경 지시에도 공직자들은 누구 하나 불만을 갖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 방역현장에서 도지사와 함께 발로 뛰었고, 더 나아가 도민의 마음까지 한데 모아져 수많은 착한 기부, 착한 임대인, 착한 소비 운동이 붐을 일으켜 타 지자체로 번져갔으며, 의료인들의 마음이 모아져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단 한 달 만에 1,100명이 훌쩍 넘는 발길이 모아질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위기였지만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Ⅰ 경기도의 G방역 대응체계

1 도지사 직속, '재난안전대책본부' 36

2 24시간 비상체제 '방역대책반' 42

3 특사경 중심의 강력대응 '방역지원단' 45

4 민관협력의 '긴급대책단' 50

5 수도권 협력 네트워크 55

6 유관기관과 원팀체제 59

7 의료기관과 전방위적 협력 네트워크 65

8 경기도의 첨단기술, 세계를 밝히다 69

9 경기도의 10대 제안 74

1
도지사 직속, ‘재난안전대책본부’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자마자 도는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했고, 이어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다시 ‘경계’로 격상되자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긴급 운영에 돌입했다. 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총괄지휘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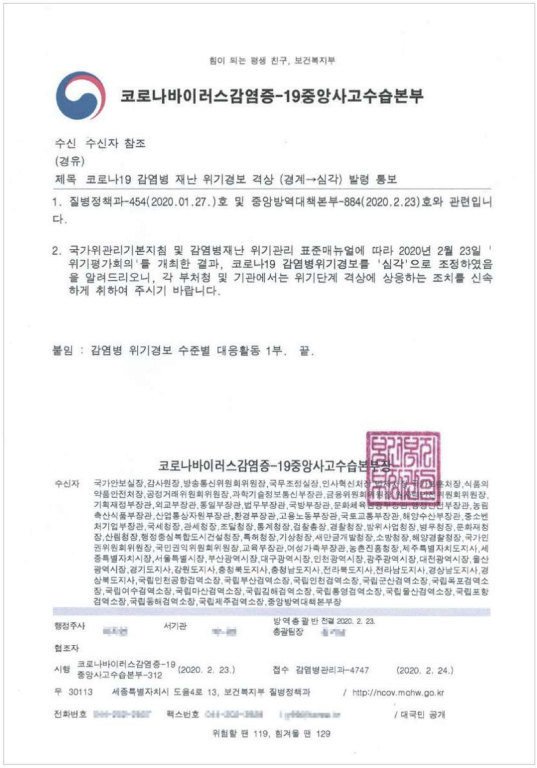
1월 27일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보건건강국장)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시 확대.운영했다. 동시에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시키고 도지사 및 부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대상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침을 전달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갔다.

당초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9개반 43명이었다. 그 후 2월 10일 상황관리총괄반을 추가 편성(5→8명,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하고, 2월 12일 이천시 현장상황반 편성(3명, 우한교민 3차 임시생활시설 관련 업무 담당) 등으로 9개반 49명 규모가 됐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강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추가 편성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개반 7명 규모를 추가 보강함으로써 당초 9개반 49명에서 11개반 56명 규모로 확대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화를 강화해 나가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격상 (경계→심각) 발령 통보

1. 질병정책과-454(2020.01.27.)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884(20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위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처청 및 기관에서는 위기단계 격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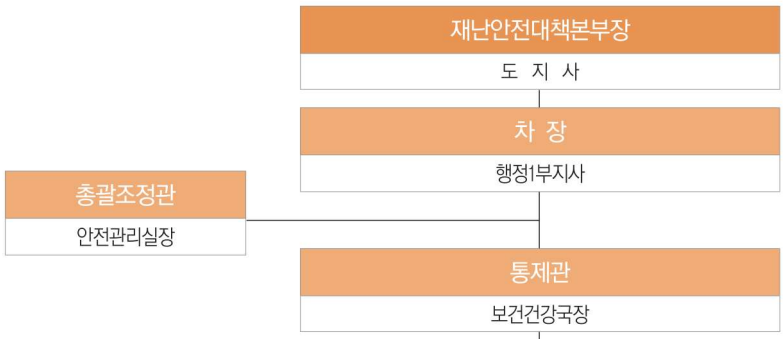
수신자 국가안보실장,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illegible]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금융위원회[illegible]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illegible]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새만금개발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농촌진흥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국립부산검역소장,국립인천검역소장,국립군산검역소장,국립목포검역소장,국립여수검역소장,국립마산검역소장,국립김해검역소장,국립충영검역소장,국립울산검역소장,국립포항검역소장,국립동해검역소장,국립제주검역소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행정주사 [illegible] 서기관 [illegible] 방역총괄반 전결 2020. 2. 23.
총괄팀장 [illegible]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2 (2020. 2. 23.) 접수 감염병관리과-4747 (2020. 2. 2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illegible] 팩스번호 [illegible] [illegible]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 **구성** : (본부장) 도지사, (차장) 행정1부지사, (통제관) 보건건강국장
   (조직) 상황관리총괄반 등 11개반 56명 편성
2. **운영 기간** : 2020. 1. 27. 15:00 ~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근무)
   ※ 24시간 근무(3명) : 사회재난과 1, 안전관리실 1, 보건복지국 1
3. **설치 장소**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및 소관 부서
   - 상황관리총괄반 등 7개반 23명은 재난상황실, 현장상황실(이천) 등 근무
   -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 사회질서 유지반 등 33명은 소관 기관(부서) 근무
4. **조직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 5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2명	재난자원 지원 2명	의료 및 방역 서비스 25명	재난현장 환경정비 1명	자원봉사 관리 1명	재난수습 홍보 1명	구조 구급 1명	사회질서 유지 1명	협업부서 2명	유관기관 5명
주관부서	안전 관리실 보건 건강국	복지국 안전 관리실	안전 관리실 보건 건강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 연구원 (방역본부 기능 수행)	환경국	자치 행정국	대변인	소방 재난 본부	경기 지방 경찰청	평생 교육국 여성 가족국	경기 교육청 평택 항만청 지상작전 사령부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재난종합 지휘센터 예산담당관 회계과	여성 정책과 자연재난과 세정과 법무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자연재난과	질병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감염병연구부 북부지원	환경 정책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보도기획 담당관 홍보미디어 담당관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 자원 봉사센터

5. 주요 업무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 요 업 무
본부장 (도지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행정1부지사)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안전관리실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상황 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 총괄
통제관 (보건건강국장)		○감염병 대응 및 수습 · 복구
① 상황관리 총괄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과** ○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중수본(행안부) 회의자료 작성 ○ 중대본, 중수본 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 실 · 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시군 상황실 접수된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및 현장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상황 근무자 식사 · 야식 등 후생 · 복지 ○ 이천(국방어학원) 현장상황실 상황유지
	질병정책과	▷ **질병정책과** ○ 도내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상황 접수 및 상황파악(원인, 피해상황, 현장상황 파악 및 상황메시지 작성) ○ 일일보고체계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총괄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총괄 ○ 도 방역인프라 가동 총괄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운영 총괄 ○ 도민 교육 · 홍보 및 위기소통 총괄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NDMS를 활용한 응급구호 상황파악 ○ 사망 · 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 (사망자 발생시) 장례절차 등 지원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 재해구호 기금 사용 시 검토 및 지원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 요 업 무
③ 재난관리 자원지원	질병정책과	▷ **질병정책과**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수요 파악 및 지원 ○ 지자체 의약품, 방역물품 확보 및 운영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 재난관리기금 응급지원 ○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및 부족지역 파악 ○ 피해지역 부족 재난자원에 대한 타 지역 자원 공동활용 지원
④ 의료 및 방역서비스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 **보건의료과 · 공공의료과**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 의료기관(격리병상) 확보 및 지원 ○ 입 · 퇴원 환자 병원 파악 및 관리 ○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
	질병정책과	▷ **질병정책과** ○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지원 ○ 감염병 예방 · 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 선별진료소 지정 및 운영
	사회재난과 정신건강과	▷ **사회재난과 · 정신건강과**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⑤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자원순환과 · 환경정책과** ○ 재난현장 폐기물(의료용품) 수거 · 처리계획 시행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⑥ 자원봉사 관리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 · 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총무과	▷ **총무과** ○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리
⑦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 **언론협력담당관 · 보도기획담당관 · 홍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 · 교육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 요 업 무
⑧ 수색 구조 · 구급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등 구조 · 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⑨ 사회질서 유지	경기남부 · 북부 지방경찰청	▷ 경기도남부 · 북부지방경찰청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질서 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 · 관리 시설 등) 경비

2
24시간 비상체제 '방역대책반'

'방역대책반'은 하루도 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다.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조사팀, 감염병정책팀, 감염병예방팀, 진단검사팀 등 5개 팀으로 이뤄진 방역대책반은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뛰었다. 설 연휴 등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역현장을 예의주시했다. 의심환자 접수, 긴급보고, 입국자 추적조사, 병상 배정, 연휴기간 중의 환자 입 · 퇴원 조치 등 방역현장에서 방역대책반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 감염병 초기 대응과 의료·방역 서비스 담당

경기도 방역대책반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즉각 방역대책본부로서 설치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이전까지 초기 대응을 담당했다. 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이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중 의료 및 방역 서비스 부문을 주로 전담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설 연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쉬는 날 없이 하루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치열한 코로나19 방역을 펼쳤다.

방역대책반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국 우한시, 중동지역 등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 발현 등의 의심환자 접수 시 긴급상황실(EOC) 유선 보고 및 대응조치,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담당했다. 특히 방역대책반의 감염병대응팀은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배정, 연휴기간 중 환자(의심환자) 입·퇴원 조치 관련 연락체계 상시유지 등에 주력했다.

상시적으로 코로나19 등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생물테러 모니터링,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상황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 방역현장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방역대책반

1. 운영 기간 : 2020. 1. 20. ~ 상황종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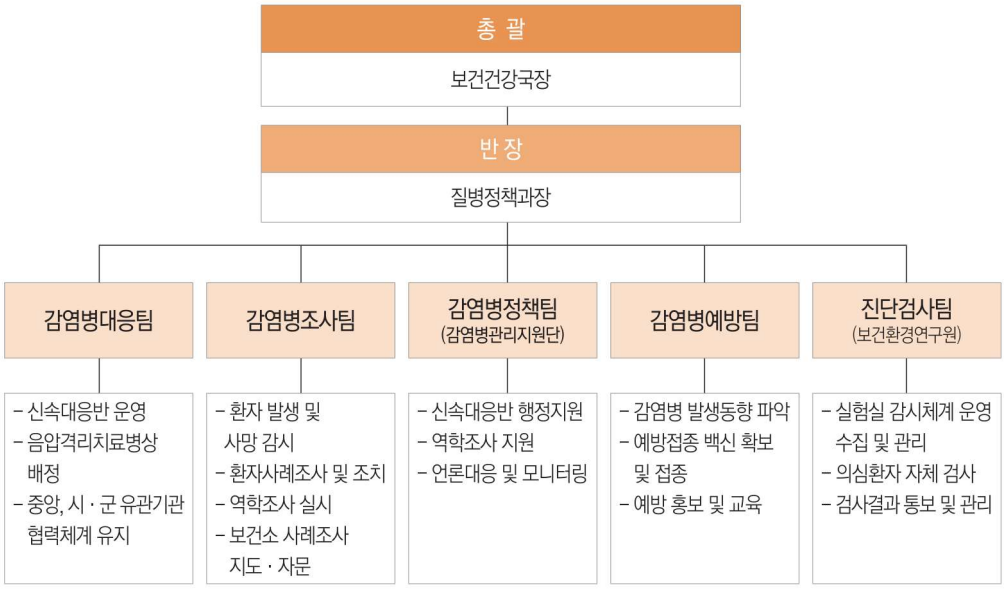
*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 가동 : 1. 24. ~ 1. 27. (4일)

2. 구성 : (총괄) 보건건강국장, (반장) 질병정책과장

(조직)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조사팀, 감염병정책팀, 감염병예방팀, 진단검사팀 등 5팀으로 구성

3. 설치 장소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및 소관 부서

4. 조직도



5. 주요 업무

- 상시 : 코로나19 등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생물테러 모니터링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
- 연휴 : 연계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역 의료기관 · 지역매체 등 활용한 감염병 신고(T. 1339) 및 예방 · 홍보 강화 등

3
특사경 중심의 강력대응 '방역지원단'

방역현장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진단 거부, 자가격리 비협조, 행정명령 미이행 등 방역거부 행태가 종종 발생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한 '방역지원단'은 방역거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 적발, 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갔다. 동시에 시군 보건소 등 일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현장 개선을 위한 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 방역거부에 초강경 대응, 집단감염 우려 불식

3월 10일 방역 거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경기도 방역지원단'을 창설했다. 당시 신천지 신도 등이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신속하게 응하지 않아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일시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던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 검사를 받긴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역거부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방역지원단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8개팀 11개 수사센터 125명, 의료·방역·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130명 규모로 구성했으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43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원단장을, 각 수사팀장이 현장대응반장을 맡고, 의료·보건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적인 방역지원을 도모했으며 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갔다.

감염이 우려되는 의심환자가 검사나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미이행, 집단행사 제한 및 금지 미이행 시 특사경 수사센터 및 시군보건소와 공조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방역 현장에서 방역거부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특사경의 풍부한 단속 경험을 활용하여 소관부서가 없거나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점검이 쉽지 않은 고위험군사업장(콜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성인게임방, 클럽), 종교시설(입장불허 등 점검 비협조 교회)에 대한 집중적 방역점검 활동을 수행했다. 이들 고위험군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소독,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했으며, 시군 보건소 등 일선현장의 방역활동에 대한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에선 방역 거부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했다. 자가격리 거부, 검사 거부 등 방역 거부를 방치하면 방역망이 뚫리고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찰과의 핫라인을 만들어 방역현장에서 즉시 검사, 즉시 격리 및 입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방역지원단을 창설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역지원단 창설에 대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 불응 시 경찰과 함께 강력히 대응했다. 또 2차, 3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가 중요하므로 관련부서와 연계해 중점 점검하고 업주의 자율적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갔다."

–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방역지원단

1. 추진 배경

- 방역 거부에 대한 강력 대응 및 지역 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현장 방역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사업장 방역점검 지원 및 방역조치 불응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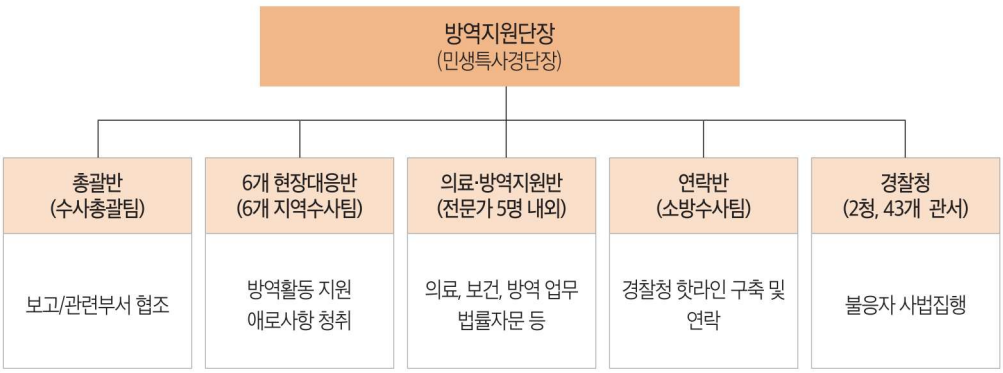
2. 운영 기간 : 3. 10. ~ 상황 종료 시까지

3. 지원 내용

-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 지원
-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 불응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 시군 보건소 등 방역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4. 구성

- 민생특사경 중심(8팀 125명) 및 분야별 전문가(의료, 보건, 방역, 법률 등 5명)
- 경찰청(2청, 43개 관서)과 핫라인 구축



5. 주요 활동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 성인게임방 '행정명령(사용제한) 이행여부' 방역 점검
- 종교시설 '밀접집회제한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 점검 지원
- 다중이용시설(클럽) 행정명령 이행여부 도-시군-경찰 합동점검 지원







4
민관협력의 '긴급대책단'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여 '긴급대책단'을 구성했다. 도 및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긴급대책단'은 경기도의 방역정책에 대해 함께 협의하면서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상황들을 알리는 대민소통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 정책 생산 및 의료 관련 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했다.

●○ 민관협력 '위기대응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17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방역본부를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로 확대했다. 민관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도 보건건강국장이 센터장을 맡고,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이희영 단장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시·군 대응지원단' 및 '의료기관 대응지원단'을 운영했다.

위기대응센터는 각종 현황 분석 및 긴급대응 정책마련과 함께 도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상 배정과 조정, 보건소 상담지원(24시간), 환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분류, 역학조사 출동지원 등 방역본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 긴급대책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경기도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3일 위기대응센터를 행정1부지사 직속의 민관협력체인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으로 확대·운영했다. 긴급대책단은 코로나19의 범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보건건강국장 등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시군 대응 지원팀(도내 보건소 지원, 대규모 선별진료센터 운영, 역학조사) ▲환자관리 기획조정팀(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 병상 확보 및 자원관리, 확진자건강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보건의료체계 대응팀(응급환자 의료전달체계, 비응급환자 의료전달체계 요양/정신병원 등 선제적 예방) ▲데이터 관리팀(환자 및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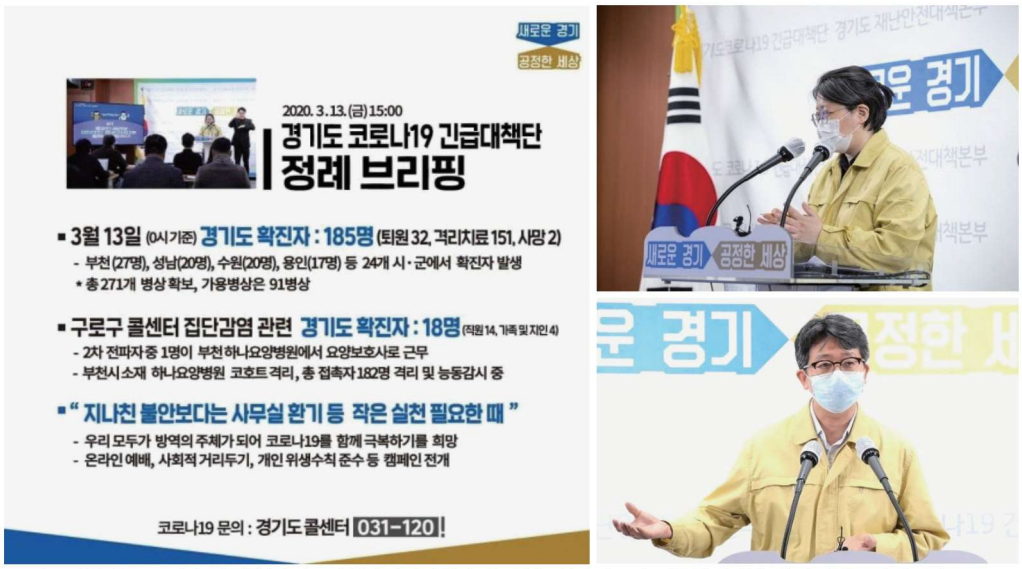
긴급대책단은 코로나19의 일일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대응방향에 대해 함께 협의 지원하는 한편, 월·수·금 주 3회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민소통의 역할까지 감당했다. 전문 의료인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고 대응사항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불필요한 불안을 잠재우면서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긴급대책단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 교수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으며, 임상의학자와 기초의학자는 물론 보건소장, 감염관리간호사 등을 망라한 총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갖고 경기도의 대응정책 생산을 돕고, 환자분류 및 격리병상 배정 조정 등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확대하여 3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웹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웹 세미나는 경기도 내 각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주 청중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했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가 축적한 의료 전문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Webinar는 코로나19의 정확하고 빠른 대응 및 의학정보 교환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화상통화로 진행했다.

3월 26일 제1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1st COVID-19 Webinar in Gyeonggi)가 열린 데 이어서, 4월 2일 제2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 4월 9일 제3회 코로나19 경기 웨비나(3rd COVID-19 Webinar in Gyenoggi)가 열린 바 있다.



▶ 긴급대책단 공동의장 이희영(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의 정례브리핑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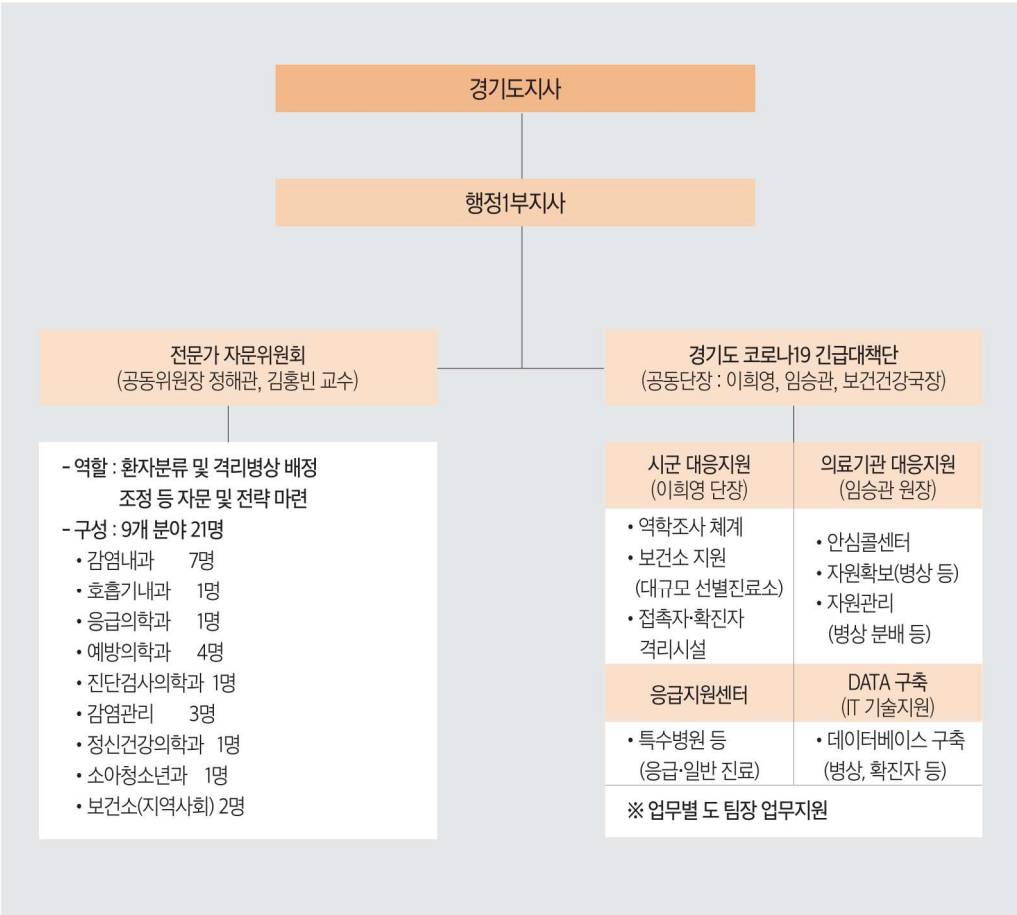
긴급대책단

1. 운영 기간 : 2020. 3. 3. ~ 상황종료 시

* 재난대책본부 내 위기대응센터를 확대 · 운영

2. 구성 : (공동단장)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도 보건건강국장
(조직) 시군 대응 지원팀, 의료기관대응지원팀, 응급지원센터팀,
DATA 구축팀 등 4개 팀 100명으로 구성

3. 조직도



4. 주요 역할

- 코로나19의 일일 발생현황 점검
- 경기도의 대응방향에 대해 함께 협의 지원
- 월 · 수 · 금 주 3회 정례 브리핑을 통한 대민소통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갖고 경기도의 대응정책 생산 지원, 환자분류 및 격리병상 배정 조정 등 자문 역할 수행

5
수도권 협력 네트워크

서울시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시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에도 병상자원 확보와 운용에 대한 공동 논의를 제안하고 협력했으며, 5월 9일에는 수도권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운영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경기도는 서울시 및 인천시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동방역 네트워크를 유지했다. 지역적으로 인접한 데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공동방역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017년 3월 감염병 발생 시 수도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정보 공유로 공동대응체계 유지 ▲인적·물적 지원 협의 등이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이송·치료 협력 등의 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공동방역을 실시했다.

●○ 서울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에 수도권 공동대응

3월 서울시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은 수도권 공동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그 대응을 위해 3월 10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공유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공동대응해 나갔다. 그리고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공동방역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공동으로 강화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재택 및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의무적 실시, 화상회의 의무적 실시를 추진했고, 민간부문에서도 재택 및 유연근무제 동참, 화상회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체육계 행사 중단 및 시설폐쇄, 종교계 행사 중단, 대규모 집회 자제, 개학 연기 및 학원 휴업 등을 함께 추진했다.

또한 도는 선제적으로 시행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동참, 출퇴근 시간 승객 혼잡도 개선을 위한 한시적인 증차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의료자원 운영 등에 서로 협력

3월 30일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경기도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병상자원 확보와 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기관이지만 그 영향은 서울시도 같이 받기에 수도권 공동방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의 부담뿐 아니라, 병원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면서 발생하는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는 인천시, 서울시와 중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자원 확보 및 중증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 논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갔다. 특히 간병인·퇴원자 명단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포함)에서 자가격리 및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의정부 성모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응급환자 등을 서울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조를 구했다.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가동

5월 9일에는 수도권 확진자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은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상 공동대응이 필요했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 등이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6월 5일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한 후 8월 15일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됐다. 우선 1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1·2단계)는 사전준비 단계로 각 지자체가 거점전담병원(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지정)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확진자를 배정했다.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시점(3·4단계)에는 24시간 이내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환자분류반'을 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인근 환자들을 배정했다.

통합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했다.

또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역할 분담

기관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지휘 총괄 – 확진자 · 병상 · 의료자원(인력 및 장비) 현황관리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 지역별 초과 확진자에 대한 타 지역 입원배정 · 이송 요청(→소방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수도권 통합환자분류반 운영 협조 – 시 · 도 병상현황 보고 및 신규 확진자 관리, 병상배정 요청(→통합환자분류반)
소방청	• 중증 확진환자 이송 및 구급차 배정 지원



6
유관기관과 원팀체제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하나의 팀이 되어 방역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의 방역활동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을 일선에서 도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운영하면서 학생 안전 및 방역에 주력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40,703,000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 유관기관들 하나로 모아

경기도는 보다 철저하고 원활한 방역을 위해 행정·교육·경찰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11일에 선제적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에 공감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방역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갔다.

또한 경기도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강할 때에 유관기관들을 '유관기관협조반'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제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관기관협조반에 참여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평택항만청, 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5개 기관이었다. 각각 담당한 역할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평택항만청은 평택항 유입 중국인 방역 추진사항 등 파악, 지상작전사령부는 군 의료인력 및 시설지원, 군병원 활용 등 협조, 대한적십자사는 민간 자원봉사 장비 및 인력 지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안전사항 관리 등이었다.

●○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경기도의회는 1월 30일 집행부(경기도·도 교육청)와 상황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도 의회 차원의 효율적이고 응집력 있는 감염방지 대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비상대책본부는 1월 31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본부장 아래 15명의 비상대책 위원으로 이뤄진 '비상대책단'을 구성했고, 부의장·대표의원·상임위원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었다.

'비상대책단'은 2월 3일부터 매일 일일상황 회의를 개최하여 5월 22일 기준 총 339건을 건의하고 202건이 추진완료됐다. 5월까지 총 6회의 비상대책본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시·군 민간검역관 배치, 전염병 확산 대비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강조, 마스크 수급방안 마련 촉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힘껏 도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들고 지친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2월 17일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및 이천농산물 구매운동, 2월 19일 전통시장 방문 및 매출 올려주기, 3월 9일 코로나19 극복 "Again 1998, 힘내라! 대한민국!" 모금 운동을 했다. "Again 1998, 힘내라! 대한민국!" 모금 운동은 1998년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단결된 힘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자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 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335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에 전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결정에 대해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더민주, 부천1)은 3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신속하게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힘을 실어 주고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

경기도의회

- 1월 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활동 시작
- 일일상황 회의 개최
  5월 22일 기준 총 339건을 건의, 202건 추진완료
- 11월까지 총 11회의 비상대책본부 전체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점검
- '덕분에 챌린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
- 릴레이 헌혈운동 및 이천농산물 구매운동, 전통시장 방문 및 매출 올려주기,
  "Again 1998, 힘내라! 대한민국!" 모금 운동 등 추진
-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 경기도의회 홍보활동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학생건강과 학생보건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했다. 그 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7월 23일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구성·운영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은 교육행정직 5급, 6급, 7급 각 한 명씩과 간호직 7급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며, 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안에 별도 팀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상황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팀을 신설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급대응담당팀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또는 조기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성금 4천여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성금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2,262명이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총액은 40,703,000원이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였다.

●○ 소방재난본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은 막중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부터 광복절 이후 재유행 사태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전담했다. 또한, 초기 대구에서 발생한 판데믹 사태에 경기도소방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후 발생하는 경기도의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자 인천국제공항에 인력수송 버스 및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국외 도민의 입국부터 대민 서비스를 시행했고,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전담 의료기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구조구급반을 설치하여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했고, 경증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전담 소독하여 확진자 이송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업하여 경기도에 배치된 음압구급차 3대를 활용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했으며, 타 시도에는 없는 섬세한 이송체계를 최초로 구축했다.

▷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자원 투입 현황(2020.8.31 현재)

1. 구급차 투입 현황 : 총 259대

총계	특수구급차	음압구급차	코로나9 전담구급차	음압형 이송장비	스팀 멸균소독기
259대	181대	3대	75대	135점	40점

2.구급대원 동원 현황 : 총 1,912명

합계	구급대원 자격		구급 관리요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12	22	13	7	42	1,151	542	56	79

3. 119구급대 코로나19 이송 실적

계	유증상자		확진자 이송	검체 이송	응급 상담
	일반	학생			
80,314	76,722	1,395	2,186	11	712

4. 소방재난본부 생활치료센터 및 인천공항 지원 실적

구분	시설명	지원
생활치료센터 (5개소)	(道 운영/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 종료	1개 소방서 19명 지원
	(道 운영/용인) 기아 오산교육센터 / 종료	6개 소방서 25명 지원
	(道 운영/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	6개 소방서 31명 지원
	(道 운영/고양)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6개 소방서 29명 지원
	(道 운영/안성) KSA 인재개발원 / 종료	4개 소방서 19명 지원
	(중수본 운영/안산)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5개 소방서 42명 지원

7
의료기관과 전방위적 협력 네트워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민관협력의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는 5월 14일 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을 통한 중환자 진료 기능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또한 도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공식 협조 요청을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월 27일 도지사 주재로 '도내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9일 행정1부지사 주재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20일에도 도지사 주재로 '민간종합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또한 상급 및 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월 29일 1차 요청(상급·종합병원 4개소), 3월 3일 2차 요청(종합병원 6개소), 3월 20일 3차 요청(상급·종합병원 10개소), 3월 30일 4차 요청 (종합병원 20개소) 등 수차례에 걸쳐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협조 요청을 해온 것이다.

동시에 병원 측이 진료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느라 실질적인 비용 발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소요비용을 도내 민간종합병원 11개소를 대상으로 1억 원씩 총 1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치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8일 도는 '경기도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도내 종합병원 진료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병상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여, 전국 최초로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것이다. 도, 경기도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도내 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진료네트워크'는 5월 14일 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을 통한 중환자 진료 기능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인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진의 헌신이 방역전선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료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1.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운영



2. COVID19,비상진료체제 운영

- 단계별 비상진료계획 수립
- 선별진료소 운영
- 병원 일반환자 입원・외래기능 폐쇄
  (포천/산부인과 및 분만실 지속 운영, 의정부/정신병동 지속 운영)
-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진료 실시
-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 운영
-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 경기도 코로나19 정신응급대응체계 운영
- 귀국 교민 코로나19 출장검사 전담 실시
- 경기도 내 기업체 단체 출장 선별진료

"경기도는 공공 의료기관 숫자가 적고, 병원 규모가 작아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 집단환자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갔다."

– 임승관 긴급대책단 공동의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3. 코로나19 대응전략 수립



코로나19 비상 진료계획 수립
코로나19 확산속도에 따른 단계별 운영 계획 수립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본부 및 6개 병원 비상대책반 구성 ·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 장비 구축
감염격리병동 스크린 도어, 음압기기 등 시설 · 장비 설치

코로나19 대응을 특별교육 실시
보호복 착용, 환자 이송, 병동 소독 등 코로나 대응 교육 실시

4.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8
경기도의 첨단기술, 세계를 밝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경기도의 첨단기술이 빛을 발했다. 유버(주)의 살균로봇,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환자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동시에 진료하는 명지병원의 '듀얼트랙헬스케어' 등의 첨단기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것이다. 또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녹십자의료재단,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등은 뛰어난 진단 검사 역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어해 주었다.

●○ 세계 최고 검사역량, 용인시 'SCL서울의과학 연구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월 7일 공개한 코로나19 진단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 명단에는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경기도의 8개 의료기관과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녹십자의료재단,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등 4개 수탁검사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 용인의 'SCL서울의과학연구소'는 뛰어난 검사역량을 인정받아 해외로부터 검체 조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핀란드로부터 1만8,000개의 검체 조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한 것. 핀란드는 인근 에스토니아 등에도 검체를 보낸 바 있지만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 검체를 담은 박스를 실은 항공기가 10시간 이상 걸려 한국으로 날아와 검사를 맡겼다. 코로나19 검사의 실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핀란드의 마지막 SOS – 중앙일보 4.6.일자

●○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완전 분리 및 동시 진료, '듀얼트랙헬스케어'

코로나19와 일반 환자를 완전 분리해 동시에 진료하는 명지병원의 '듀얼트랙헬스케어 시스템(Dual Track Healthcare System/DTHS)'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적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보건감염학회의 국제학술지인 병원감염저널(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10월 1일 자에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병원 교수진이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급성기 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지속제공' 이라는 논문이 게재된 것. 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의 선도주자인 명지병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하면서 일반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증 및 응급 환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의 진료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명지병원 고유의 의료자원 배분과 활용 원칙을 골자로 하는 소위 '듀얼트랙헬스케어시스템(Dual Track Healthcare System/DTHS)'의 선제적 운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듀얼트랙헬스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에 대해 2대 8의 비율에 맞추어서 배분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그 핵심은 ▲독립된 건물을 이용한 철저한 공간적 분리 ▲의료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관리 ▲검사확정 전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병원 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입원선별병동, 폐렴감시병동 등)의 활용 ▲24시간 제공된 병원 내 RT-PCR 확진검사 진단체계 ▲전 의료진이 실시간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코로나 환자와 완벽하게 구분된 일반 환자 진료체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었고, 신속 검사와 버퍼존, 음압 수술실 운영 등 완벽한 시스템이 병원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10월 1일, 명지병원 병원감염저널 게재(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 아주대의료원, 코로나19 치료제 '랄록시펜' 개발 추진

코로나19 검사역량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아주대의료원이 임상시험 주관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랄록시펜(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추진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아주대의료원이 임상시험 주관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랄록시펜(골다공증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서를 10월 8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4월 발족된 '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활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수립하고 5개월 동안 실시한 전임상시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임상시험 준비를 마쳤다. 임상연구협의체에는 아주대의료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이 참여했다.

●○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전사적 추진

'랄록시펜' 개발에 나선 아주대의료원 및 '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뿐만 아니라 GC녹십자 계열회사도 전사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진단시약부터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 예방 등까지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우선 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최고수준의 수탁검사기관으로 2월 초부터 코로나14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 매일 2,000~3,000건의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검사역량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외국 언론매체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그밖에도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국책과제 공모를 통해 백신 개발에 나섰다. 백신 개발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생기는 단백질 중 후보물질을 발굴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하는 '서브유닛 방식'이다. 서브유닛 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활용한 약독화 백신과 달리 단백질을 활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다.
또 GC녹십자엠에스는 POCT 분자진단 전문 개발 기업 엠모니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Isopollo COVID-19'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의료 선진국을 타깃으로 DNA 중합효소 기술을 활용한 초민감도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살균소독 로봇 등 첨단로봇을 방역현장에 활용

경기도는 방역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언택드 시대에 발맞춰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통한 비대면 로봇 서비스 기술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은 특화분야 관련 로봇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선 5월에 비대면 살균소독 로봇 개발 업체 유버(주)와 전기차 충전로봇 개발 업체 ㈜에바를 선정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했다. 특히 99.9%의 살균력을 자랑하는 유버(주)의 'UV LED 살균로봇'은 여러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서 활용되어 비대면 방역에 크게 기여했다. 유버(주)의 'UV LED 살균로봇'은 로봇이 3D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해 LED 광선으로 살균 처리를 하고, 살균 처리 후에는 몸체를 셀프 살균하는 기능까지 갖춰 안전하고 효율 높은 방역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기업인 ㈜에바는 자율주행시대에 맞춰 '이동형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에바의 로봇은 카메라 센서가 특정 위치에 부착된 이미지 마커를 인식해 거리/각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GPS 신호가 없는 실내 공간에서도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가 어플로 충전을 요청하면 로봇이 자동차로 다가와 알아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 유버(주)의 '살균로봇'



▶ ㈜에바의 '이동형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로봇'

●○ AR화상 수출상담 지원 등으로 경제방역 선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과 화상 시스템을 대거 도입하는 등 언택트(비대면) 기반의 '경제방역'을 선도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도내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언택트 중심의 기업활동 지원은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 찾아가는 글로벌 전시회 지원사업, 비대면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등이 핵심이다.

우선 6월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 빌딩 1층에 수출기업을 위한 '디지털 무역상담실'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출기업들은 8개 상담실에서 경기도의 해외통상사무소인 세계 각국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주선한 해외 바이어와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7월과 8월에는 150개 도내 기업과 인도 러시아 등 100명의 해외 바이어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GBC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했다. 9월에는 베트남과 태국 바이어 100명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아세안데이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열었다. 앞으로도 화상상담실 구축으로 현지 파견 예정이었던 시장개척단을 화상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AR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제품소개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글로벌 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하는 AR화상 수출상담

9
경기도의 10대 제안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다양한 제안 및 건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온 국민에게도 필요한 정책이었기에 경기도의 제안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폐렴환자 전수조사, 확진자 상세동선 공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특히 확진자 상세동선 공개는 방역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혼란을 방지해 준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안 1. 마스크 매점매석 강력 조치 요청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 뽑아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매점매석 금지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월 30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마스크 유통 혼란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정부 건의를 하는 동시에 도 차원에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강력한 현장점검 및 적발을 통해 도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시켜 나갔다.

정부는 경기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월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제안 2.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청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마스크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서 마스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월 31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

마스크 대란으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과 유통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 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해나갔다.

정부는 2월 12일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는 판매 내용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제안 3. 공적마스크 판매량 90%까지 확대 요청

"전체 생산량의 50%로 지정한 공적판매량을 90%까지 늘려 주십시오.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에서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적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서 누구나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월 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려면 정부의 가격 통제 및 공적판매량 증가 조치가 필요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공적판매량을 50%가 아니라 90%까지 늘리고, 마스크 최고가격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마스크 최고가격을 정해서 과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적판매량을 늘려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1월 31일에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최고가격 지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 3월 3일에 마스크 대란 해결 조치에 대해 거듭 재요청한 것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 기 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용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건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가격인상 의심 사례 >

가.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나.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다.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

3. 따라서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사인)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redacted] 소비자권익팀 장 [redacted] 공정국장 [redacted] 전결 2020. 1. 31.

협조자

시행 공정소비자과-1483 (2020. 1. 31.)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 (매산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redacted] 팩스번호 [redacted] / [redacted] / 대국민 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경기도가 말하는 '마스크 대란' 해결!

-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상품 지정**
  마스크를 매점매석 금지 상품으로 지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천정부지로 뛰는 마스크 값을 잡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을 지정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과다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 등 시장에서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마스크 공적판매량 90% 이상으로 확대**
  우체국, 농협,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현장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공적판매를 대폭 확대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제안 4. 폐렴환자 전수조사

"경기도에서는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폐렴환자 분들을 전수조사하여 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를 해준다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코로나19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시

경기도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월 5일부터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환자는 64명으로 확인됐고 의사 판단에 따라 4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서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제안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3월 9일~3월 13일 시행했다.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 음압병상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과 함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경기도의 모범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도 노력하겠다."

– 2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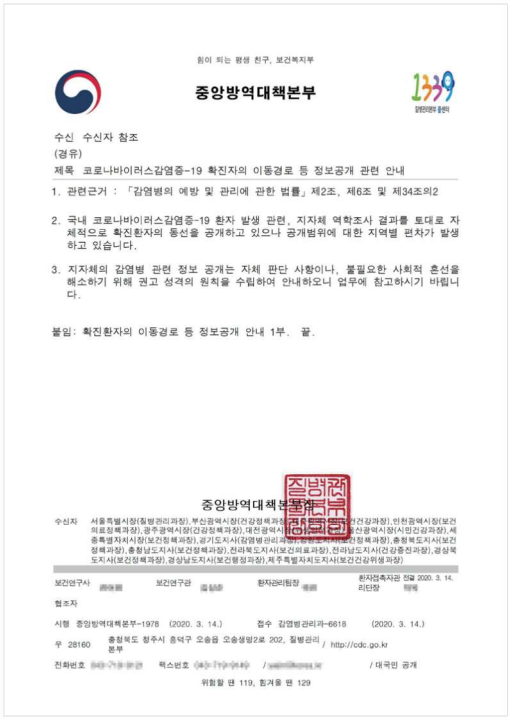
제안 5. 확진자 상세 이동경로 공개

"확진자가 OO지역에 갔다고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니 그 지역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세부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 전 국민에게 확진자의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 확진자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 2월 8일, 이재명 도지사 건의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도내 확진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동경로를 상세히 공개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3번 확진자의 경우 정부에서는 "고양시 지역의 음식점 이용"이라고만 공개했지만 도에서는 확인 결과 "1월 24일 금요일 14시경 일산 소재 본죽 정발산점, 16시 식사동 스타벅스 일산식사점 방문" 등으로 상세히 공개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제안에 따라 확진자의 상세 이동경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3월 14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공문'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1339 감염병관리 콜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및 제34조의2

2.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발생 관련,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원칙을 수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1부. 끝.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질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illegible]건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illegible]건강증진과장), 울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illegible]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연구사 [illegible] 보건연구관 [illegible] 환자관리팀장 [illegible] 환자접촉자관 전결 2020. 3. 14. 리단장 [illegible]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978 (2020. 3. 14.) 접수 감염병관리과-6618 (2020. 3. 14.)

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 http://cdc.go.kr

전화번호 [illegible] 팩스번호 [illegible] / [illegible] / 대국민 공개

위험할 險 119, 함께할 協 129

제안 6. 드라이브 스루 야외선별진료소 제안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대규모 야외선별진료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민들의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 2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세종시와 고양시가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야외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의 적극적 설치와 실시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함에 따른 것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대규모 야외선별진료소 설치를 제안한 것. 드라이브 스루는 맥도날드 등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방식으로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음식을 구매하는 것처럼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스 스루형 야외선별진료소를 보급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과 검체 채취까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대일 대응 후 다시 소독하고 쓰던 물건들을 폐기 처분한 후 새롭게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환자 직접 대면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도 방지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3월 7일 경기남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P4)에 드라이스 스루 야외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데 이어, 3월 8일 경기북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주차장에서도 드라이스 스루 야외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도 드라이브 스루 야외선별진료소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제안 7. 간이 진단키트 한시적으로 긴급사용승인 요청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산업 및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그러한 손실 없이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진단키트는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사전조사용으로 짧은 시간 내 확진자를 우선선별 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간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비용이 1만~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 대규모 검사가 가능해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1월 12일 의료용 1종 신속항원검사키트에 대해 국내 정식승인을 결정했다.



제안 8. 격리해제, '검사' 에서 '증상' 기준으로 변경

"부족한 병상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서 격리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긴 격리기간 때문에 병상회전율이 나빠지고 더 시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6월 17일, 경기도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6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평균 격리기간은 약 4주인데, 치료가 끝나가는 시기에는 대부분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이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의 체력 소모도 심각하고 병상회전율도 나빠져서 중환자 진료에 위기가 초래됐다. 이처럼 격리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서 격리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검사 기반의 기준에 따르면,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코로나19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일 때에야 격리해제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사'가 아니라 '증상'을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제안한 것이다.

제안 9.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므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월 16일,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4월 9일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일제히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지급을 결단한 것이다. 또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도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4월 3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하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소수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서민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안 10. 전 국민 1인당 3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월 2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8월 24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8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연구원이 말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소득 2.7% 증가

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가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기로 전환됐다.

매출 29.9%까지 증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2차 재확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의 필요성도 커졌다. 도는 2차 대유행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으나 가능 재원을 고려할 때 자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와대 및 총리실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했다(8. 24.). 그리고 정부는 추석 전 4회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결정했다(9. 22. 국회 의결).



II 보건방역

선제적이고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1 선제적 방역 조치 90
2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 단속 113
3 신천지 사태와 긴급 행정명령 118
4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125
5 사회적 거리두기 7대 전략 129
6 전국 최초 최첨단 설비 갖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133
7 집단감염 대응과 행정명령 137
8 초유의 개학연기 및 긴급돌봄 156
9 가정같이 편안한 생활치료센터 165
10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173
11 해외입국 도민무료검사 및 공항서비스 178
12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181
13 '위험도 사전평가'로 행사 안전관리 184
14 따뜻한 방역, 착한 기부 188

10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173
11 해외입국 도민무료검사 및 공항서비스 178
12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181
13 '위험도 사전평가'로 행사 안전관리 184
14 따뜻한 방역, 착한 기부 188

1
선제적 방역 조치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질병관리청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됐으므로 다행히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었고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에 대해서는 능동감시가 진행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긴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G방역의 시작

●○ 행정1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

도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17시 30분 행정1부지사(김희겸) 주재로 각 시군 부단체장 긴급대책회의(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 조치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사회 불안, 경제적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특히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국내 설 연휴(1월 24일 ~ 27일)는 물론 중국 춘절(1월 24일 ~ 30일)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단계별 비상조치와 능동적 감시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시군별 선별진료소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경우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 주의, 감염 위험 있는 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 접촉 자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중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도민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나갔다.

●○ 시군 44개 보건소장 긴급 영상회의

도는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서 이틀 후인 1월 22일에 도 시군 44개 '보건소장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시군별로 선별진료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경기의료원 6개 병원(수원·이천·파주·안성·포천·의정부)에서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병원별 선별진료소 설치에 나섰다. 수원·이천·안성·포천병원은 응급실격리병실, 의정부병원은 응급실, 파주병원은 격리외래진료소를 선별진료소로 지정해서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환자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담당하도록 했다(6개 병원 선별진료소 설치 및 수원·이천·안성의 국가지정 수준의 격리병상 14병실 14병상).

아울러 직접 내원할 수 있는 환자에 대비해서 출입구마다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진료 접수 시 중국 우한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경기의료원에는 국가지정수준의 음압격리 14병실(수원2, 이천4, 안성8)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를 감염병 확산 시 격리병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 중단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G방역 매뉴얼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G-방역⁺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회복지 G-방역⁺ 운영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방역에 활용할 수 있는 총괄편과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편으로 구성됐다. 총괄편에는 시설 운영 시 준수해야할 기본 방역 수칙과 주체별 역할 등이 수록되고, 실무편은 영역별 사업 운영 시 대응 매뉴얼, 비대면 치료.교육 프로그램 등 복지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설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총괄편 및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G-방역⁺ 운영 매뉴얼을 시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 시설 분야로 매뉴얼을 마련해 확대 배포해 나갔다. 이것은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 도지사 주재 '비상대책회의'

설 연휴를 앞둔 1월 23일 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1부지사, 안전관리실장, 보건건강국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고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선제적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서 도지사는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시찰하고 음압격리 병실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 행정1부지사 주재 실 · 국장 및 시군단체장 회의

설 연휴 첫날인 1월 24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1부지사 주재 관련 '실·국장 회의'와 '시군단체장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코로나19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재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안산시와 평택시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산시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고, 평택시는 중국 춘절 이후에 평택항 여객선으로 중국인 대거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감지기 등이 노후화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1급 감염병 수준의 능동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설 연휴기간 '방역대책반' 운영

도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 간 이동 및 중국 방문객 증가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방역대책반'을 운영했다. 도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방역대책반 운영에 이미 들어갔었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근무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설 연휴기간 동안 방역대책반은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2개반 7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개반 16명, 보건소 44개반 88명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상근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유지, 감염병 신고(1339) 및 예방·홍보강화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각 시군이 도에 보고(15:30까지)하고 도는 즉시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도록 했다(16시). 발생이 없는 경우 제로(Zero) 보고를 실시하고 당일 일보 이후 발생 건은 익일 보고했다.

●○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현장 중심 종합대책 마련

1월 2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도지사 외에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보건건강국장, 경기도의사회보험이사,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군포시 보건소장 등과 국군수도병원 감염관리실장,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명지병원 이사장, 경기도병원회장 등 주요 관련인 12명이 참석했다.
"민·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코로나19 조기확산을 방지한다."는 도지사의 기본방침하에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의심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유증상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지정기준에는 응급의료기관급 이상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격리 진료·검사 공간 확보, 폐렴 확인을 위한 이동식 X-ray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 역학조사 교육을 수료한 민간 역학조사관을 신속하게 임명하여 향후 감염 확산에 대비하도록 했다.

간병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외국인 종사자 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례를 보건소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최근 14일 이내(1월 13일 ~ 27일) 중국을 방문한 도 및 공공기관 직원 현황을 조사해 해당직원이 있다면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재택근무) 조치하기로 했다.

도 내 모든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는 물론 각 시군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G버스, 경기도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당시 2월 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2~3월에 예정되어 있던 도 주최 행사는 축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우선 방역대책비로 긴급 투입하여 보건소에 방역용품, 손세정제, 위생용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방역대책을 마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스·택시업체를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승객들을 위한 손세정제를 차량 내에 상시 비치토록 했다.

▷ 현장 중심의 방역 조치 논의

1. 대응 분야
   - 선별진료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 민간 역학조사관 임명(역학조사교육 수료자)
2. 예방 분야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도, 공공기관 직원 현황조사 후 무급휴가 조치
   - 보건소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의료인 등) 대상 중국 방문 등 전수조사
   - 선별진료의료기관에 N95 마스크 지원
   - SNS, G버스, 전화 음성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추진
   - 중국인 밀집지역 특별 홍보 추진(인터넷 커뮤니티, 다문화센터 활용 등)
   - 2~3월 도 주최 행사 축소
3. 정보 공개
   - 코로나19 현황(이동경로, 접촉 인원 등 주요 상세사항) 공개

"민·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초기에 방지해야 한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여 총력 대응하라!"

– 1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 · 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선제적 역학조사관 임명

●○ 1차 민간 역학조사관 투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29일 전문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6명의 민간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6명의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및 역학적 연구방법, 감염병 종류 및 발생유형별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 실습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등 현장 역학조사 실무를 수행했다.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실시, 코로나19 사례정의에 의한 의심환자 분류 등 현장 역학조사 실무 수행과 기술지원은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경기도의 기존 역학조사관은 총 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6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역학조사관 임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의료인 중 역학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 **임명대상** : 역학조사관 6명

- 감염병 및 역학적 연구방법, 감염병 종류 및 발생유형별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 실습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주요업무** : 도 감염병 역학조사 수행 및 기술지원 등

-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실시
- 코로나19 사례정의에 의한 의심환자 분류 등

●○ 2차 민간역학조사관 대거 투입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3월 4일 시군 공중보건의사(한의사, 치과의사) 59명을 도 역학조사관으로 대거 추가 투입했다. 이들은 임명 즉시 31개 시군에 투입됐는데,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는 해당 시군의 공중보건의사 34명을 역학조사관으로 배정했으며 기존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14개 시군에 25명을 배정했다.

새로 투입된 역삭조사관은 평시에는 시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다가 확진자 발생 시엔 도 요청에 따라 해당 시군의 심층역학조사 및 현장대응을 지원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체크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그 뿌리를 뽑아내는 역학조사에 감염병 확산 방지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확산도 차단할 수 있었다.

○ **임명대상 :** 시군 공중보건의사 59명

- 소속 시군의 공중보건의사를 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 : 17개 시군 34명
- 기존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시군에 역학조사관 배정 : 14개 시군 25명

○ **주요업무 :** 시군 확진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심층 역학조사) 활동

* 업무지원 요청 전까지는 본연의 업무 수행

재난관리기금 긴급 집행!

●○ 재난관리기금 시군 지원

1월 28일 민·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비상대책 마련과 동시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방역대책비로서 긴급 투입한 경기도는 본격적으로 방역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1월 30일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에 1억 원씩, 소방재난본부에 1억200만 원 등 모두 30억2백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평택시에 긴급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까지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은 총 373억 원에 달했다. 각 시군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은 방역용품, 손세정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소방재난본부에 지원한 기금은 증상환자 이송 등 119구급대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독티슈, 멸균시트,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이 외에도 진단시약구입, 생활치료시설, 청소방역 등 운영경비 등에 긴급 조치를 위한 응급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다. 이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선제적 기금 지원을 통해 시군이 필요 물품을 구매하여 보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이후로도 도는 도내 시군의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갔다. 수원, 부천, 구리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2월 6일 이들 지역에 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했고 이어서 2월 10일 시흥시, 이천시에 7억 원, 2월 24일 31개 시군에 45억 원, 3월 4일 5개 시군에 5억 원을 지원했고, 373억 원 이외에도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3,857억 원 상당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다.

또한 개방성과 투명성에 바탕을 둔 3T(Test, Trace, Treat)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량의 진단키트 구매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임시거주시설 등의 운영 및 경기도의료원의 확진자 격리치료, 소방 구조구급 활동 등 코로나19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는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위해 냉방장치가 설치된 워크스루용 검체 채취 부스와 휴게공간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총 29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7개 보건소에 워크스루 검체 채취 부스 33개를, 16개 보건소에는 에어컨 설치 컨테이너 26개를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난관리기금의 신속 정확한 집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코로나19 대응이 전방위적으로 민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에 대한 광범위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금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영 제75조의2)이 4월 신설될 수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분들에게 보낸 메시지

●○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지자체 지원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심각해지자 재해구호기금 50억 원(대구 40억 원, 경북 10억 원)을 활용하여 도 특산품 자가격리 키트,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역 간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출입이 제한되는 자가격리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구호지원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78억 원을 시·군에 긴급 교부했다.

개별구호물자와 도 특산물 키트 신속 지원 행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다.



▶ 대구 · 경북지역 도 특산품 자가격리 키트 지원



▶ 도 특산품키트 구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군 재난관리기금 지원 현황

(2020. 9. 29. 현재 / 단위 : 백만 원)

교부일자	교부금액	지원 시군	비 고
계	401,595.5		
2020. 1. 28.	600	고양시, 평택시	확진자 발생 시군
2020. 1. 30.	2,900	수원시 등 29개 시군	선제적 대응
2020. 2. 6.	600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확진자 발생 시군
2020. 2. 10.	700	시흥시, 이천시	확진자 발생 및 격리시설
2020. 2. 24.	4,500	수원시 등 31개 시군	대구 · 경북 확산, 선제적 대응
2020. 3. 4.	500	수원시 등 5개 시군	중국 유학생 운송대책 지원
2020. 4. 9.	385,700	수원시 등 31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2020. 6. 9	2,900	수원시 등 31개 시군	시군 선별진료소, 격리시설 지원
2020. 6. 12	3,195.5	수원시 등 30개 시군	영업정지 소상공인(유흥업소)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군 재해구호기금 지원 현황

(2020. 9. 29. 현재 / 단위 : 백만 원)

교부일자	교부금액	지원 시군	비 고
계	12,766		
2020. 3. 3.	120	과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차)
2020. 3. 12.	5,000	타 시 · 도(대구, 경북)	도 특산품키트, 마스크 등
2020. 3. 13.	10	시흥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2차)
2020. 3. 16.	28	화성시, 안산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3차)
2020. 3. 17.	200	31개 시군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도 특산품키트)
2020. 3. 20.	23	수원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4차)
2020. 3. 27.	35	광주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5차)
2020. 4. 3.	8	시흥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6차)
2020. 4. 6.	168	구리시, 수원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7차)
2020. 4. 13.	497	파주시 외 5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8차)
2020. 4. 22.	399	수원시, 성남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9차)
2020. 4. 22.	291	30개 시 · 군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2차, 도 특산품키트)

교부일자	교부금액	지원 시군	비 고
2020. 4. 29.	201	안양시 외 3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0차)
2020. 5. 8.	266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1차)
2020. 5. 25.	213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2차)
2020. 6. 2.	960	수원시 외 4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3차)
2020. 6. 7.	109	광주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4차)
2020. 6. 16.	260	남양주시, 연천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5차)
2020. 6. 23.	326	안양시 외 4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6차)
2020. 6. 30.	150	화성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7차)
2020. 7. 7.	1,020	고양시 외 5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8차)
2020. 7. 29.	1,482	수원시 외 9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9차)
2020. 9. 1.	1,000	성남시 외 8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20차)

※ 2020. 4. 9. 재난기본소득 지원(2,285억 원)

진단기법 개선, 소요시간 단축

●○ 진단 소요시간 단축, 1~2일 → 6~8시간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속 정확한 진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기존의 진단법을 훨씬 뛰어넘는 효율적인 진단법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최전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1월 2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외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병 검사에 숙련된 감염병 분야 5개팀 인력을 총동원하여 실험실검사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1월 26일 경기도 내 첫 확진자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 1월 27일 평택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코로나19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eal-time RT-PCR)'을 1월 3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일반유전자증폭검사법(conventional RT-PCR)'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 다른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대 1~2일의 검사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된 검사법은 6~8시간 이내에 확진이 가능해 도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1일 검사가능 건수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폭증하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핵산추출 장비와 실시간유전자 분석장비 등을 추가 구매하고 효율적인 검사처리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구축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도, 시군보건소, 질병관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속진단 검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 집단감염 진단, 획기적으로 효율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을 도입하여 코로나19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 데 이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검체취합

검사방법(풀링검사, pooling)'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풀링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대상이 모두 음성이면 그대로 통과, 양성이 나올 경우 해당 집단만 따로 개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던 군포시(효사랑요양원), 의정부시(성모병원) 등 도내 요양병원 30곳의 간병인, 종사자, 입원환자 3,979명을 풀링 검사 방식으로 검사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포천시로 확대하여 63개 요양병원 7,721명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진단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해 최신장비를 보강하여 이태원 클럽 등 집단감염에 의한 폭증하는 검사량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코로나19 보건방역이 힘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세계적 유행(pandemic)에도 코로나19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진단 시스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정확한 진단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원인병원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37종, 65개 검사법에 대한 정도평가 참여하여 신뢰성 확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운영



코로나19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을 설치 · 운영하여 생물학적 위해로부터 실험종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실험환경, 지역사회의 안전성 확보

자동화 진단기기 보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최대 검사 가능량을 늘리기 위한 핵산추출장비와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등을 다수 보유하고 효율적인 검사처리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수도권 실험실 검사 협력체제 구축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시 증가할 수 있는 실험실 검사수요에 공동 대응

자체적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복지시설, 휴양림 등 대대적 휴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경기도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 있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 있어 우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62곳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했다. 이는 도내 확진자 추가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서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자체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경기도 전역에 대한 임시휴관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임시휴관 권고 대상시설은 노인복지관 62곳, 장애인복지관 36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장애인체육시설 4곳, 노숙인자활사업장 7곳 등 총 1만62곳이다. 이들 시설의 하루 이용인원은 73만4,374명에 달했다. 임시휴관 기간은 시장·군수가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상황, 시설 운영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시설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 예방 기본수칙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종사자 외 불필요한 외부인의 방문을 자제시켰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62곳에 대한 임시휴관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팔당전망대 휴관을 결정하고, 남양주 축령산자연휴양림, 가평 강씨봉자연휴양림, 오산 물향기수목원,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가평 잣향기푸른숲 등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내 산림휴양시설 5곳 등을 임시휴관 조치했다. 팔당전망대는 팔당호의 전경과 팔당댐, 남한강, 북한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연간 7만 명이 찾고 있는 다중시설로서 휴관기간은 2월 21일부터 별도 지정일까지였다.

축령산자연휴양림 등 5곳의 산림휴양시설은 경기도가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심신안정,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연간 76만 명이 이용하며, 휴관기간은 2월 24일부터 별도 지정일까지로 했다.

민간병원과 함께 병상 확보

●○ 지속적 추가확보로 670개 병상 확보

국가지정 수준의 음압격리 14병실을 갖춘 경기도의료원(수원·이천·파주·안성·포천·의정부)은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경기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선봉에 섰다.

경기도의료원 외에도 선별진료의료기관 등 57곳을 지정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완료하는 한편, 요양원 등 중국인 간병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병상 확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3곳), 2월 말부터는 경기도 공공의료기관(6곳),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11곳) 등의 협력으로 9월 말 현재까지 총 16개 병원에 670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병상은 확진환자의 의학적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입원 치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소속의 의사가 확진자의 나이, 기저질환, 임상증상을 듣고 입원 병원을 직접 배정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는 1순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2순위인 증등도 환자는 경기도의료원 7개 병원에서 음압격리치료를 실시했다. 경증환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 부족 시 의료원 일반병실에 1인 1실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악화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 치료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경증환자는 주로 경기도의료원 및 성남시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중증환자는 도내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한 사람의 감염자라도 더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망에 이를 우려를 최소화한 것이다.

한편, 도내 보건소는 총 54대의 '코로나19 전담구급차'를 운영했다. 전담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자체 오존소독장비 및 감염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송환자와 운전자를 격벽으로 분리하여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2015년 메르스 이후 전염병 전담구급차의 필요성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일괄 구입해 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는 119소방구급대가 보유한 264대(음압 3대 포함)의 구급차량을 함께 활용해 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했다.

●○ 민간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병상 추가 확보

도는 코로나19가 노년층과 기저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동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환자 진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15개를 추가 확보했다.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치료전담병원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환자실을 개조해 중증·중등도 환자 전담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재정비했다. 도는 시설개선 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에 재난관리기금 약 5억 원을 투입했다.
의료 인력은 도내 민간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확보했다. 도의 협조 요청에 정부는 10명의 경력 간호사와 1명의 내과 전문의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모집 파견했으며 도내 상급의료기관들도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중환자 지도전문의와 교육간호사를 정기파견했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간호사 7인을 파견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은 경력간호사 재교육을 도왔다.
이렇게 3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기계호흡기 치료까지 가능한 15병상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병원의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의료기관들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협력체계를 통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였다.

그 밖에도 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병원뿐 아니라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도내 상급종합병원들로부터 중환자 치료 지원을 받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코로나19 중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는 11개 민간종합병원(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명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현대병원, 세종병원)을 대상으로 그 운영경비에 대하여 병원당 1억 원(정액)을 지원했다.
음압격리병상 확보, 중증환자 입원 치료에 따르는 소요경비 등 병원이 입은 손실을 보존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관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 격리해제 기준 변경, 정부 건의

6월 경기도는 병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제까지 재원하는 기간은 26.2일로 나타났는데, 4주에 가까운 시간 중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병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이처럼 격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결과일 때 격리해제가 된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그래서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정부에 격리해제 기준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같은 1,000명의 환자라도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수주,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도록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구분하는 이원적인 치료체계를 통해 중증환자가 일시에 몰려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였다."

– 임승관 /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병상 등 의료시설 운영 현황

1. 선별진료소 현황 (2020. 9. 30. PHIS시스템 등록 기준)

- 109개소(의료기관 61개소, 보건소 48개소)
- 국가격리병상(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중이나 중앙 포함으로 제외

연번	시·군명	합계	선별진료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소계	보건소명
합계		109	61	4	49	8	48	
1	수원시	8	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4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	용인시	7	4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강남병원	용인서울병원	3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	성남시	8	5		분당차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제생병원		3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4	부천시	5	3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2	부천시, 부천시 오정
5	안산시	5	3	고대 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	단원구, 상록수
6	화성시	6	4		동탄성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DS병원	2	화성시 드라이브스루), 동탄보건지소
7	안양시	4	2	한림대 성심병원	안양샘병원		2	만안구, 동안구
8	평택시	6	4		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박애병원, 박병원(송탄)		2	평택시, 송탄
9	시흥시	5	3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2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10	김포시	4	3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1	김포시
11	광명시	2	1		광명성애병원		1	광명시
12	광주시	2	1		참조은병원		1	광주시

연번	시 · 군 명	합계	선별진료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소계	보건소명
13	군포시	3	2		지샘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1	군포시
14	이천시	2	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	이천시
15	오산시	2	1		오산한국병원		1	오산시
16	하남시	1					1	하남시
17	안성시	3	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1	안성시
18	의왕시	2	1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1	의왕시
19	여주시	2	1			세종여주병원	1	여주시
20	양평군	2	1			양평병원	1	양평군
21	과천시	1					1	과천시
22	고양시	7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국립암센터		3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3	남양주시	4	2		현대병원, 남양주한양병원		2	남양주, 풍양
24	의정부시	5	4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1	의정부시
25	파주시	3	2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1	파주시
26	양주시	1					1	양주시
27	구리시	2	1		한양대 구리병원		1	구리시
28	포천시	3	1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2	포천시, 소흘보건지소
29	동두천시	1					1	동두천시
30	가평군	2	1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1	가평군
31	연천군	1					1	연천군

2. 병상확보 현황

– 단계별 지속적으로 병상 추가 확보

– 80개 병상(2020. 2. 28. 기준) → 670개 병상 (2020. 9. 30. 기준)

날짜	병상확보 현황
2. 28.	80
3. 31.	476
4. 30.	610
5. 30.	504
6. 30.	581
7. 31.	540
8. 31.	594
9. 30.	670

–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운영 : 476개 병상(2020. 8. 27. 기준)

구분	병상확보 현황
수원	89
의정부	–
파주	111
이천	82
안성	123
포천	71
계	476

2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 단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이 팽배하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악용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도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까지 투입하여 집중 수사 등 초강경 대응을 불사했다. 특히 지방정부 최초로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나갔다.

●○ 초강경 대응,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투입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팽배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틈을 타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생겨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고 기존 정상가격 주문 건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마스크 유통에 일대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므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한 데 이어서, 시군단체장 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 도 차원에서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는 한편,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도는 본격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을 추진했다.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약 2.5배의 폭리를 취했다.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 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여 약 4만여 장을 판매했다. D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며 타사 대비 5.3배의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경기도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타 지역의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 조치했다.

아울러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갔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 대응하여 뿌리 뽑았다."

– 인치권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장

●○ 지자체 최초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T. 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했다.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에는 총 1,51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874건(74.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64건(5.5%), 홈쇼핑 36건(3.1%)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199건(17.0%)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630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304건(25.9%)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96건(16.7%),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72건(6.1%)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68건이 접수됐다.

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18개 업체에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여 처벌했다.

도는 계속해서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대응을 이어갔다.

▷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점검

1. 점검 실적 : 총 870건

– 매점매석* 3건 적발 : 경찰 고발을 위해 식약처 이관(식약처 전속고발 사항)

* 2019년도 월 평균 마스크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위반 18건 : 행정처분(시정권고)

구 분	계	점검 대상	점검결과
계	870		
매점매석 자체 점검 (민생특사경 / 2. 11.~4.30.)	700	유통업체 (도매, 소매)	없음
전자상거래 자체 점검 (공정위 합동점검 3회 포함)	32	전자상거래 업체 (신고센터 접수건 중 선정)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18건 – 매점매석 식약처 이관 1건
매점매석 정부합동점검 (식약처 주관 / 1. 31.~4.30.)	103	제조, 유통업체 (수원시 등 18개 시 · 군)	– 매점매석 식약처 이관 1건
경찰청 합동단속 지원 (경찰청 주관 / 2. 28.~4.30.)	35	경찰첩보에 의한 매점매석 단속지원	– 경찰수사 8건 진행 중 – 매점매석 식약처 이관 1건

2.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 유통 · 판매 집중단속 (1. 31. ~ 4. 30.)

25개 업체 적발(일반 마스크를 KF 마스크로 거짓광고 18개 업체,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 7개 업체)

▣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최초*)

* 타 지자체 기재부 매점매석 고시 이후 신고센터 운영(2020. 2. 5.)

- 운영 기간 : 2020. 1. 30. ~ 4. 30.
- 운영 실적 : 1,516건 접수 (신고제보 1,173건, 기타 문의 343건)

구 분	접 수	처리 완료						처리불가 (소재지 신원 불명)
		합동 점검	자체 점검	타 시 · 도 이첩	1372 이관	무혐의	소계	
신고 · 제보	1,173	57	205	341	255	163	1,021	152
기타 문의	343	6개소	52개소	178개소	153개소	85개소	474개소	-
접수 건수	1,516	19개소 적발						

- 신고 피해유형 (누계 / 중복분)

  판매자 주문 취소(53.7%) ▷ 가격 인상(25.9%) ▷기타 부당행위(22.7%) 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날짜	건의 내용	건의 부처	반영 여부
1. 30.	보건용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건의	기재부, 복지부	반영
2. 24.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강화 건의	기재부, 복지부, 식약처	반영
3. 13.	공정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한 지도 · 감독 건의	식약처, 기재부, 조달청, 관련업체	반영 (관련업체)
3. 17.	읍 · 면지역 주민센터에서의 공적 마스크 판매 및 우체국, 농협 등 공적 마스크 물량 확대 건의	식약처, 조달청, 행안부, 우정사업본부	
3. 27.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 대리구매 대상 확대 및 읍 · 면지역 주민에 대해 1회 2~4주분 구매 가능토록 개선 건의	식약처, 조달청,우정사업본부	일부반영 (대리구매 확대)
3. 30.	집배원 등 대민업무 직군에 대한 직원용 마스크 배부 확대 요청	우정사업본부	
3. 31.	소형 공적 마스크 보급 확대 및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건의	식약처	일부반영 (소형마스크)

3
신천지 사태와 긴급 행정명령

2월 대구 · 경북지역의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기도는 신천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본부(과천) 진입 '강제 역학조사'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확보한 명단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집회 금지

2월 18일 국내 31번째 환자(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시작됐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추세가 뚜렷해지고 정부에서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근거하여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2월 24일에 단행했다. 신천지 공식 종교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시설폐쇄를 명했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라 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신천지의 집회가 금지됐다.

시설폐쇄 전에 신천지 측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신천지 측의 공식시설 및 부속기관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이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시설폐쇄를 집행한 것이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또한 "집회금지 및 시설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고지했다.

또한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T. 031-120)를 통해 제보를 받았는데 며칠 만인 2월 24일 현재(06시) 945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경기지역 신천지 폐쇄시설 세부주소와 방역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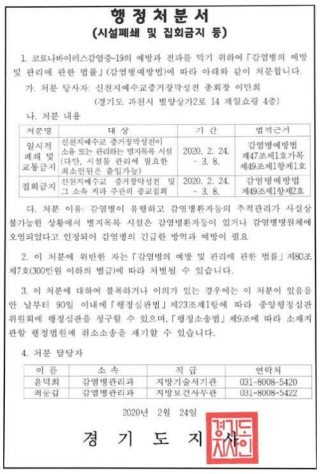
경기데이터드림에 접속하면 경기도지사가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한 353개 신천지 시설의 세부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군·소재지 주소·위도·경도·시설 구분명이 시트로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방역처리 조치 현황까지 실시간 업데이트됐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지도 탭을 클릭하면 신천지 시설의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방역처리 예정시설과 방역처리 완료시설을 색깔로 구분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천지 관련 방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이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은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2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천지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 정 처 분 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 당사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제일쇼핑 4층)

나. 처분 내용

처분명	대 상	기 간	법적근거
일시적 폐쇄 및 교통금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별지목록 시설 (다만, 시설을 관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출입가능)	2020. 2. 24. ~ 3. 8.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1호가목, 제49조제1항제1호
집회금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및 그 소속 지파 주관의 종교집회	2020. 2. 24. ~ 3. 8.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 이유: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지목록 시설은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감염병의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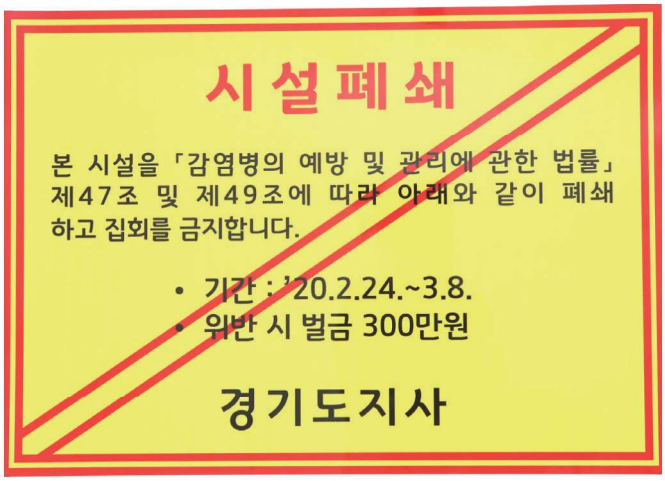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윤덕희	감염병관리과	지방기술서기관	031-8008-5420
최윤갑	감염병관리과	지방보건사무관	031-8008-5422

2020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지사의인)



●○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 신도 명단 확보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신천지 강제해체는 단 하루만에 20만 명의 지지를 돌파하는 등 대구·경북의 집단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폭증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신천지 집회를 금지하고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명단 공개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자 2월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집회를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것은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2월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받은 경기 안양시 거주자가 2월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도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과천 신천지 시설에서 이뤄진 강제 역학조사 현장에서 신천지 측은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설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임의 동행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오후 늦게서야, 관계자 입회하에 컴퓨터 다운로드 등으로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3만3,582명과 2월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930명 및 대구 집회에 참석한 도민 22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 확보한 명단,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에서 확보한 명단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추가 명단에서 중복인원과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총 3만3,809명에 대해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740명으로 확인됐다. 긴급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2,995명을 제외한 3만814명에 대해 조사실시한 결과 유증상자가 740명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사완료자 대비 2.4%에 해당하며, 이중 과천 집회 참석자는 356명으로 유증상자의 46.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466명으로 전체 유증상자 중 63%를 차지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을 통해 대구 방문자로 알려진 신도는 20명이었지만, 경기도의 강제조사 결과

확보한 대구 방문자는 22명으로서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20명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고, 이중 20%에 가까운 6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다.

도는 유증상자 전원에 대해 감염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신도 전원은 14일간 능동감시 조치했다.

전수조사 2일 차인 2월 27일까지 통화가 안 된 신도 2,995명은 재조사를 실시했다. 번호오류 등으로 연락불능인 사람과 번호가 있어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파악 협조요청을 했다.

●○ 엄중한 상황에 즉각 대응

도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검사결과 유증상자의 80%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전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즉각 판단하고 즉각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비상체제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도는 재난본부 내에 가동 중인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사무실을 도지사실 옆으로 옮기고, 상시적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취합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했다. 당시 경기도 내 음압격리병실은 총 100병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24병상, 경기도의료원에 76병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40병상은 확진환자가 입원치료 중이고, 60병상이 비어 있었다. 여기에 더해 도는 경기도의료원 124개, 성남시의료원 13개까지 음압격리병상을 확대해 총 16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음압격리치료실 확충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형 음압장비 243대와 스크린도어 32개를 구입·설치했다.

일반병실은 경기도의료원에 270병상을 확보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과 도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병상을 확보해 나갔다.

도는 자원봉사센터와 의료 관련단체를 통해 예비 의료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수요가 늘어나면서 응급의료환자의 치료가 우려되는 만큼 응급의료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검사 대상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대규모 선별진료소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각 1곳씩 설치하기도 했다.

●○ 집회금지 · 시설폐쇄 연장 및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했다.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의 집회금지 및 시설폐쇄 긴급행정명령을 실시했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져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신천지 측이 계속해서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및 시설폐쇄 기간을 4월 19일까지 추가연장했으며, 4월 20일부터는 별도명령 시까지 무기한 시설폐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다. 폐쇄된 시설은 440개 시설이며, 이중 264개 시설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9월 30일 현재 176개소가 '시설폐쇄' 행정명령 중에 있다.

그러나, 4월 5일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 시설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이 무단출입한 것이 밝혀졌다. 그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4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직접 가평 현장을 찾아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강력 조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모처로 이동중에 밤늦게 과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에 응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신천지 사태로 인한 경기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다. 10월 15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고)
본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방역 완료하였고, 폐쇄조치함
2020. 2. 20.
출입금지
시설폐쇄
경기도지사



4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 · 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했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했다.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갔다.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 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 2.29. 9시 기준 확진자 수 전국 2,931명(경기 76명), 사망자 전국 16명(경기 1명))

이에 경기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도는 이러한 사후적 방역방법인 코호트 격리를 선제적 방역으로 적용하고자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이 조치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침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곳 등 총 1,824개소가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에 들어갔다.

한편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했다. 또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코호트 격리 전까지 임시조치로서 시설장 책임하에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 2주간 연장으로 더욱 철저하게

경기도는 3월 15일까지 실시한 1,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3월 29일까지 2주 추가 연장했다.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도민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된 데다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입소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시설이 더 늘어났고,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준하여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철저히 차단시켰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의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였으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경상북도(강제조치, 전체시설), 대구광역시(행정지도, 신청시설), 광주광역시(행정지도 시범실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를 시설에 모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분들이 다들 가정이 있을 텐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숙박하면서 어머니를 돌보신다고 하니 미안하고도 감사하다. 자식도 못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다. 무엇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도넛과 음료를 보내드렸다."

– 예방적 코호트 격리 입소 환자의 보호자

"예방적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고 응원을 보낸다는 격려의 전화가 이어졌다. 관심 가져 주신 도지사님, 시장님 및 주무관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의 직원

경기도형 예방적 코호트 격리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사망자 잇따라 발생

(※ 2. 29. 9시 기준 확진자 수 전국 2,931명(경기 76명), 사망자 전국 16명(경기 1명))

2. 추진 기간

– 1차 : 3. 2. ~ 3. 15. (2주간)

– 2차 : 3. 16. ~ 3. 29. (2주간, 추가 연장)

3. 대상 : 1,824개소

(노인요양 · 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

4. 방법 : 행정지도 방식으로 추진 (도, 시군 참여 독려)

5. 운영 내용

– 예방적 코호트격리(14개소)

종사자 동의, 숙식 등 가능 시설 대상으로 실시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만 시설 내 거주 허용

외부인 방문 및 필수 종사자 외출 금지, 외부 반입물품 소독

– 준코호트 격리 (1,810개소)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에서 시행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칙 준수

출퇴근 시 대중교통 지양, 개인방역 준수

시설 방역소독 매일 실시(특히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 및 반입물품 소독

6. 사후 조치

– 시설 손실보상 : 식비 · 간식비 등 운영비 지원

– 종사자 피해지원 : 추가시간 발생에 따른 수당 등 지원

5
사회적 거리두기 7대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7대 전략'을 수립하여 전 도민 및 각계각층과 함께 실천해 나갔다. 7대 분야로는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 · 기업 △문화예술 · 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가 담겼다. PC방과 유흥시설,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최소화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이후에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실천수칙들을 도민과 공유하면서 지켜나갔다.

●○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도는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하고, 3월 5일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3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서 모든 도민이 소극적인 방역의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한 방역대책이었다.
7대 분야로는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첫째,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했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분야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분야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넷째,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교육계는 개학·개강 연기와 병행해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이미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여섯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했다. 이와 관련해서 도는 이미 3월 2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곱째, 경기도 공직자들은 회식 및 부서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대면보고 대신 부서 및 기관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군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처리를 강화했다.
심지어 비대면 식사를 실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구내식당의 식탁마다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밖에도 식당입장 후 손 소독, 일회용 비닐장갑 배부, 실·국별 외부식당 이용 확대, 배식시간 2개조 운영, 청사 출입 시 체온 체크, 수시 소독활동 등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7대 전략을 모든 도민 및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특히 외출자제와 문화체육활동 자제 등을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등 그동안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7대 분야 실천과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갔다.

●○ 단계별 '거리 두기'가 최고의 방역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데 이어 다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을 연장했고, 이어서 4월 20일부터 이를 한 단계 완화하여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5월 6일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이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고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강조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공중화장실 생활속 거리두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자제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 후 변기뚜껑 닫고 물 내리기
2m 이상 간격유지하기
2m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예의

6

전국 최초 최첨단 설비 갖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수원월드컵경기장(P4 주차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남 · 북부 1곳씩 총 2곳에 설치했다. 대규모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다수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량검사가 가능해졌고, 의심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도 커서 도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 긴급 설치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경기도는 증가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드라이브 스루(Drive-thru)형 대규모 선별검사센터'를 3월 7일부터 운영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도는 컨테이너 설치, 인건비, 보호물품·의약품 물품구입비 등 총 5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했다.
선별검사센터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P4)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남·북부 1곳씩 총 2곳에 설치했는데, 경기남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P4)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는 3월 7일(토요일)부터, 경기북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운동장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는 3월 8일(일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는데, 단 운영이 시작되는 3월 7~8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첫째, 경기도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일반병원의 경우 의사 1명당 하루 평균 검사 가능 인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에서는 1개 검사소당 최대 60명의 검사가 가능해서 2개 센터당 10개의 검사소가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명을 검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병원 및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시에는 한 사람을 검사할 때마다 검사도구와 방호복을 다 버려야 하고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서 비효율적이고 추가적인 감염 위험도 적지 않았다. 그에 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는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시간을 줄여 방호복과 페이스 쉴드 교체에 드는 상당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이었다.

둘째,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추는 등 시설, 장비는 물론 전문 의료인력 등을 갖춤으로써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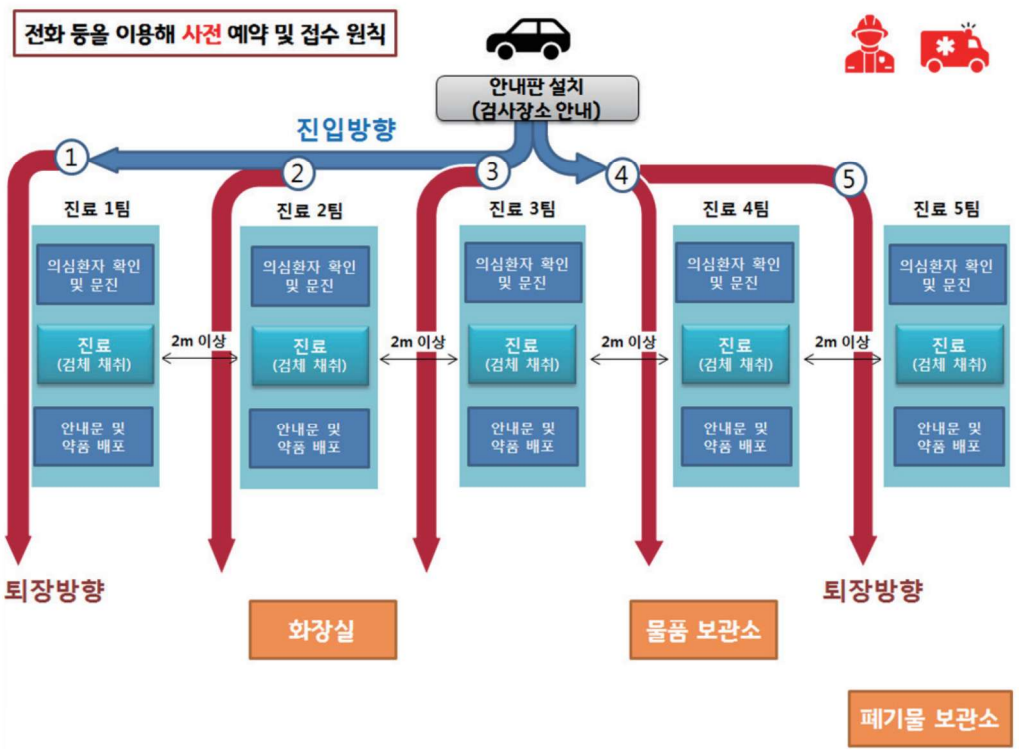
셋째, 신속검사와 함께 의료진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했다. 선별검사센터는 경기도 120콜센터(T. 031-120)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예약을 해야 했다.

넷째,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엔 도보이용 검진도 가능하게 설계하여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였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는 4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여 이용자가 줄어듦에 따라, 수원월드컵경기장 선별진료소는 4월 23일부터, 경기북부청사 운동장 선별진료소는 4월 29일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3~4월 동안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수원월드컵경기장 선별진료소에서는 525명을 검사하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북부청사 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는 1,233명을 검사하여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해외입국자로부터 코로나19 역유입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에 선별진료용 이동형 컨테이너(검사소) 3개소를 지원했다. 인천공항 검역소의 긴급 대여 협조요청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원하게 된 것이다.



▷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내 전파 사전 차단 및 의심환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운영 방식

- 차를 탄 채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
-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 검사소 설치
- 사전 예약제로 운영(경기도 120콜센터 / T. 031-120)

3. 추진 현황

구분	운영기간	의료지원 인력(명)	검사(확진)
		135(의료원 95, 민간 40)	1,758(13)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남부)	2020. 3. 7. ~ 4. 22.	93(70, 23)	525(3)
경기도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북부)	2020. 3. 7. ~ 4. 28.	42(25, 17)	1,233(10)



▶ 수원월드컵경기장 P4 주차장(5,356㎡)



▶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7,442㎡)

7

집단감염 대응과 행정명령

코로나19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신천지 사태가 지나간 후에도 서울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등 코로나19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즉각대응체제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였다.

●○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서울시와 공동 대응

대구 신천지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누그러지는 듯하던 3월 초 갑자기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발생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0여 명이 넘어가자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3월 10일 영상회의를 갖고 수도권 공동대응에 나섰다. 영상회의에서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 나갔다. 세 지자체는 지난 2017년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공동협약을 체결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행정 관할을 넘어 전폭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우선 각 지자체 역학조사관 및 실무자 간 조사 진행상황과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를 즉시 공유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접촉자 확인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 거주지가 수도권에 퍼져 있고, 확진자 동선도 수도권 전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도가 시행한 역학조사 정보공유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수도권 간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의 경우, 수도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셋째,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당시 3월 10일(12시 기준) 이미 경기도 확진자가 11명이었고 관련 접촉자 수는 45명으로 확인된 상태였다. 상태가 엄중한 만큼 도는 확진자 발생 지역인 서울시에 도의 역학조사관 15명을 파견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했다.

넷째, 심층 역학조사 정보를 확보했다. 현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하에서는 관할 지역 내 환자 정보만 제한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도는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질병관리청에 긴급 요청했다.
이처럼 도는 타 지역의 심층 역학조사 정보를 알아야 여러 지역에 걸친 집단감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인천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도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갔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뚫리면 지역 내 감염이 빠를 수밖에 없다. 경기도 거주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완료하고 민간콜센터 데이터도 바로 확보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관련 수도권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서울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공동대응, 역학조사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 구축
- 서울시에 경기도의 역학조사관 15명 긴급 파견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타 지역 심층 역학조사 정보도 확인
- 가능하도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질병관리청에 긴급 요청



●○ 종교시설, 전수조사 실시 및 첫 행정명령 발동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집단감염에 이어 3월 16일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목사 부부 포함한 신도들 4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46명 중 경기도민은 45명이었고, 이들은 3월 8일 서울시 광진구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교회를 폐쇄조치했으며,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파악·분류했다. 3월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 5개 종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 종교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었다. 이어서 3월 11일에는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성남시 은혜의 강을 비롯하여 부천 생명수 교회, 수원 생명샘 교회 등 교회를 통한 감염사례가 이어지자 도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모색했다.

첫째, 교회 주일예배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3월 15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종교시설 대상 최초의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이것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었다.
도는 3월 15일에 이어 3월 29일에도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 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4월 5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분간 중단됐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도 행정명령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1차 대유행에 따른 집회제한 기간이 마무리됐다.

셋째, 공무방해 20개 교회 대상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3월 29일 교회대상 전수조사 실시 당시 일부 교회에서 감염수칙 위반 사례가 드러나고 또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도는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 5개 종교 대표들과 간담회, “집단 종교 행사 자제” 당부
- 기독교계와 합의 도출,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 미준수 시 집회 제한 명령 발동”
- 확진자 발생 시 교회 폐쇄조치, 즉각대응팀 파견하여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137개 교회, 종교시설 최초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 공무방해 20개 교회 대상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



●○ 군포효사랑요양원 집단감염, 요양시설 등 관리 강화

3월 19일 경기도 군포 효사랑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24일 8명이 추가 확진돼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 양상으로 발전해 갔다. 확진자 중 입소자는 10명, 직원은 4명이었고, 특히 확진된 입소자들의 평균 연령은 90세였고 최고령자는 99세(22년생) 등 고위험군인 상황이었다.

확진된 입소자들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후송됐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명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에 분산 입원 치료를 진행했다. 당시 경기도는 3월 25일 현재 총 27개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중 9병상을 군포 효사랑요양원 확진자 진료에 활용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3분의 1을 군포 효사랑요양원 확진자들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4~5층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시설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진행했다. 또한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군포 효사랑요양원 집단감염 사례는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3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유행이 발생하면 병상이나 장비 같은 의료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공간 중 하나"라며 "경기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대비해 왔지만 위험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군포 효사랑요양원 집단감염

-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원 4~5층에 대한 코호트 격리 단행
- 시설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진행
-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



●○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즉각대응팀 파견

3월 28일 경기도 양주시 베스트케어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30일 밤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후 4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어 의정부성모병원에 3월 12일부터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3월 30일 선별진료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망한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 확진자와는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층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사례의 시작이었다.

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였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일시 폐쇄됐고 신규외래 및 입원이 중단됐고, 병원 의료진 및 입원환자 등 2,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8병동 직원 및 접촉 의료진은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검사결과 음성 및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퇴원 조치했다.

또 확진자 발생 이후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긴급폐쇄하고, 의료진과 간병인 및 보호자 등 밀접접촉자 5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확진자는 간호사 1명, 원내환자 6명, 원외환자 1명, 간병인 4명, 미화원 1명이었다.

또한 원내환자와 직원 및 퇴원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뒤 모니터링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발 이전인 3월 20일 퇴원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전 퇴원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를 통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력이 있는 간병인 및 퇴원환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의 경우 입소 중인 83명(입소자 85명 중 2명은 외박으로 검사 제외)과 종사자 5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검사 중인 입소자 1명을 제외한 13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 응급실 및 8층 병동 긴급 폐쇄, 신규외래 및 입원 중단
  - 즉각대응팀 파견, 현장대책반 구성하고 심층 역학조사 진행
- 병원 의료진 및 입원환자 등 2,200여 명 전수검사 실시
  - 밀접접촉자 5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 원내환자와 직원 및 퇴원환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뒤 모니터링



●○ 용인시 처인구청 집단감염 등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

4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시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은 확진받기 약 열흘 전인 3월 28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월 4일에 근육통 등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4월 7일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시 금고 직원 등 470여 명을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동동선에 따른 접촉자 10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해서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 3월부터 도내 병원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3월 말부터는 해외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순간의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만큼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4월 6일,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정례 브리핑에서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5월 초 이태원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으로서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을 다녀갔다.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클럽을 6군데나 다녀간 것이 밝혀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시기는 5월 초 황금연휴기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2차 대유행의 서막이 시작됐다.

첫째, 도는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 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갔다.

둘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의 4월 24일 이후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처음에는 4월 29일 이후 방문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초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의 영업일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기준 일을 앞당겨서 그물망을 더욱 좁힌 것이다.
도는 재난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또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로 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있어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알려 나갔다.

셋째, 익명 보장 무료검사 기간을 운영했다. 성 소수자 클럽에서 비롯된 집단감염인 만큼 신분 노출을 우려한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꺼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당부해 나갔다. 또한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5월 17일까지였던 무료검사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넷째, 방역 활동 과정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5월 15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웃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섯째, 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방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5월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시켰으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는 클럽 방문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확대해 나갔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래방과 돌잔치, 학원 등으로 N차 감염도 이어짐으로써 다시 한 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성수소자 신분 노출 없이도 검사 가능
- 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방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일반기업 첫 집합금지

5월 하순 전국은 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로 떠들썩했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작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의 감염이 번진 것이었다. 물류센터 직원의 돌잔치에 참석한 쿠팡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감염돼, 5월 28일 현재까지 직원 63명과 접촉자 1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어기에 대전시에서 개최된 한 사업설명회에 확진자와 동행한 마켓컬리 물류센터 직원, 경기도 고양시의 쿠팡 물류센터 직원, 부천의 유베이스 콜센터 직원까지 집단감염에 더해졌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수검사 대상 전체가 노출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4,351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출근금지 조치하고 유증상 시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현장의 작업장, 휴게실, 남녀락커룸 등 전 구역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총 67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공용 안전모와 2층 패킹(Packing) 작업장 내 작업용 PC에서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 이후 시행한 회사의 소독 조치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결국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해당 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곳에서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첫 사례였다.

물류센터 측에서 방역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에라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고양 쿠팡물류센터의 경우 경기도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한 70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물류센터 내에 드라이브 스루 및 워킹 선별진료소를 3개소 설치하여 빠른 속도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는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신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합니다. 경기도민의 제1머슴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한 전수조사
- 대규모 물류센터 등 유사 기업 측에 철저한 방역 주문
- 무작위 표본검사 희망기업에 풀링(Pooling) 검사 예산 지원



경기도의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 (발표순)

구분	발표일	시설	내용	기간
1	2. 24.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2. 24. ~ 3. 8.
2	3. 17.	미준수 교회	감염병수칙 미준수 교회 밀접집회 제한 등 (준수사항 미준수 시 집회 전면금지)	3. 17. ~ 3. 29.
3	3. 18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	3. 18. ~ 4. 6.
4	3. 24.	학원 및 교습소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을 금지	3. 24. ~ 4. 6.
5	4. 8.	노래연습장 PC방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	4. 8. ~ 4. 19.
6	4. 10.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	4. 10. ~ 4. 19.
7	4. 20.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	4. 21. ~ 5. 5.
8	4. 22.	노래연습장 PC방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	4. 22. ~ 5. 5.
9	5. 10.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해당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합금지	5. 10 ~ 5. 24.
10	5. 10.	코로나19 감염검사	2020. 4. 29.부터 특정 장소(이태원동 6개소, 논현동 1개소)에 출입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감염검사 등	5. 10. ~
11	5. 23.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해당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합금지	5. 25. ~ 6. 7.(연장) 5. 23. ~ 6. 7.(신규)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12	5. 28.	부천 쿠팡물류센터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 집합금지	5. 28. ~ 6. 10.
13	6. 1.	물류시설 등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	6. 1. ~ 6. 14.
14	6. 7.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연장(조건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작성 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금지해제 가능	6. 8. ~ 6. 21.

경기도의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 (시설별)

구분	시 설	1차	2차	3차	비 고
1	신천지	2. 24. ~ 3. 8.	3. 9. ~ 3. 22.	3. 23. ~ 4. 5.	4.19. ~별도명령 시까지
2	미준수 교회	3. 17. ~ 3. 29.			
3	노래연습장	3. 18. ~ 4. 6.	4. 8. ~ 4. 19.	4. 22. ~ 5. 5.	
4	클럽형태업소	3. 18. ~ 4. 6.			
5	PC방	3. 18. ~ 4. 6.	4. 8. ~ 4. 19.	4. 22. ~ 5. 5.	
6	학원 및 교습소	3. 24. ~ 4. 6.			
7	유흥시설	4. 10. ~ 4. 19.	4. 21. ~ 5. 5.		
8	다방	4. 10. ~ 4. 19.	4. 21. ~ 5. 5.		
9	목욕장업	4. 10. ~ 4. 19.	4. 21. ~ 5. 5.		
10	유흥주점	5. 10. ~ 5. 24.	5. 25. ~ 6. 7.	6. 8. ~ 6. 21.	
11	감성주점	5. 10. ~ 5. 24.	5. 25. ~ 6. 7.	6. 8. ~ 6. 21.	
12	콜라텍	5. 10. ~ 5. 24.	5. 25. ~ 6. 7.	6. 8. ~ 6. 21.	
13	단란주점	5. 23. ~ 6. 7.	6. 8. ~ 6. 21.		
14	코인노래연습장	5. 23. ~ 6. 7.	6. 8. ~ 6. 21.		
15	부천 쿠팡물류센터	5. 28. ~ 6. 10.			
16	물류시설 등	6. 1. ~ 6. 14.			
17	콜센터	6. 1. ~ 6. 14.			
18	장례식장	6. 1. ~ 6. 14.			
19	결혼식장	6. 1. ~ 6. 14.			
20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	5. 10. ~			

8

초유의 개학연기 및 긴급돌봄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신학기 시즌이 되어도 학교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학교 개학은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4월 9일(고3, 중3 온라인 개학부터 순차적 진행)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탓이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긴급돌봄을 실시했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휴원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와 대응책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은 초·중·고등 및 대학교의 방학 기간이었다. 그러나 첫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국내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어가고 개학 시기인 3월이 되도록 쉽게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개학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대두됐다. 수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위험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2월 23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연기'를 결정, 발표했다. 그러나 단 1주일 연기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2일 '추가 2주 연기'를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입학 및 새학기 시즌인 3월에도 학교 문을 열지 못했다.

2차 연기는 1차 연기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1차 연기 결정은 방학 기간이었지만 2차 연기는 3월 2일, 개학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학생들의 수업일수 및 교육을 위해 학교는 문을 닫은 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 유·초·중·고 추가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후속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갔다.

첫째, 우선 학생 감염 위험과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단위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온라인 학습자료 사이트와 학년별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학급방을 개설해 개학 이후 진행될 교과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 학습관리 방안을 제공했다. 단위학교는 학년과 교과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휴업 중 학생 개별학습 과제와 자율탐구 과제를 선정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교사가 개설한 △EBS온라인 클래스 △에듀넷·티-클리어 △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에서 온라인 학습과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고, 담당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

셋째,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개학연기에 따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긴급돌봄을 실시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 아동돌봄을 제공했다. 아동돌봄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3월 5일까지 학부모수요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생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소독과 방역,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했다. 시설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원 휴원 조치

학교 개학은 처음에 일주일 연장하여 3월 9일로, 다시 2주일 추가 연장하여 3월 23일로 연기됐고 다시 2주일을 연장하여 4월 6일로 연기됐다가 결국 4월 9일(고3, 중3 온라인 개학부터 순차적 진행)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탓이었다.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학원 휴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학교는 개학을 전면 연기했지만 도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3월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3만3천여 곳에 대해서 밀접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를 통해 발표한 것. 3월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3월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등 3대 업종에 대한 행정명령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는 도보를 통해 공고했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만2,936곳이 있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만155곳이 있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3월 24일부터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까지 지속됐다.

학교 개학 현황

휴업 명령				단계적 온라인 개학
1차	2차	3차	4차	
3. 2. ~ 3. 6.	3. 9. ~ 3. 20.	3. 23. ~ 4. 3.	4. 6. ~ 4. 8.	4. 9.~

- 4. 9. 전국 중 · 고교가 중3, 고3부터 온라인 개학
- 4. 16. 전국 초 · 중 · 고교 온라인 개학



●○ 4월 9일, 단계별 '온라인' 개학

전국 학교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했다. 4월 9일 고3·중3 수험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가장 먼저 실시됐으며, 4월 16일에는 고 1·2학년과 중 1·2학년, 초 4~6학년 학생들이 개학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0일 초1~3학년 학생들이 개학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완료됐다.
온라인(원격) 수업이 진행됐는데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 시도별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했다.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활용했으며, 원격수업 오류 상황에 대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콜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경기도 지식(GSEEK)이 보유한 2천여 개가 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를 온라인 개학의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했다. '경기도 지식(GSEEK)'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이다. 1,200여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외국어·생활취미·인문소양·자기계발 등 총 2,606개에 달했다.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경기도 지식 사이트 내 '지식더하기', '온라인개학 콘텐츠 신청' 메뉴에서 교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도는 신청자의 실제 교사자격 여부와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했다.
'경기도 지식(GSEEK)' 무상 제공은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확정된 후 경기도 지식 콘텐츠를 학습자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 만큼 경기도가 제공한 교육용 동영상콘텐츠가 전국 교사와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4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608개 학교 1,124명의 교사가 경기도의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를 원격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국적으로 21만5,886명의 학생들이 경기도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격수업 준비에 막막했는데, 경기도에서 제공받은 중국어 수업 콘텐츠를 원격수업시스템에 탑재해 학생들과 함께 잘 활용했다. 콘텐츠의 내용이 좋아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학습효과도 높았다. 다른 콘텐츠도 수업에 많이 활용하게 됐다."

– 군포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 제공 교육 콘텐츠에 대해






코로나 19 대응
꿈드림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지원체계
(안)
(예시) 학습멘토링
01
(센터·멘토·멘티)
멘토링 시간계획
02
(멘토) 재택 또는 센터 방문
멘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 실시
03
화상 시스템 접속
카카오 티비, 스카이프, ZOOM
04
(멘토) 멘토링 진행
기출문제 풀이, 오답노트 해설
05
(멘티) 멘토링 참여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질의
06
(멘토) 활동 일지 작성
07
(멘티) 과제 수행
08
(센터) 멘토링 피드백 및
사례관리
(선택) 메신저 활용
멘토와 멘티 사전 협의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블루 돌봄

경기도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게 되어 우울감이 생긴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 힘들다." 등 많은 청소년이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부모들의 상담전화도 이어졌다. "애들도 개학이 연기돼서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다.", "아이가 코로나19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서 PC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 조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등 부모로서 겪는 곤란한 상황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은 불안함과 답답함뿐 아니라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일반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T. 031-1388), 인터넷 상담(www.cyber1388.kr), 문자상담(#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여 어린 학생들의 접근도를 높였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첫째, 일선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4월 1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꿈드림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장기간 휴관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했던 멘토링, 자립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한 것이다. 특히 도는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온라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3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집합활동으로 계획했던 '문화활동 지원 사업'도 각 시군별 실정에 맞게 'e-영화·공연 관람권 지원', 'e-동아리 클래스 지원', '온라인 체육활동 수강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욕이 높아 5월 3일 현재 1,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슬기로운 꿈드림 생활'을 운영했다. '슬기로운 꿈드림 생활'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휴관함에 따라 대면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현재의 진로탐색 및 활동 상황을 개인 SNS에 영상 또는 사진으로 올리면,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좋아요'가 많은 게시물 순위에 따라 매주 10명을 선정해 센터 방문 시 제공하는 교통카드에 3만 원을 충전 지급했다.

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지원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선, 문자 등을 통해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센터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성남시, 가평군은 화상 프로그램 '줌'을, 구리시,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등은 '카카오 라이브톡'을, 평택시는 '스무디'를 이용해 검정고시 대비 수업을 운영하는 등 각 시군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접한 실시간 강의를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도 가능했다.

"코로나19로 센터에 갈 수 없어 생활이 나태해져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며 목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센터에 못가도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 좋았다."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외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됐다."

"하루 종일 지루했던 일상이 조금은 활기가 생겼다. 멘토와 대화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느끼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

–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들

9
가정같이 편안한 생활치료센터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대체형'이 아닌 '가정 대체형'으로 운영됐다. 가정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한 치료와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곳이다. 기업체 및 기관의 협력을 얻어내어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 경기도교육연수원,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생활치료센터를 열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이곳에서 마음까지 치료하고 나갈 수 있었다.

●○ 전국 유일의 코로나19 환자 회복시설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을 치료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담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경증으로 완화된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병상 확보로 신규 발생 환자의 입원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는 치료서비스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것은 확진자 증가로 의료기관의 병상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부족한 의료자원을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고 경증환자들에게는 과다한 의료조치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대체형'이 아닌 '가정 대체형'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가정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한 치료와 보다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치료 후 회복기에 접어든 경증환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도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도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종식이 아닌 동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생활치료센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3월 6일 전문가 자문위원 및 긴급대책단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3월 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업무협의'를 하고 3월 9일 도내 주요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가졌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시설 확보를 위해 도내 연수시설 운영기업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3월 10일 도지사 주재로 '도내 연수시설 운영기업 간담회'를 열어 11개 시설 사용 동의를 얻어냈다.

본격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담당할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단'을 구성했다. 생활치료센터 합동지원단은 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운영총괄팀, 폐기물총괄팀, 의료지원총괄팀, 구조·구급총괄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발 빠른 추진력의 결과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제5호 생활치료센터까지 개소· 운영할 수 있었다.

●○ 제1호 생활치료센터 (한화생명 연수원)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가 3월 19일 용인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협약식을 갖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간제공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한화생명과 의료지원을 해주는 분당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를 무리 없이 수용해 준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사용 후 원상복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보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시설물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인력 파견 및 의료장비 제공과 함께 입소환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총괄했다.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 시설을 활용한 제1호 생활치료센터는 총 160호실 규모로 강의동과 숙소동 등 총 3개동으로 이뤄져 있었다. 센터 인력은 4개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상주인력은 43명이다. 공무원과 의료·경찰·군인·용역업체 등 민간인력이 투입돼 행정과 폐기물 처리관리,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중증환자 발생 시 병원 긴급후송 등을 담당했다.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우선 경기도의료원에 입원 중인 180여 명 중 60여 명이 입소한 이후 수많은 경증환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곳에 입소한 환자는 하루 세끼 방으로 넣어주는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PCR)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하루 2번 분당서울대병원 본부 간호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상담을 하고, 이틀에 한번 의사 검진을 원격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입소자들은 체온,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하루 두 번 스스로 측정해 분당서울대병원의 건강관리 앱 '헬스포유(Health4u)'에 입력하면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모니터링 본부에서는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살펴주는 등 최고의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이 가능했다.

입소자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숙소 및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공간, 처치실 등을 수시로 방역소독하며 교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입소자가 제1호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3.7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의료·관리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회복기 경증환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 운영 100일 동안 348명 완치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4월 17일 용인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중심으로 안성병원, 수원병원이 연합해 운영했으며, 수용규모는 82실로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했다. 전국 지방의료원들 중에서는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책임을 맡은 사례다.

센터 인력은 도 공무원 및 경찰, 민간 의료인력 등 4개 팀 50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상주 인력은 39명이었다.

또한 제2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입소자, 의료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음악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화제가 됐다. 작은음악회는 도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도민, 센터 근무 중인 의료진, 도청 직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5월 1일을 시작으로 매주 1회 공연이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입소한 시설 내에서 공연이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입소자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자 등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회가 됐다.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3월19일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서 개소한 제1호 생활치료센터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총 201명을 수용했으며, 용인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에서 개소한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해 총 147명을 수용했다.

제1호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제2호 생활치료센터 운영까지 총 500여 명의 의료 및 행정업무 인력이 투입되어 경증환자 치료에 주력했다. 그 결과 운영기간 약 100일 동안 생활치료센터에는 348명이 입소하여 완치될 수 있었다.

한편, 도는 6월 25일 제2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를 앞둔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를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우울, 답답, 슬픔, 절망, 무기력 ...속에서 눈물로 보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방송하는 목소리, 식사 맛있게 드시라, 건강을 위해 자가 측정하시라...격려해 주는 그 목소리들 덕분입니다.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정신 차리고 돕는 손길들이 있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 전화해서 떼쓰고 했던 일들..많이 부끄럽지만 들어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감사 편지

●○ 코로나19 재확산에 생활치료센터 확대 · 운용

8.15 광복절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촉발된 2차 대유행이 재확산되던 8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도민 긴급호소'를 통해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바이러스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에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서 8월 22일 제3호 생활치료센터가 이천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문을 열었다. 제3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운영하며, 민간 간호사 인력을 지원받았다. 수용규모는 1인 1실일 경우 110실, 2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하면 220실 규모였다. 센터 인력은 도 공무원, 경찰, 민간 의료인력 등 3개 팀 7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상주 인력은 67명이었다.

이후로도 도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경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와 제5호 생활치료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8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8월 29일 안성시 원곡면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제5호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 마련된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총 158실이 있었는데 2인 1실로 총 3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치료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맡았다. 안성시 원곡면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제5호 생활치료센터는 146실 286명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치료를 전담했다.

제4호, 제5호 생활치료센터는 각 센터당 인력은 도 공무원, 경찰, 민간 의료인력 등 3개 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상주인력은 72명이었다. 환자 진료·치료와 심리상태 상담부터 물품지원과 환자관리, 방역, 폐기물 처리, 중증환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주목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체계의 바탕에는 귀사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은 방역전선을 견고히 하는 데 더없이 큰 힘이 됐습니다. 군인과 경찰인력을 파견한 제55사단, 제3공수여단, 용인동부경찰서와 이천경찰서 등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함께 지혜를 나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갑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생활치료센터 협력 기업 · 의료진 · 군 · 경 ·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글로벌 캠퍼스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Global Campus
삼성화재
SAMSUNG




SNUH 분당서울대
경기도 제1호 생
업무협 의

▷ 추진 현황

○ (3~6월) 코로나19 확산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의 성공적 운영

구 분	제1호(용인)	제2호(용인)	도 임시생활시설(이천)
운영기간	3. 18. ~ 4. 30.	4. 17. ~ 6. 25.	4. 21. ~ 6. 2.
지정시설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기아자동차 오산교육센터	SK텔레콤 인재개발원
전담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용규모	90실	82실	90실
운영실적	총 201명 입 · 퇴소	총 147명 입 · 퇴소	총 90명 입 · 퇴소
			

○ (8월 ~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에 따른 신속선제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10. 11. 기준)

구 분	경기수도권2(안산)	제3호(이천)	제4호(고양)	제5호(안성)
운영기간	6. 24. ~ 10. 8.	8. 22. ~ 현재	8. 28. ~ 현재	8. 29. ~ 10. 9.
지정시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전담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용규모	370실	220실	158실	146실
운영실적	718명	309명	392명	2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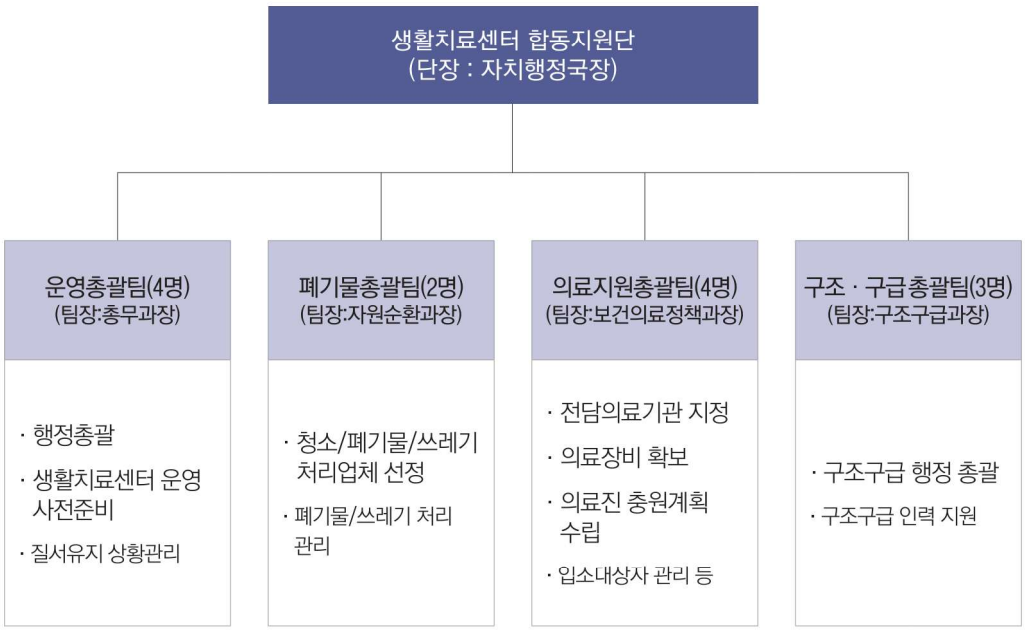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1. 운영방향

- '병원 대체형'이 아닌 '가정 대체형'
- 경증환자 수용을 통한 병원 내 병상확보
- 회복기 환자의 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2. 조직

- 합동지원단 : 4개팀 14명(道 공무원)



10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 이에 4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다. 이곳이 문을 닫은 후에는 도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시설인 도 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 접촉자격리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을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3차)하는 우한교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원했다.

●○ 우한주민 이천 주민들의 협조와 양보로 격리생활 무사퇴소

3월 중순부터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수본에서는 유럽→ 미국→전 해외입국자 순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하여 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일평균 1,5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마련이 더욱이 필요했다.

이에, 도에서는 당초 2호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려던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설치하여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확진자가 아닌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도민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도 질병정책과를 통한 31개 시군 보건소와의 연락을 통해 입소자 선별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도 총무과에서는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총괄하며, 도 질병정책과에서는 입소자 관리를 맡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4월 22일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문을 열었다.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은 도 차원에서는 처음이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전담 운영하며 수용규모는 90실로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했고, 인력은 도 공무원 및 경찰 등 3개 팀 18명으로, 이중 상주하는 인력은 8명이었다. 이곳에는 검체 채취결과 음성인 도민 중 시군 임시생활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해 시장·군수가 입소를 추천하는 사람, 주거형태, 가족형편 등을 고려해 입소 필요성이 있다고 도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입소할 수 있었다.

특히, 임시생활시설은 도시락 제조를 해당시설 인재개발원의 식당인력이 준비하여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숙소 등이 쾌적하여 입소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도 임시생활시설은 SK기업 측에서 교육운영 등으로 종료요청을 함에 따라 6월 2일까지 운영을 했고 운영기간 동안 약 90여 명이 입·퇴소했다.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은 중앙에서 입소자에게 약 10만 원/일 상당의 입소비를 맡게 됨에 따라 도에서는 1인 1일 10만 원을 원칙으로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데, 운영기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기록했다.

●○ 접촉자격리시설, 안산 평생교육시설 창의인성센터에 개소

임시생활시설이 문을 닫은 6월 2일 이후 해외입국 등 입국자들을 위한 시설은 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국비보조를 받아 도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시설인 도 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접촉자격리시설은 6월 17일 안산 평생교육시설 창의인성센터에 문을 열었다. 접촉자격리시설은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격리장소가 불분명한 이들의 격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건강관리책임자, 운영인력 등 10명의 시설관리 인력과 40실의 수용규모를 갖추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시장·군수가 입소를 추천하는 사람 등이 입소 가능한 대상으로서, 시군 또는 본인 신청으로 도가 입소여부를 확인 후 입소할 수 있었다.

경기도 접촉자격리시설은 6월 17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22일 현재 248명이 입퇴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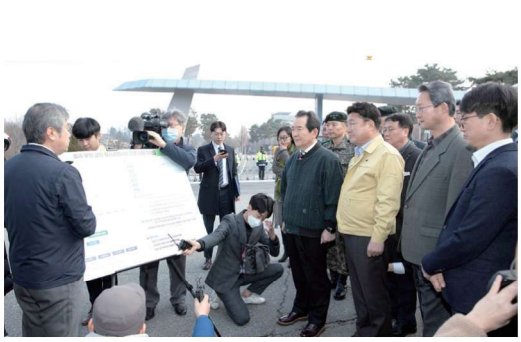
●○ 우한교민 3차 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3차)하는 우한교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했다. 2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는 우한 교민 및 교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지정 운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도는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우선 국방어학원 인근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정부 및 이천시와 함께 '합동지원단'을 편성했다. 또 해당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급했으며 아울러 임시생활시설 내 동향 및 방역 현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갔다.

특히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3차 귀국자 약 150명이 생활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곳으로, 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어학교육을 전담하는 군용 교육시설이다. 지상 4층 건물에 353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천시 도심과는 직선거리로 약 17km 떨어져 있다. 한편, 1차 입국자(368명)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됐고(1. 31. ~ 2. 15.), 2차 입국자(333명)는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됐다(2. 1. ~ 2. 16.)









경기도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1. **장소** : SK텔레콤 인재개발원(이천시 서이천로 소재)
2. **운영 기간** : 4. 22. ~ 6. 2.
3. **운영 인력** : 18명 [행정인력(행정9, 군4, 경찰3) + 의료인력2]
4. **전담 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 **수용 규모** : 90실
6. **입소 대상** : 해외입국자 중 음성판정을 받은 자로,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자
   *양성자 및 기저질환자는 입소 불가
7. **운영 현황** : 89여 명 입 · 퇴소

경기도 접촉자 격리시설

1. **장소** : 안산 평생교육시설 창의인성센터
2. **운영 기간** : 6. 17. ~ 코로나19 종료 시
3. **운영 인력** : 10명
4. **전담 병원** : 시군 보건소
5. **수용 규모** : 40실
6. **입소 대상** :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7. **운영 현황** : 10. 22. 현재 248명 입 · 퇴소

우한교민 3차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1. **장소** : 이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
2. **운영 기간** : 2. 11. ~ 2. 27.
3. **운영 인력** : 147명
4. **수용 규모** : 353실
5. **입소 대상** : 약 150명
6. **운영 현황** : 148명 입소

11
해외입국 도민 무료검사 및 공항서비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항입국 시 무증상일지라도 추후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외입국 도민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했다. 그밖에 음성로봇 전화상담서비스인 'AI콜센터'를 운영했다.

●○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 무료 검사 지원

3월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도내 50개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외입국 경기도민들이 검사 안내부터 무료 실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국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기도민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내 50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 해외입국 도민 위한 '전용 공항버스' 및 'AI콜센터' 운영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들의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4월 음성로봇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인 'AI콜센터'를 도입했다. AI콜센터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한 것으로 사람이 아닌 AI음성로봇이 관리대상자에게 1일 1회 자동으로 전화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대상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했다. AI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대상 해외입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3일 이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자가격리자 앱 설치를 안내하고 또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도 1주일 동안 추가로 전화를 걸어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관리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대상자 거주시 보건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음날 해당 보건소에 이상자 명단을 통보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입국 무증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했다. 운영버스는 수원(호텔캐슬), 고양(킨텍스) 등 총 10개 노선 21대 규모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들에게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감안, 부득이하게 자차 귀가가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공항입국 시 무증상일지라도 추후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도였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내에 '경기도민 전용 공항버스 안내부스'와 별도의 대기공간을 마련, 교통국 직원 4명을 배치시켜 버스이용방법 안내 등 해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

3월 28일부터 미국·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공항버스 지원을 시작했고, 4월 1일부터 전체 해외입국 무증상 도민들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외입국 무증상 도민은

안내부스에서 자택이 위치한 시군별 탑승 노선을 안내받은 뒤, 해당 노선의 출발시간과 승차장, 지역별 거점 정류소(하차지)를 확인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안내부스에서는 15개 거점 정류소 도착 후 자택까지 별도 이동편이 준비돼 있지 않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운영 중인 관용차, 콜밴 등 연계교통수단 총 85대를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중국 유학생 교통서비스 지원, 대학과 함께

도내 중국 유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대학 측과 협력해 나갔다. 특히 2월 13일 중국 유학생 100명 이상 재학 중인 도내의 16개 대학교와 '도-대학 중국인 유학생 관리·지원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중국 유학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지원, 외국인밀집지역 대응, 예산 지원, 한중 학생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대학과의 논의 결과,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관할 및 인근 시군 내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민간임대 시설을 섭외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이 직접 지원하거나 물품 구입처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외국인밀집지역 방역은 시군 방역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국 유학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에 기배정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한중 학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 및 시군 단체장 등이 주관하여 양국 대표 학생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대학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유학생을 지원 및 관리함으로써 대학가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12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19 보건방역에는 다양한 언택크기술이 활용됐다.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및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이탈 시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안심밴드',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입국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AI콜센터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이다.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도입됐다. 이것은 자가격리자들 가운데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여 보급한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발열 및 인후통 등의 증상을 자가진단해 전담공무원에게 매일 2회씩 자동으로 통보하고,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본인과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 자가격리자가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늘면서 4월 27일 보다 강력하게 격리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가 도입됐다. 이 장치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떠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하여, 격리지를 20m 이상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시켰다.

처음 안심밴드 도입 계획이 나왔을 때 사실상 '전자팔찌'와 같아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지침 위반 사례가 거듭되면서 결국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했다. 이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일자별 이탈이력 검색이 가능하고 그 경로가 지도상에 상세하게 표출됐다. 자가격리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현행화되고,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 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자가격리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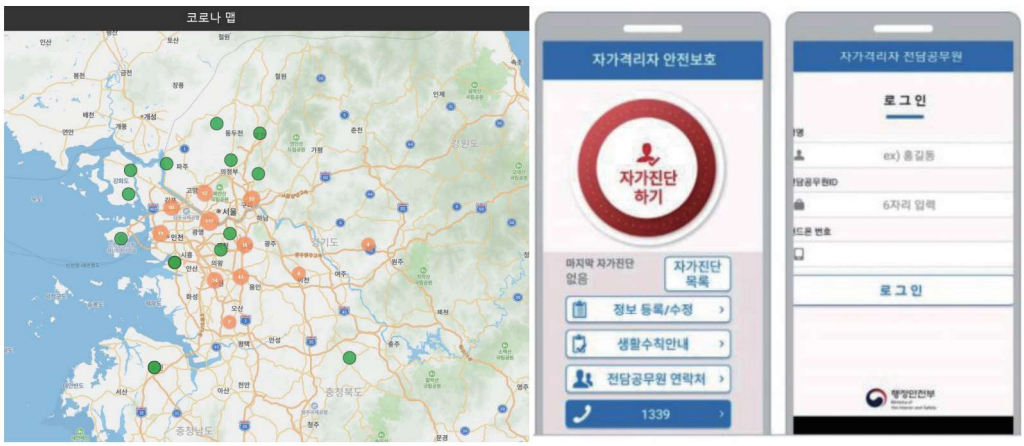
●○ 코로나맵, 마스크맵 등 개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등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익을 증대시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다. 심사를 통해 2~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민간 데이터 발굴·정제·구매 등 과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과제 종료 후에는 사업만족도 조사와 생산성 향상·수익증대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개선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위한 시빅해킹(Civic Hacking)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했다. 시빅해킹이란, ICT(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공공문제를 ICT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활동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을 들 수 있다.



13
‘위험도 사전평가’로 행사 안전관리

각종 행사를 무조건 취소 및 축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정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최 가능한 행사인지를 선별하여 위험도가 낮은 행사는 허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도 관리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안전 모두 고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행사를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10여 개월 이상 이어진 재난상황으로 도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주요행사와 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돼 관련 종사자와 업계가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무조건 취소·축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 위험도 평가지표는 정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했다.

사전 위험도 평가 결과, 개최가 가능한 행사는 방역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위험도가 높은 행사는 위험도 완화방안을 마련, 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에서도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매몰비용을 최소화해 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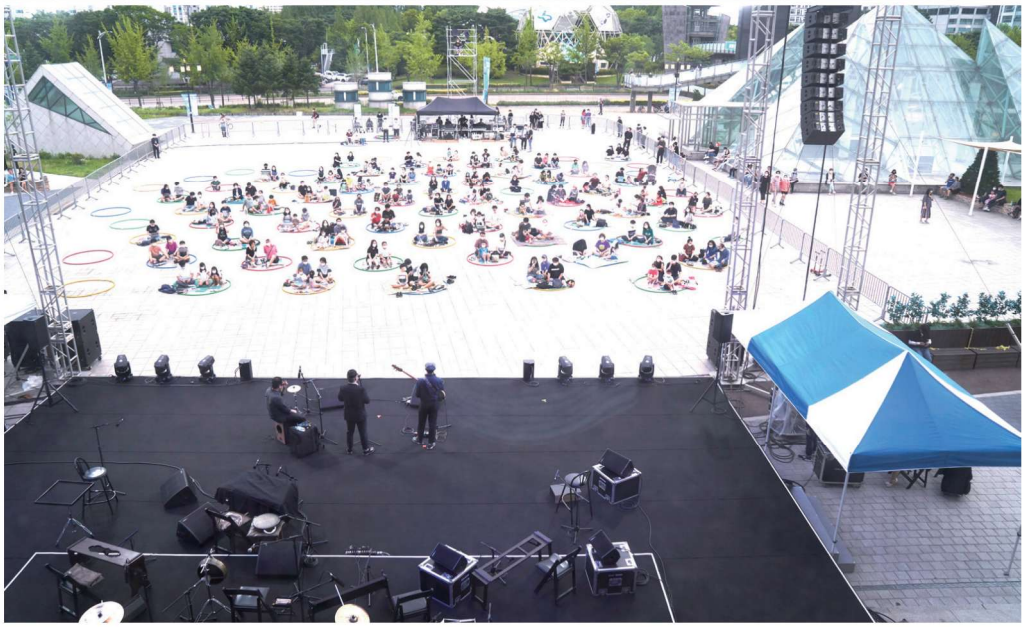
축제의 경우 행사개최일 기준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 시 감염병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행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평가지표는 총 9가지로 밀폐성·밀집성 등 정부의 고위험시설 평가지표 6가지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의 기본방향을 적용했고 '관리성'을 추가, 참석자의 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포함시켰다. 또, 평가 시에 '대체로 가능', '일정수준 가능'과 같이 모호한 세부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각 지표별 참고 가능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광장 등에서 개최한 경기아트센터의 '2020년 리부팅(rebooting)' 공연이었다. 이 공연에 앞서 도는 소관부서의 사전 자체평가 점수와 자체 방역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한 '거리두기 원형좌석존'을 운영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개최 가능한 행사를 선별하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주요 행사에 적극 적용했고, 도와 시군의 각종 행사에 이를 적용하여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갔다.





평가지표(안)

주요 지표	위 험 도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①(밀폐성) 개최공간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②(밀집성) 참석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③(군집성) 참석자의 규모 · 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④(활동성)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⑤(지속성) 참석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 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⑥(관리성) 참석자 특정 여부	모든 참석자 특정가능	일부 참석자 특정 가능	특정 불가(불특정다수)
⑦ (대상의 취약성) 취약계층 · 집단시설 종사자 참석여부	미참석 또는 참석저조	일부 참석	대다수 참석
⑧(관리성) 방역수칙 준수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⑨(시급성)행사불요불급 여부	사업진행 필수단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	단순 홍보 · 이벤트성

14
따뜻한 방역, 착한 기부

경기도는 보건방역을 펼치는 데 있어 방역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방역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도민, 도내 기업, 기관들이 동참하여 자발적 '착한 기부' 운동을 벌이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위생용품,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드림(Dream) 키트' 500세트를 "함께 할 그날 경기도민 모두가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도,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방역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2억 원 긴급 투입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월 취약계층 방역을 위해 191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자 44만3,300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했다.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마스크 긴급 지원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손 세정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 6억7,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스크 2만 개, 손 세정제 1만 개 등 물품을 전달했다.



어린이 집에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

4월 도내 어린이집 1만958곳에 마스크, 소독용품,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것은 정부의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총 55억 1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지원을 통해 철저한 소독 및 발열 체크를 돕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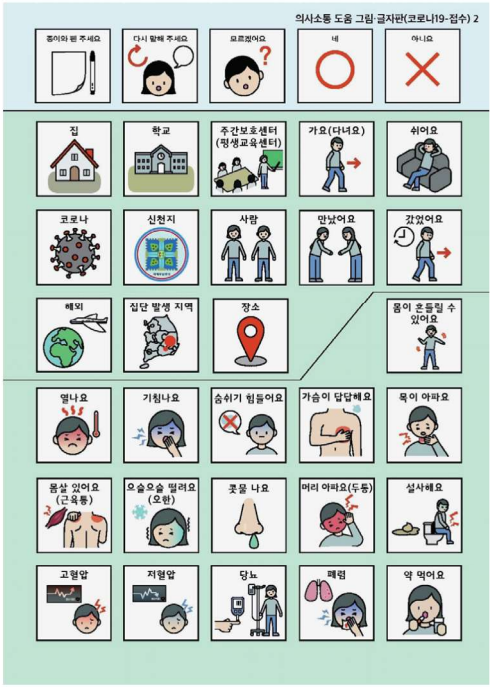


기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 지원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50%를 지원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나 신청할 수 있었다.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기법이 활용됐다.

선별진료소에 장애인, 외국인 위한 그림글자판 비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24곳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을 비치했다.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을 통해 몸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외국인도 정확한 문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부 캠페인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

3월 16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부캠페인 “제 마스크 먼저 쓰세요!”를 진행했다. 혼자서 마스크를 사러 외출하기도 힘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전달하는 기부캠페인이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동참 물결이 이어졌다.



도민과 기업, ‘착한 기부’로 응원과 격려



㈜유버, 자외선 살균소독 로봇 무상 대여

㈜유버는 자외선 살균로봇 5대를 무상 대여했다. 자외선 살균로봇은 상시 소독, 짧은 시간 내 대량 소독이 가능하고 30초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 살균할 수 있다.



휴림로봇(주). 안면인식 발열측정 로봇 무상 대여

휴림로봇(주)은 안면인식 발열측정 로봇 1대를 무상대여 했다. 발열측정 로봇은 자율주행하며 불특정다수의 안면 발열을 측정하고 고열환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세정 · 소독제를 분무한다.

(주)파인텍, 마스크 20만 개 기부

군포 마스크 제조업체 '(주)파인텍'이 마스크(KF 94) 20만 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도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취약계층 방역에 큰 힘이 됐다.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 면 마스크 릴레이 기부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가 면 마스크 릴레이 기부를 진행해 화제가 됐다. 포천 · 용인시 생활개선회연합회를 시작으로 15개 시군 생활개선회연합회가 릴레이식으로 동참해 6,800개의 면 마스크를 제작 · 기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인 및 아동에 손 세정제 기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손세정제를 기부했다. 수호천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1,004개의 손세정제를 노인복지관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을 위해서 300개를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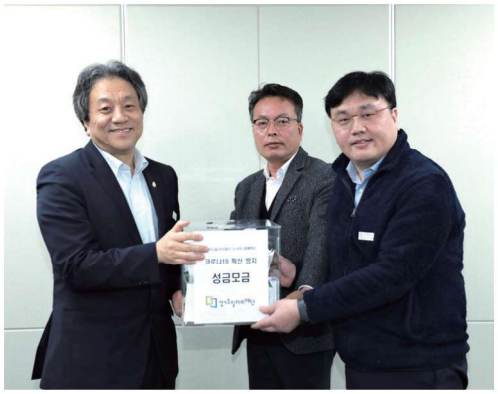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최민정 · 김민석 선수, 마스크 3천 장 기부

성남시청 소속 쇼트트랙 국가대표 빙상여제 최민정 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선수가 마스크 3,000장을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자원봉사자와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모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을 통해 모은 311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기탁했다. 성금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의료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및 방역에 사용됐다.



경기남부 국제라이온스협회, 1천만 원 상당 기탁

경기남부 국제라이온스협회(354-B)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00장 등 1,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경기도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됐다.



㈜서플러스글로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마스크 2만 장 후원

㈜서플러스글로벌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해외 중국 지사를 통해 마스크(KN80) 2만 장을 확보하여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 기탁했다. 기탁된 마스크는 도내 중증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감염예방 등 방역에 활용됐다.



도 청소년수련원, 마스크 2,300장 기탁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2,300장을 도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기탁된 마스크는 시군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사용됐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및 희망드림(Dream) 키트 전달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현장 의료진과 대구지역에 음료 · 도시락 및 방역용품 전달, 자가격리자에 구호물품 전달 및 도서 지원, 선별진료소 전문의료봉사자 모집 · 지원, 온라인 응원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봉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내 자가격리자들에게 응원메시지와 함께 위생용품,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드림(Dream) 키트' 500세트를 도내 23개 시군 34개 보건소를 통해 전달하여 화제가 됐다. 희망드림 키트에는 홍삼, 손소독제, 칫솔, 치약, 물티슈, 즉석밥, 참치캔, 김, 즉석국류 등 개인위생용품과 생필품이 들어 있고 "함께할 그날 경기도민 모두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도민과의 감성적 소통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는 공무원, 자원봉사 주민, 의료진, 보건소 직원, 소방대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방역에 전념하면서도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훈훈한 미담을 만들어 냈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도민들의 미담 및 모범 사례를 널러 홍보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의 방역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민과의 감성적 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특히 GTV 일일 뉴스 등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현장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

도민 밀착형 정책 광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범국민적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 보다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특히 정확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민 밀착형 정책광고를 제작하여 보급했다.





III 경제방역

연대와 응원의 방역

1 선제적 경제방역 196

2 경기도의 결단 '재난기본소득' 208

3 전국 최초, 금융복지형 '극저신용대출' 226

4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229

5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 234

6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238

7 위기도민 발굴 · 지원 '긴급복지' 241

8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247

9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소비' 운동 250

1
선제적 경제방역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경제방패 8대 전략'을 수립했으며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했기에 경기도의 경제방역은 보건방역만큼 치열했다.

●○ 1월 31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제TF'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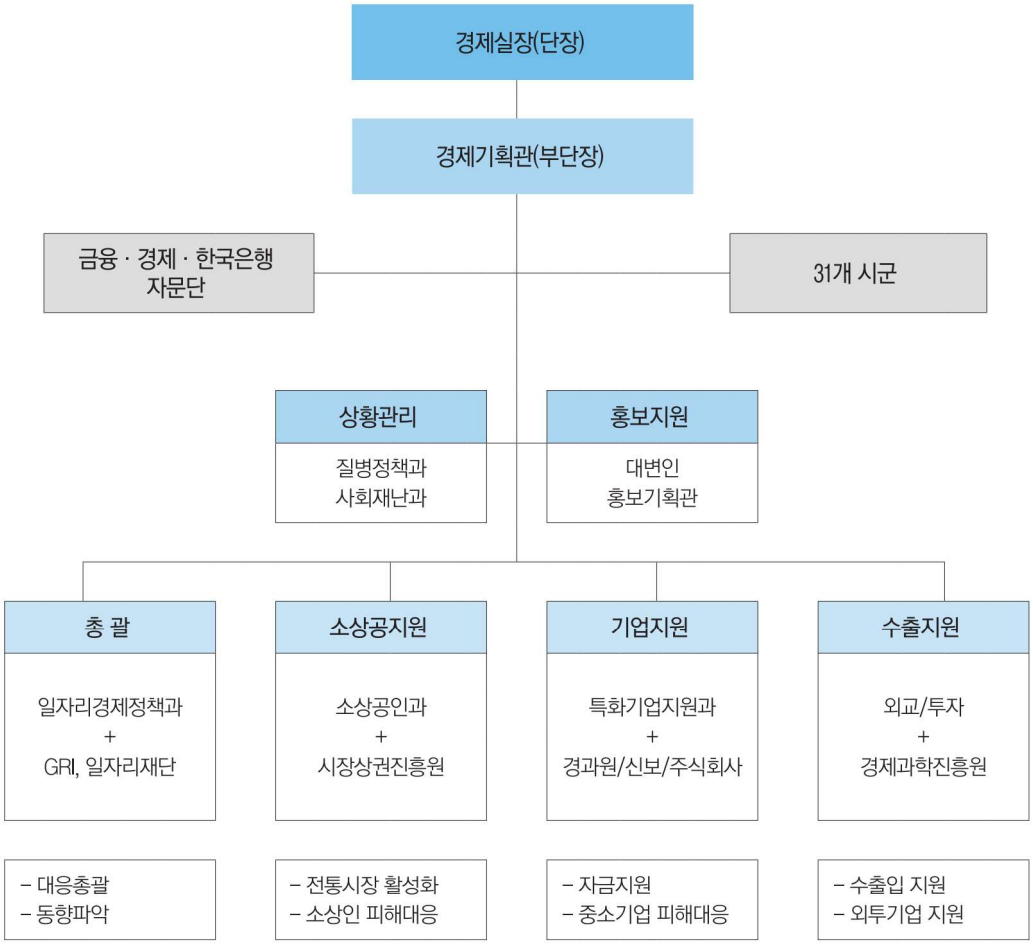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도는 즉각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1월 31일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코로나19 경제 TF팀'을 구성했다. TF팀 구성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TF팀 단장은 경기도 경제실장이, 부단장은 경제기획관이 맡았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일자리' 분과는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연구원, 일자리재단이 참여하여 대응책 총괄과 동향 파악, 일자리대책을 담당했다. '소상공인' 분과는 소상공인과와 시장상권진흥원이 참여, 소상공인 피해대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맡았다. '기업지원' 분과는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피해대응과 자금지원 등의 분야를 담당했다. '수출지원' 분과는 외교통상과와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참여해 도내 기업의 수출입 활동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이 계속되는 동안 TF팀은 매주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정책적 협조를 구하면서 경제방역의 주축이 됐다.

지역 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경제 담당 국장이 포함된 T/F회의를 매주 열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31개 시군 지역경제 담당 국장을 책임자로 지정해 각 지역별 경제분야 긴급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했다.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제TF



●○ 2월 3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제TF' 영상회의

긴급 구성된 경제TF은 구성 직후인 2월 3일에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경제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첫자리인 만큼 이날 회의에는 경제기획관(주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특화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과장, 외교통상과장, 투자진흥과장, 홍보기획관, 사회재난과장, 감염병관리과장, 평화대변인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민간자문단(경제정책자문관, 금융협력관, 금융자문관), 그리고 31개 시군 지역경제 담당 국장이 함께 참여하여 중지를 모았다. 경기도 경제방역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가 진행됐는데, 특히 당시 품귀현상이 시작되던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할 것이다."

– 경기도 김규식 경제기획관

●○ 2월 6일 '경제방패 8대 전략' 발표

2월 6일 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경제방패 8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들의 본격적 추진에 나섰다. 경제방패 대책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뒀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애로 해결부터 자금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재정 신속집행,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방패 8대 전략의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씩을 각각 편성하여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자금지원을 운영하고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율과 월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예정된 국비를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다. 또한, 감염병 우려로 방문객이 줄어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총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 2만 개와 손 세정제 1만 개를 긴급 지원한다. 아울러 시군 및 각 지역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위생 강화, 상인역량 강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간다.

셋째,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확진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시군과 협조해 각 지역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602명을 활용, 취업상담·알선을 집중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 문화·관광 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우선 지원한다.

넷째, 대중국 수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수출보험·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판로개척 지원 등 업체별 피해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8개국에 위치한 11곳의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각국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디섯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피해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나 신용대출 등 각종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한다.

여섯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률 65.3%'를 목표로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투자심사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공용물품을 조기 구매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감염증 피해지역·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취·등록세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곱째,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시제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시항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덟째, 시군과 상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 살리기 캠페인, 지역 내 소비 장려 홍보,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전파 등의 활동을 벌이고 불안감 조성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한다.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도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대중국 수출입 차질 등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방패의 역할을 자처하여 정부, 시군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서 경제방패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경제방패 8대 전략

0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700억 원 지원

02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03 확진자 발생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04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제공

05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설치 · 운영

06 지역경제 하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07 마스크 등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집중 단속

08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 살리기 캠페인

●○ 3월 20일 긴급추경 총 1조 1,917억 원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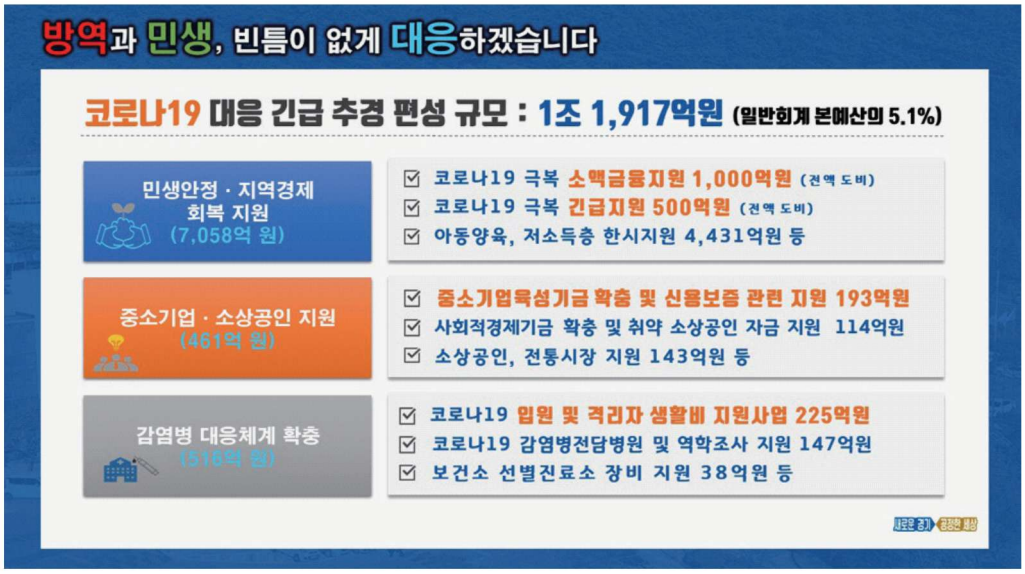
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총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수입 등 도 자체 재원 5,975억 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 원으로 마련했다. 총 1조 1,917억 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3월 20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추경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주로 쓰였다.

먼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조3,200억 원, 지역경제 지원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했다. 대표적으로 도민 1,32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긴급재난기본소득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 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 지원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5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지원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탄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했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 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용했다.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급도 추진했다.

그밖에도 도는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도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탄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4월 9일 총 2조 4,518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방역대책 추진

도는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총 2조 4,518억 규모의 '비상경제방역대책'을 수립하여 4월 9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신속·정확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 '경제방역'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적기금융 지원,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언택트(Untact: 비대면) 플랫폼 구축,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기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2,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을 더 확대해 총 1조 1,20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한 경기신보를 통한 보증서 발급규모를 기존 3조 1,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늘어난 4조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나갔다. 보증서 발급기간도 평균 27일 소요되던 것을 14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둘째,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으로 우선 코로나19로 중단된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참여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 전액을 지급했다. 교육훈련 중단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강사들에게는 훈련비 30%를 선지급했다. 아울러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 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신용카드 등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만큼, 2020년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2,567억 원으로 상향했다. 3~7월 4개월간 할인율을 10%로 높여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갔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재창업을 지원했다.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지원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및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 상권진흥구역, 경기혁신시장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상인 공동체 형성, 지역협업 사업, 온라인 마케팅,

문화·관광자원 활용 특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했다.
넷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위한 유턴기업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해외 전시회나 국외 출장 취소 등 현지 바이어와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마케팅과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섬유기업들이 자체 협업을 통해 생산한 '항균마스크'에 대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 분야 기업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돕고자 10억 원을 투자해 임상시험 지원사업도 함께 벌였다.

다섯째, 언택트(Untact: 비대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는 '인터넷·비대면 기반 온라인 경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만큼, 관련 기반 조성에 12억5,000만 원을 투입했다. 우선 5억2,000만 원을 들여 비대면 채용이 가능한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화폐 결제서비스와 연계한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의 온라인 경제 활성화에도 7억3,000만 원을 투입했다.

여섯째,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코로나19대응 경제TF',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본부',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산단 지원 협력시스템' 등 각종 경제분야 지원 시스템을 지속·운영하면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해 민간과 공공,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했다.

선제적 경제방역의 행보들

1. 31.

'코로나19 대응 경제TF' 구성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격적 활동 개시
- 주 1회 정례회의 진행 및 수시 소집

2. 3.

'코로나19 대응 경제TF' 영상회의 및 대책 마련

- 선제적(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한(precise) 대응체계 구축
- 장/단기 세부계획 논의
  · 주요 업무분장, 피해 현황, 중앙부처 건의사항,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논의

2. 6.

경제방패 8대 전략 발표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700억 원 지원 /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 확진자 발생지역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설치 운영/ 지역경제 하방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 마스크 등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집중 단속 /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 살리기 캠페인

3. 20.

긴급추경 총 1조 1,917억 원 편성

-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

4. 9.

총 2조 4,518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방역대책 추진

- 총 6개 분야에 총 2조 4,518억 원을 투입,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 시행
- 적기금융 지원 1조 8,500억 원 / 고용안정 590억 원 / 소상공인 지원 5,368억 원 / 중소기업수출 지원 48억 원 / 언택트(Untact: 비대면) 플랫폼 구축 12억 원 /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2
경기도의 결단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민생 · 경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한발 앞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단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지향, 비대면 추진, 유효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롤 모델이 됐다.

●○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하다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방역에 온 국민과 정부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보건방역을 넘어 경제방역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건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급방식까지 제안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었다.

●○ 보편적 복지를 향한 경기도의 '결단'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발 앞서 결단을 내렸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3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이것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알리는 도민보고였으며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참석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기도의 결단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단이 나올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고 향후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단은 코로나19로 맞게 된 미증유의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긴급대안이자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 기획조정실과 안전관리실에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위해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소득의 롤 모델을 보여준다.

첫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도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첫걸음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했다. 특히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고소득자 제외가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도 상당하다는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

둘째, 무리한 재원 동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857억 원, 재해구호기금 2,285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예정되어 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쉽지는 않았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게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도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수차례의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노동계층의 모든 고충을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 12월 2일, 가이 스탠딩 런던대(SOAS) 교수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기조 영상 강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0. 4. 9. ~ 4. 30. / 오프라인 : 4. 20. ~ 7. 31.
   - 18개 시군 공동 참여
2. 신청 대상
   - 2020. 3. 23.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 조례의 지급대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2)
   -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신청 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지급대상에 포함
3. 지급 방식 : '기존보유 개인카드 先사용 – 後지급 방식'과 '선불카드' 병용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8. 31. 24시 기준)

구분	합계	온라인(신청 마감)		오프라인	
신청인원(명)	13,019,064	7,077,532	(54.4%)	5,941,532	(45.6%)
지급금액(천원)	2,020,222,230	1,119,059,200	(55.4%)	901,163,030	(44.6%)

5. 의의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 마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경기도는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경제방역정책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포함한 1천3백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에서만 돈을 쓰도록 제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인기는 코로나19기간 더욱 커지며 국가차원에서 크게 주목 받았다"

– 10월 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코로나로 IMF 못지 않은 심각한 경제상황이 올것이 예상됩니다. 방역과 같은 비중으로 경제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대공황에 준하는 뉴딜정책이 필요하고,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을 하더라도 감세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그래서 반드시 일정기한 내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 3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20.3.16.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 시군 재정지원으로 동참 이끌어 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2020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이었으므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가 경기도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면 재정적인 한계로 고민하던 시군들도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러한 재정지원 방안을 3월 30일 발표하자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각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 물결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그 결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 행렬에 합류하게 됐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시군이 자체 예산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결과이기도 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손을 잡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물결을 이루면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군이 동참하면서 2인 가구 이상이 신청할 경우 한도 부족으로 선불카드를 2개 발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4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여 제도개선에 상한을 300만 원으로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카드발행매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발행 수수료 및 세금납부에 필요한 수백억 원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있었다.

●○ 금융사 등과 업무 협약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가 약속한 기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의 경험이 풍부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4월 1일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13개 금융기관, 경기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3개 금융기관은 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카드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에 참여했다. 해당 금융기관 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급운영지침 마련 및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은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했다.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지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하면 신용카드사는 도민이 기존 신용카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협력했다. 농협은행은 선불카드를 발급해 각 지점이나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전달하고 카드를 관리·운영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시 살리고 끊어진 경제순환의 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었다.

●○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오픈과 온라인 신청 진행

본격적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는 4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오픈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홈페이지가 열리는 시점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선불카드 방식 신청자는 4월 20일부터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신청 절차 간소화와 도민 편의성을 위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만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의회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시군을 기다려 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 재난기본소득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가 완료된 18개 시군만 동시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신용카드는 도와 협약을 맺은 하나, 우리 등 13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했다.

선불카드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 이내) 사용 가능했다.

"코로나19사태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정책 방향은 끊어진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 순환의 한 고리를 연결해주는 것, 경기도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해보자고 자임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와 경험 덕분."

– 4월 1일, 이재명 도지사 협약 체결식에서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방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있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정부차원에서의 경제방역정책의 일환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1,300여만 명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가 분명합니다. 코로나 상황관리와 더불어 수 많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도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행복이 바로 나의 가족들의 행복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마른 가뭄에 단비같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

–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복
지
경기도·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접수장소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 1,6 신청일입니다.





●○ 외국인까지 지급대상에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됐다.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 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 명 등 총 10만9,000여 명이 해당됐다. 3월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외국인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었다. 다만 도민들의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긴급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고, 외국인 지급은 시간을 갖고 세부 검토를 거쳐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내국인과 동일한 금액으로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한편, 이의 추진을 위해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했다. 4월 21일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4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 신생아 2만여 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지사 SNS를 통해 건의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4일부터 거주확인이 되지 않아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세심한 정책 설계로 올해 신생아 22,782명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이 대리인 부모를 통해 신청·지급됐다.

●○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20.4.20.~7.31.까지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55,000여명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시스템상 미신청인에 대하여 추후 확인 후 종료일까지 신청토록 우편 등을 발송했다.

●○ 신청서는 1장으로 간단히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위임장 포함)는 관련 서류를 한 페이지에 축약 신청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매뉴얼을 보급하여 발급에 따른 행정서비스 시간 단축 및 편리함을 높였다.

●○ 예능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홍보

전대미문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했다. 그래서 사업 취지, 지급 대상,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등 도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알려 나갔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능으로 익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추진했다.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예능적 재미를 가미하여 제작한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면서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는데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재미가 곁들여져서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즌 1은 5월 7일 ~ 5월 13일에 진행됐고, 시즌 2는 6월 25일 ~ 7월 15일에 진행됐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심층상담센터 마련

- 최초로 기획, 보완, 실행되는 정책인 만큼, 지급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도민들의 문의뿐만아니라, 일선 담당 시·군 공무원들의 질의·응답을 위한 창구 개설 필요성에 도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심층상담센터 T/F'를 구성하여 전화상담, 온라인 질의 응답, SNS 소통 등을 실시했다.

- '20.4.21.~5.29.까지 접수된 민원은 22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했기에 센터 인원 30명의 직원이 밤 낮 없이 최선을 다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적 민원처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모델이 되다

경기도가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4월 1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정부가 경기도의 보편지급방식을 따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었다. 총 지급 규모는 12조2,000억 원이었다. 지급방식을 보면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 선택인데, 사용기한은 경기도처럼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보조를 맞췄다.

또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보유 카드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의 선례를 적용했으며, 정부와 경기도 모두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5부제를 적용했다. 기부금의 경우, 경기도는 자율기부운동을 전개했는데 정부도 자율기부운동을 추진했으며, 단 경기도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와 연계한 데 비해 정부는 3개월 내 미신청 시 자동기부토록 한 점이 달랐다.

또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었으나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실 수령액은 147~287만 원이 됐다.

이처럼 경기도가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진행한 모범적 선례와 지급시스템 및 방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 시행방식으로 준용 적용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31개 시군)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일시적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vs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 24.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접 발표	시행 발표	– 4. 3. 선별지급 발표(소득하위 70%) – 4. 30. 보편지급 발표
처음부터 보편적 지급 방침	지급 방법	선별 ▷ 전국민 '보편'으로 전환
전 도민 (*도내 31개 전 시군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지원 대상	전 국민
4. 9. ~ 4. 30. (선불카드 : ~ 7. 31.)	신청 기간	5. 11. ~ 6. 18.
31개 시군, 도 지역화폐 운영사 13개 신용카드사(4.1.)	협약기관	전국지자체, 9개 신용카드사(5.8.)
– 온라인 : 신용카드, 지역화폐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운영) – 오프라인 : 선불카드 (주민센터, 농협 방문)	신청 방법	– 온 · 오프라인: 신용 · 체크카드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카드연계 은행 방문) – 온 · 오프라인 :선불카드, 상품권 (온라인 :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센터, 지역금고)
– 경기도 : 1인 10만 원 (4인 가구 40만 원) – 시군 : 1인 5~40만 원 추가 지급	지급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기존 보유 신용카드 사용 가능)	지급 수단	신용 ·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취약계층은 현금 선지급(전액 국비))
– 신용카드 : 선 사용 후 차감 – 지역화폐카드 : 포인트 지급 – 선불카드 : 포인트 지급	지급 방식	– 신용 · 체크, 선불카드 금액 충전 – 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 제한 –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 외)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도 사용 가능	이용 범위	– 신용 · 체크카드 (지역 제한): 특**광역시, 도 (업종 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 제한) 특*광역시, 시군 (업종 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3개월 한시적 사용 (8.31. 일괄 사용 마감)	이용 기한	3개월 한시적 사용 (8.31. 일괄 사용 마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5부제 운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자율기부운동 전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연계)	기부	자율기부운동 추진 (3개월 내 미신청 시 자동기부되는 방식)

●○ 재난기본소득, 골목상권 살렸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시장에 풀린 만큼 그 경제적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졌다. 도는 경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샘플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56%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업종 중엔 식품·음료 자영업자의 77%, 상권 유형별로는 전통시장의 67%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해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매출액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에는 평균 매출이 2,178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기인 2~3월에는 1,44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4월 9일 이후) 1,710만 원까지 회복했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로 지역상권에서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효과를 확인한 도는 모든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소비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갔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7월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2~3월 월매출은 종전의 66%에 그쳤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월매출이 18%나 뛰어올랐다. 종전 매출의 84% 수준으로 상당 정도 회복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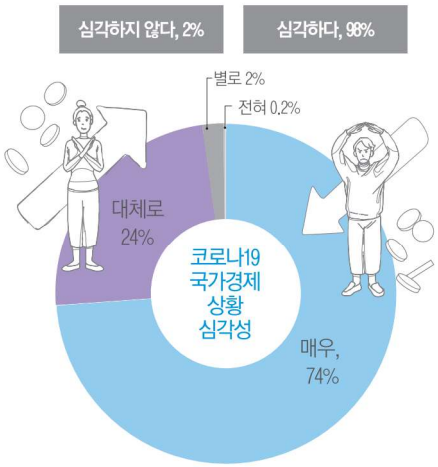
– 경기도 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필요할까?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긴급 여론조사(3. 16. ~ 17.)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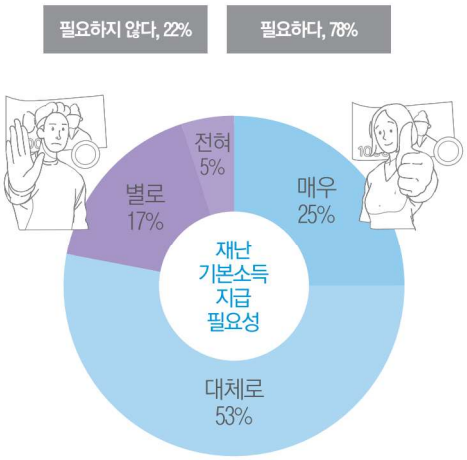
- 도민 98%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 심각성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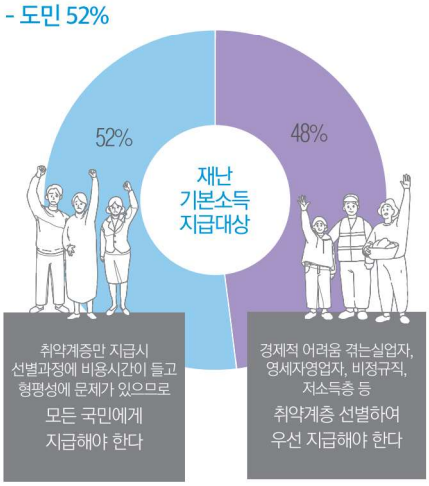
- 도민 78%



▶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도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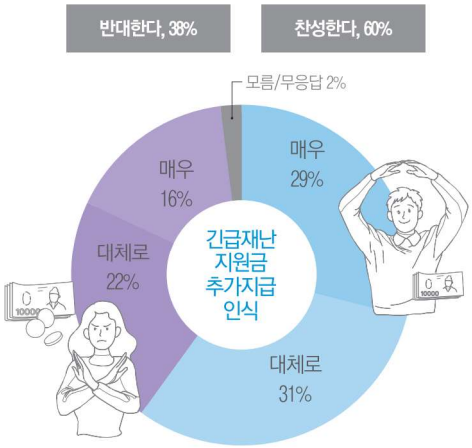


▶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긴급여론조사(6. 6.)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

- 도민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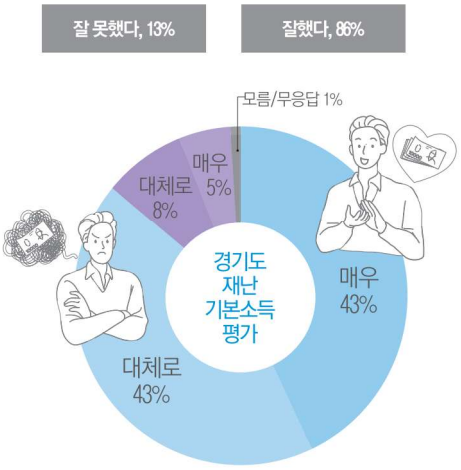
▶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

재난기본소득, 효과 있었나?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조사(4.2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 도민 86%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평가

○ 경기연구원, 재난기본소득 분석
(6. 3. 발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매출,
39.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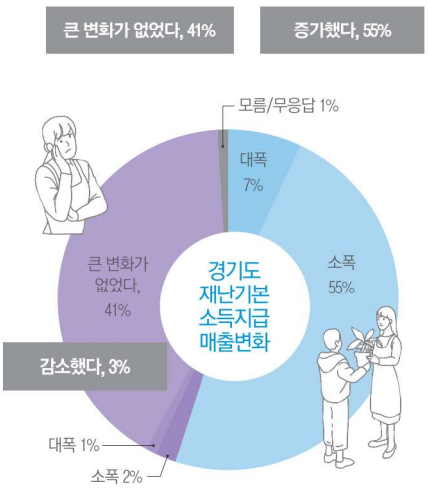
(지급 후 6주 평균, BC 카드 기준)



○ 경기도, 경기도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 대상, 재난기본소득 효과 조사(5. 6. ~ 5. 8.)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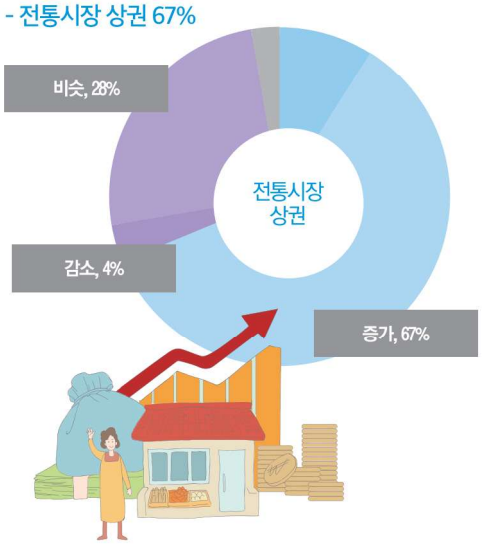
- 가맹점 56%



▶ 가맹점 매출 변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 증가했다."

- 전통시장 상권 67%



▶ 전통시장 상권의 매출 변화

3
전국 최초, 금융복지형 '극저신용대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 도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금융과 복지가 합해진 새로운 개념의 대출로서 생활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일회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2,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었다.

●○ 전국 최초, 소외계층 위한 극저신용대출

경기도의 경제방역은 도민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돌아보며 그 범위를 넓혀갔다. 신용도가 낮은 도민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복지형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도 그중의 하나로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3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추경예산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포함했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도민들이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경기도민으로서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복지플랫폼 www.ggwf.or.kr) 및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동시 진행했다. 또한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T. 1800-9198)를 운영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의 특징은, 첫째, 50만 원까지 무심사 대출(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심사를 받지 않고 50만 원을 제1금융권보다도 저렴한 연 1%의 금리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었다.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대출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셈이었다. 심사 대출의 경우엔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한데 심사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둘째,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했다. 즉 금융과 복지가 합해진 개념이었다. 당장 생계의 위기에 부딪쳐 앞이 캄캄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사업이기에 심사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도가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밝힌 것처럼 "재원 부족으로 모든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겹친 나머지 긴급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 2, 3차에 걸쳐 지속적 지원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갔다. 금융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시도인 만큼 새로운 설계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무심사 대출 30,354명, 심사 대출 6,253명 등 총 3만6,607명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는 7월 15일부터 시작됐다.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었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었다. 또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었다.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아 무심사 대출 12,139명, 심사 대출 3,706명,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32명 등 총 15,877명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도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많아 경제방역의 필요성이 크다는 반증이었다. 도는 이러한 판단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계속 추진하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15일부터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추진했다. 또한 단순히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갔다.

4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었다. 골목상권은 침체되고 수출 길이 막힘으로써 커다란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긴급지원'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및 충격 완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최대 300만 원)에 50억 원, 국내 판로 지원(최대 200만 원)에 1억 원을 편성했고,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최대 150만 원)에 5억 원 등을 추가편성 했다.

●○ 피해 복구 위한 긴급자금

코로나19 국내 확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도는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5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2월 12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지원 규모(200억 원)를 초과하여 접수가 됐다.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도는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월 14일 긴급하게 중소기업 대상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하여 총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지원 규모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된 규모였다.

그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상황이 점점 더 커지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금융대책 추진이 필요해졌다. 이에 4월 10일 코로나19 특별자금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총 1조 1,200억 원으로 다시 확대·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리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보액 2,000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총 1조 1,200억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금액은 기존의 지원 규모보다 9,200억 원이 추가된 규모였으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2조 원의 56%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시설자금 8,000억 원가량을 제외한 가용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장기화에 따라 9월 1일, 코로나19 특별자금 규모를 기존 1조 1,200억 원에서 1조 3,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확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했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자금 1,700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예비자금 중 1,000억 원은 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금으로 배정됐다.

특별자금 긴급지원 대상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했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해 주었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내에서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었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T. 1577-5900) 25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 상담·접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했다.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2월 12일 시작하여 9월 29일 현재까지 중소기업 1,896건을 신청받아 3,816억 원을 지원했고, 소상공인 13,758건을 신청받아 3,76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7,583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자금소진 추이를 볼 때 당시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기존 자금 지원대책(총 2,500억 원 규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도는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및 골목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대상이 됐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원 대상 점포가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이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도민에 대해 지원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폐업충격 완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최대 300만 원)에 50억 원 및 국내 판로 지원(최대

200만 원)에 1억 원을 편성했고,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최대 150만 원)에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29일 기준 중소기업 1,063건 3,816억1,000만 원, 소상공인 13,016건 3,766억7,200만 원, 총 14,079건 7,582억8,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내 지역경제 침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피해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지원

1. 지원 개요 : 총 1조 3,900억 원 (중소기업 5,200억, 소상공인 5,000억, 예비자금 2,700억, 고용안정기업 1,000억)
   - 1차 확대 : 1,300억 원 증액(700억 원 → 2,000억 원)
   - 2차 확대 : 9,200억 원 증액(2,000억 원 → 1조 1,200억 원)
   - 3차 확대 : 2,700억 원 증액(1조 1,200억 원 → 1조 3,900억 원)
2.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지원 기간 : 2020. 2. 12.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 (또는 자금 소진 시)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	5,200억 원	5,000억 원
		총 1조 3,900억 원(예비자금 2,700억 원 포함)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조건 면제)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	업체당 1억 원 이내
	융자 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	5년(1년 거치 4년 균분)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보증서
	이차 보전율	1.5%	2%
	대출 기관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	
보증	보증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	업체당 1억 원 이내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0.8% (고정)	

4.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 대상 : 자금지원 대상과 동일
   - 유예 범위 :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 기간 : 특별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5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

경제방역은 단순히 금융 및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서 소독, 돌봄, 방역 등 관련 직무를 중점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등을 일자리로 이어주었다. 또한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채'를 시행했다.

●○ 징검다리 일자리로 고용위기 넘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공공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한 후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2019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방역의 일환으로서 추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업종에서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와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구직자가 급감한 돌봄·요양, 교육서비스 관련 직무를 중점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인 도민으로,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참여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사업장에 배치돼 해당 업체에서 최장 10개월간 근무하며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고 참여기간 동안 맞춤형 취업교육과 직무별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364원으로, 자격증 응시료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수강료도 개인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했다. 또한 취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징검다리 매니저'를 활용해 진로상담은 물론, 취업 코칭과 수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도왔다.

징검다리 일자리를 통해 참여업체는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받고, 참여자는 공공·공익분야의 일 경험을 통하여 직업역량을 배양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징검다리 일자리가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상황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좋은 일자리로 이어주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 준 것이다.

2020년에 2차에 걸쳐 추진했는데 '1차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gjfin.saramin.co.kr)를 통해 접수를 받았고 총 94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에 배치했다, '2차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서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할 총 73명을 선발하여 2020년 9월 28일 현재 총 182(대체인원 17명 포함)명 일자리 창출과 수시 취업정보 제공으로 총 1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고용 사각지대, 노인 및 특고프리랜서 등 집중 지원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맞은 도내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 것.

도는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 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시군마다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고 이 지원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2만8,334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분야에서는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간 지원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 간 지원했다.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하되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외에도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고용지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5,000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력양성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훈련 중단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기관·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선지급했다. 즉 훈련기관에 훈련비 30%를 선지급해 기관 운영 및 강사인력 생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중단됐던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 원격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육 참여 훈련생들에게는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기존 오프라인 강의와 마찬가지로 훈련수당 전액을 정상 지급했다.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고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채'를 시행했다. 제1회 통합공채에서 채용 인원은 194명 규모였는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원서접수에서 2015년 공공기관 직원 통합공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지원자에 무려 6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각 공공기관별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함으로써 고용위기 가운데서도 청년 일자리 제공에 기여했다.

고용위기 극복에 머무르지 않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박람회, 공공일자리 사업, 디지털 뉴딜 정책 등 각종 맞춤형 핀셋정책 추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대책본부를 '비상경제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도민 수요와 기대효과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갔다.

▷ 새로운 경기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1. 추진 방향
   - 공공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 발굴 및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
   - 코로나19 대응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업종(방역, 돌봄, 소독 등)에 부족한 일자리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극복 및 사회적 가치 확산
2. **지원 내용** : 일자리 제공, 취업 연계 및 인건비 지원(시급 10,364원)
3. **예산 규모** : 46억1,000만 원
4. **추진 방법** : 공기관대행(경기도일자리재단)
5. **참여 현황** : 총 182명
   - 1차 : 총 102명(공공기관 102명)
   - 2차 : 총 80명(공공기관 13명, 사회적경제기업 67명)
6. 사업기간
   - 1차 : 2020. 3. 1. ~ 2020. 12. 31.(10개월)
   - 2차 : 2020. 6. 1. ~ 2021. 3. 31.(10개월)
7. **취업연계** : 19명(공공분야 6명, 민간분야 13명)/ 2020. 9. 28. 기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 **추진방향** : 생계 위기를 맞은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지원
2. **사업비** : 150억 원(국비), 시군별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른 차등지원
3. **사업주체** : 고용노동부(국비 확보), 경기도(사업 총괄), 시군(사업 수행)
4. **사업기간** : 2020. 4. 1.(접수) ~ 4. 20.(시군 교부)
5. 지원 분야
   - 무급휴직 근로자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스포츠 강사, 대리운전원, 연극공연 종사자 등)
6. **지원 내용** : 월 최대 50만 원, 2개월(40일)

6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병가를 받아야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 · 업무정지가 되거나 소독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경우 병가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상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 폐쇄 · 업무정지 · 영업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100% 국비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가 되거나 소독 명령을 받아 영업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국비로보상해 주었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9월 29일 현재까지 방문점포 1,223개, 휴업점포 1,480개 업소 및 기관에 대해 3,876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 취약노동자의 병가로 인한 소득손실 보상

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6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 긴급지원에 나섰다.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이다. 이것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사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난 것처럼, 아파도 쉴 수 없고 위험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들이 일당 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집단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준수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요양보호사 그리고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했고, 코로나19 양성판정 확진자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서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집합금지로 인한 영세사업자 위기 지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점점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과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였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했는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단 영세업소라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소의 경우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가 별도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7

위기도민 발굴·지원 '긴급복지'

도는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긴급복지 자격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생계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위기가정을 집중·발굴하여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갔다.

●○ 위기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시행했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000원)이고 재산기준이 시 지역 2억 원 이하, 군 지역 1억7천만 원 이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4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정부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에서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기준은 시 지역 2억8,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한 일반과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도는 세 번째 기준완화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기준을 더욱 확대했다. 생계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에서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5만 원)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50% 이상'에서 '매출 감소 30%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보다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지원을 통해 생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도민 6,264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753억 원을 지원했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정부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긴급복지의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도는 정부의 지원 금액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퇴원 전까지' 이며 지원금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통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444가구를 대상으로 26억 원 상당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다.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의 생계 위기 해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4월부터 7월 31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로, 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4만3,382가구와 차상위계층 6만1,338가구 등 총 30만4,720가구에게 총 1,763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카드를 지급했다.

또한 도는 한시적 생활지원비가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유지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지역별, 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과 생계 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및 입원자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생활지원비)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과 중복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자가격리 후 바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임시·일용직, 플랫폼 노동자들 가운데서 생활지원비 대상을 집중·발굴하여 긴급복지 생계비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이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월부터 9월 30일까지 20,870가구에 173억4,800만 원을 지급했다.

●○ 하절기 위기가구 집중 · 발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위기가구를 집중·발굴 지원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취약아동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집중·발굴해 긴급복지, 무한돌봄,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특히 하절기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온열환자 예방 및 보호도 함께 추진했다.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보호지원, 폭염 긴급구조자 시군 연계 보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추진했다. 또 544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무한돌봄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었다. 2개월간의 집중발굴을 통해 89,394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9월 말 현재까지 91,077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623억 원 상당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국가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 **사업 기간 :** 2020. 4. ~ 12.31.(한시적 기준완화 기간)
2.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 · 일용직, 매출감소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등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 탈락자 또는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3. **지원 내용 :** 45만 원 ~ 168만 원 (가구원 수별 차등)
4. **지원 현황 :** 8,270가구
5. **총사업비 :** 17,402백만 원

정부의 긴급복지 VS 경기도형 긴급복지

구분	정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1차 확대	2차 확대
위기 사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킴	1개월 이상 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한 일반과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는 25%) 등	1개월 이상 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한 일반과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는 25%)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 원)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475만 원)
재산 기준	군 170백만 원 시 200백만 원 금융기준 1,212만 원	군 2억2,100만 원 시 3억2,400만 원 금융기준 1,712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1. 사업 기간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과 동일
2.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
3. 지원 내용 : 의료 500만 원 내 지원
4. 지원 현황 : 1,444명
5. 총사업비 : 17,402백만 원

정부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vs 경기도의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구분	정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의료비 500만 원 이내
신청 기한	퇴원 전까지	퇴원 전까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1. **사업 기간** : 2020. 4.~7. (4개월)
2. **지원 대상** : 2020년 3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
3. **지원 내용** : 지역화폐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 **지원 현황** : 30만4,720가구(기초생활수급자 24만3,382+차상위계층 6만1,338)
5. **총사업비** : 176,371백만 원(국비 100%)

8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한정판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란 20만 원 충전으로 2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로서, 기존의 지역화폐에서 제공하는 2만 원 혜택에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당 3만 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도민의 힘이 모여 엄청난 소비촉진 효과를 일으켜서,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이후 경기지역화폐 신규 등록과 사용 금액이 각각 두 배가량 증가했다.

●○ 최고 혜택 제공하는 소비지원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 원 충전으로 2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즉, 20만 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 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 원 사용 시 3만 원(15%)을 추가 지원해 합계 총 25%,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15% 인센티브가 없으며 20만 원 이상은 최대 3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으로서 마련한 것이다.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 정책이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했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한다. 사후 인센티브(15%. 3만 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소비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었다.

●○ 지역화폐 사용액 및 신청 2배로 급증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000억 원이었다. 개인별 지원금액 3만 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도민의 힘이 모여 엄청난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했다.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 이후 경기지역화폐 신규 등록과 사용 금액이 각각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9월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금액은 하루 평균 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3개월(6월~8월) 동안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 사용금액(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 제외)인 일평균 63억 원에 비해 227%나 증가한 셈이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발행은 이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화폐 신규 등록도 크게 늘었다. 한정판 지역화폐 지원 계획을 발표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단 12일 동안 신규 신청 건수가 일평균 1만1,741건에 달했다. 이전의 3개월(6월~8월) 동안 신규 등록은 일평균 5,949건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197%)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골목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소비패턴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전환시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 효과가 컸다.

9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소비' 운동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장터,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착한소비' 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착한소비 운동은 온라인 공연·강의콘텐츠 제작 등 문화예술 분야로도 확산됐고, 도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다.

●○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한 '착한소비' 운동 전개

경기도는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주 1회 휴무, 이천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일평균 1,0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의 정기적인 휴무를 통해 외부식당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다.

또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시의 농축산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구내식당 식재료를 이천에서 우선 구입하고 도청 내에 토요장터 및 상설판매관을 운영해서 이천 농특산물 구매를 촉진시켰다. 3월에는 도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딸기 공급 농가의 '친환경 딸기 팔아주기' 행사를 벌여 단체구매를 통해 딸기 농가를 돕기도 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착한소비' 운동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한소비 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등을 목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착한소비 운동은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생겼지만 정작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소비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자 소비 진작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 도지사, "착한소비에 동참해주세요!"

3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도내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엽채류 11개 품목을 담은 4kg짜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한 상자를 2만 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이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학교급식 계약재배 출하농가 돕기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가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준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홍보에 나서자 준비한 물량 전부가 두 시간 만에 완판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개학 연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산물 특성상 제때 출하를 못하면 고스란히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348톤이나 된다.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이번 기회에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도 준비하고 농가의 시름도 나누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연대와 응원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도지사 적극적 홍보에 탄력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는 6월까지 무려 18차례 계속해서 진행됐고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도내 농가에 큰 힘이 됐다.
특히 4월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롭게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성과를 올리자 여러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주, 양평, 성남에서는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장터 운영 노하우와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지역농산물 팔아 주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수백 미터가 넘는 차량이 행렬을 이루며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도 인증샷을 찍거나 가족들과 얘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착한 도민들의 훈훈한 풍경이 지역 명물이 됐다. 좋은 품질, 착한 가격, 착한 소비의식에 따뜻한 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경이었다.

●○ 드라이브 스루 장터 개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 농가를 도우면서 나들이도 하고 다양한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1석3조' 드라이브 스루 장터를 5, 6월 경기도 전역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학교 개학 연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에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자, 드라이브 스루 장터 상품 판매 행사를 지역별, 상품별로 확대한 것이다. 고양 플라워 마켓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임진각 등 각지에서 판매행사가 열렸고, 이 장터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도록 해서 농가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 전국적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 추진됐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 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려준 1,000여 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했고 기업,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도 활발히 이어졌다. 연예계에서도 영화배우 안성기·유준상에 이어, 가수(B1A4) 진영, 개그우먼 송은이·홍현희, 개그맨 조문식·김용명, 인플루언서 대도서관, 탤런트 백봉기·김야니, 크리에이터 잠골버·마크·구재희 등 다수가 참여헤 소상공인들에게 "힘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선결제 캠페인이 활기를 띠자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선결제 캠페인이 다양하게 파생되어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컸다.

●○ 건물주들 한마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건물주들이 "임차인 없이는 건물주도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도내에 '착한 임대인' 운동 붐이 불었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말한다.

3월 1일 경기도 상권 공동체인 '운정가람상가번영회(회장 강진화)'에서 8개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월세를 10~20%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원세류 2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 수원 로데오시장의 건물주들이 '상생의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내 골목상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착한 건물주 운동 확산 동참 선언식'을 개최하고 임대료 인하 및 향후 3년간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도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도내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사례들을 모은 웹자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 홍보하고,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킨텍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자재단 등이

기관 내 입주시설의 임대료를 20~35%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도 소유시설인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등도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도는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했다.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분을 긴급 지원한 것이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경기벤처센터에서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50% 할인해 주었다. 도 관리 민자고속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의왕휴게소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매출액 감소세를 고려해 3~5월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것이다. 이로써 의왕휴게소 입점 중인 총 12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산업단지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가량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 안전하고 청정한 곳으로 '착한 여행'

2021년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유료관광지(80곳) 이용권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착한 여행 캠페인'에 대한 반응도 뜨거워서 할인권 오픈 첫날부터 입장권이 완판됐다.

또한 도는 5월 초 봄나들이 철을 맞아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내 '안심 드라이브 코스' 10곳을 선정하여 홍보했다. 외출자제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곳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도민들의 기분전환과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문화 예술분야로 이어진 착한 소비

'착한소비 운동'은 도민호응과 성과를 거두며 문화예술 분야로 이어졌다. 먼저 차안에서 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드라이브 씨어터'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됐다. 경기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문화예술 공연과 독립영화를 공모하여 공연 작품

40편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독립영화 50편을 구입해 그중 10편을 드라이브 씨어터(자동차 극장)에서 상영한 것이다. 나머지는 박물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상영했고, 드라이브 스루 씨어터 주변에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상권을 살렸다. 또 드라이브 스루 장터와 드라이브 스루 놀이터 정보를 담은 지도인 '터-맵'을 제공하기도 했다.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스포츠인 지원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등 동영상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했다. 특히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온라인 생방송 방식의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을 진행해 프리랜서 강사들을 도왔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사업운영 정상화 시점까지 스포츠클럽 77개소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지도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 총 73명의 스포츠강사 신청자 중 10개 시군에서 42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경기아트센터는 문화나눔 공연단체, 문화예술사회적경제기업, 예술단체 등 245개 공연단체의 작품과, 코로나19극복 경기도 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을 운영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꺅!tv 경기아트센터'(구독자 1만9,000명)와 네이버TV 등에서 공개했다.

이처럼 드라이브 장터로 화제가 됐던 착한 소비 운동이 문화예술계로 번지면서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됐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착한소비 운동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다.

●○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도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에 반려식물로 꽃 화분을 지원하는 방법과 착한 꽃집을 이용한 '5월 가정의 달' 꽃 선물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했다.

또 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바꿔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상반기에 신속 사용하도록 하고, 도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도민 사용 인증 릴레이' 이벤트, 그리고 지역 음식점, 미용실, 동네빵집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사용 시 차감하는 '착한 소비 동행 캠페인'도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단체, 노인이 생산하는 사회적가치 생산품들의 공동브랜드 홍보·판매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고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의 일환이 됐다.

이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착한 소비 운동을 통해 도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 줄 뉴스 – 경기도의 끝없는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당 2,000만 원, 제품개발부터 생산 · 판로개척까지 맞춤형 지원
- 사회적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시 행정처분 면제, 인건비 선지급 등 지원
- 농식품 수출 피해기업 및 피해농가, 경기도농업발전기금(662억 원) 우선 지원
- 총 13억5,000만 원 투입, 수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79가지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 및 효율화
- 여행, 공연업 등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 기존 모범음식점 지원하던 저금리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로 확대
- 위기에 빠진 사회적경제기업, 100억 원 규모 긴급융자 지원
-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 택배비 지원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화훼 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 지원
- 경제적 타격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업무처리, 2주 내로 단축하여 신속보증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에 44억 원 투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지원
-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사업화자금, 일부 조기 지원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의 수행기간 연장,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43억 원 상당의 지방세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위해 '온라인 상시전시관' 개설
- '디지털 무역상담실' 설치 · 운영으로 중소기업 비대면 수출 지원
-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기준 완화,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수출기업 지원 위해,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 언택트 방식의 해외마케 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활로 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통합 구매상담회' 개최



Ⅳ 심리방역

공감과 배려의 방역

1 선제적 심리방역 260

2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비상 가동 265

3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전담 선별진료소 269

4 도민의 마음 돌봄 프로젝트 276

5 심리지원을 위한 안심정보 프로젝트 280

6 사회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284

7 현장과 공감하는 심리방역 287

1
선제적 심리방역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유행될 만큼 일상 속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이 만연해졌다. 이러한 심리적인 재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트라우마 확산, 멘탈데믹'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안, 우울감 등의 빠른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 심리방역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작됐다.

●○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

경기도의 심리방역은 2020년 1월 29일 시작됐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경기도 내 첫 확진자(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3일 만이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코로나19가 2020년 한 해 동안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의 생활을 뒤바꿔 놓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점이었지만 한발 앞서 심리방역에 나선 것이다.
재난 시 심리지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메르스 유행 때였다. 그 이전 사스와 신종플루 유행 때만 해도 심리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지만, 메르스 유행 때 국민 불안이 증가되면서 감염병 심리지원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경기도는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심리지원 개입을 시작했다. 메르스 당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심리지원 개입이 시작된 데 비해 상당히 빠른 움직임이었다. 보건방역과 마찬가지로 심리방역에 있어서도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위험도에 따른 선별 대응

경기도의 심리지원은 위험도에 따라 첫째, 격리자 및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둘째, 확진자 및 가족,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등의 이원적 체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격리자 및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은 광역 및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심이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운영 총괄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광역 및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질적인 심리지원의 주축이 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비상 가동한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과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종사인력이 가동인력으로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도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첫째,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상담을 위한 24시간 핫라인((T. 1577-0199)을 운영했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별 격리자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전화 또는 대면 방식),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지역사회 의뢰 등을 담당했다.

둘째, 확진자 및 가족,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전담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단장 심민영)'을 운영했는데, 그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총괄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확진자 및

가족,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전담한 기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였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핫라인(T. 02-2204-0001)을 운영했고 보건소는 확진자가 퇴원할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심리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코로나19가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축된 경기도 심리지원 시스템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심리지원 제공은 48만8천여 건*인데 이 중 경기도가 44%로 1위이며, 교회 및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있었던 인천의 경우 10.7%로서 2위이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자 7만6천9백여 명**(확진자 및 가족 285명, 격리자 75,405명, 일반도민 1,294명)에게 215,231건의 심리지원 상담이 제공됐다.

이러한 심리지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 하던 많은 도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맞춰 심리회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심리지원 사례



[사례1] 식당 운영 중 확진자가 다녀가 격리된 대상자

손님 중 확진자가 다녀가 연락처 및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하루 평균 70여통의 컴플레인 전화 받아 생활고, 우울감 호소

[사례2] 기관에 외부인 유입으로 인해 회사내 확진자 발생

기관 내 외부인 유입으로 회사내 직원들이 격리되면서 휴업된 부분에 대한 분노감,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





[사례3] 기존 신체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된 대상자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되면서 격리된 기간동안 치료받지 못하는 분노감, 신체 건강에 대한 불안감 호소

* 9. 16. 기준 국가트라우마센터 실적 현황

** 9. 16. 경기도 심리지원 실적 현황

경기도 심리지원 네트워크

경기도는 자체적인 재난심리지원 운영을 통해 격리자 및 일반도민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면서 확진자 및 가족, 유족의 심리지원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했다.

1.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운영 총괄 및 행정지원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4시간 핫라인(1577-0199) 운영, 격리자 및 일반도민 심리지원
- 보건소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지역별 격리자 및 일반도민 심리 지원,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지역사회 의뢰
- 국가트라우마센터(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총괄) : 수도권의 확진자 및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원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기저 정신질환 및 불안장애가 심했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자 극도로 불안해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나 스스로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고 담당자가 사비로 치료비까지 미리 지급해줘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진료비는 반환해 드리고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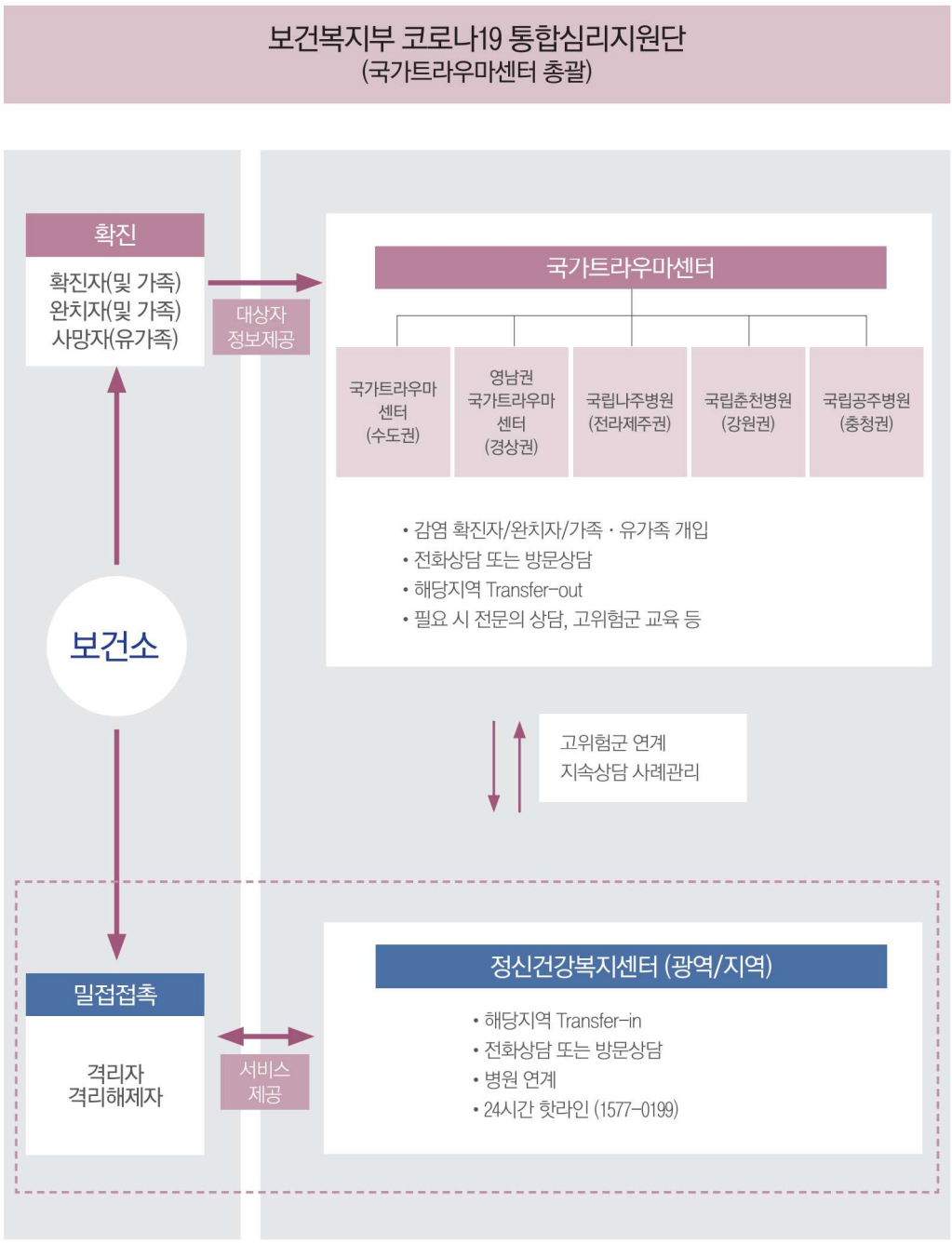
– 정신응급심리지원을 받은 자가격리자 A 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첫 상담을 했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와 정말 말이 잘 통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를 거부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상담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코로나19 확진과 치료 과정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 심리상담을 받은 확진자 B 씨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해서 약물처방이 시급했지만 정신의료기관 내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 측에 문의해 봤지만 가족 외에는 대리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처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을 여러 차례 설득하여 영상통화로 약물 처방을 받아 정신적 위기 및 돌발 행동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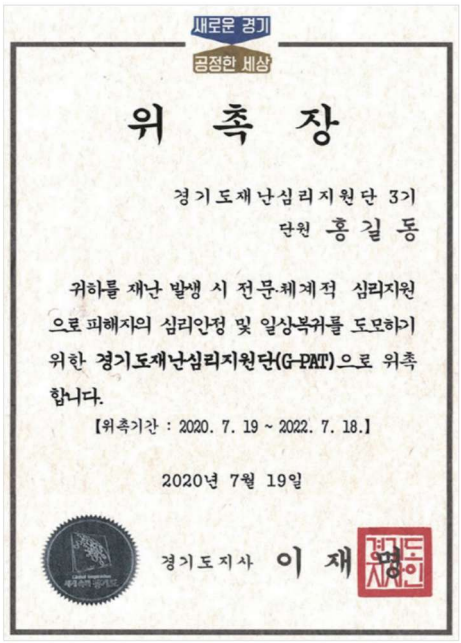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 총괄)
확진
확진자(및 가족)
완치자(및 가족)
사망자(유가족)
대상자
정보제공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
센터
(수도권)
영남권
국가트라우마
센터
(경상권)
국립나주병원
(전라제주권)
국립춘천병원
(강원권)
국립공주병원
(충청권)
• 감염 확진자/완치자/가족 · 유가족 개입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해당지역 Transfer-out
• 필요 시 전문의 상담, 고위험군 교육 등
보건소
고위험군 연계
지속상담 사례관리
밀접접촉
격리자
격리해제자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지역)
• 해당지역 Transfer-in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 병원 연계
• 24시간 핫라인 (1577-0199)

2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비상 가동

경기도 심리방역의 최일선에 섰던 것은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이었다. 도지사가 직접 위촉한 이들은 정신건강 분야 최고의 전문요원들로서 현장에서 불안과 우울,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의 규모 확대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방역을 추진해 나갔다.

●○ 코로나19로 인한 멘탈데믹 대응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도민의 멘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비상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Gyeonggi Psychologic Assistance Team)'은 재난 상황 시 '골든타임' 내에 현장 출동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방역 최일선의 조직이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위 촉 장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3기
단원 홍 길 동

귀하를 재난 발생 시 전문·체계적 심리지원으로 피해자의 심리안정 및 일상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7. 19 ~ 2022. 7. 18.】

2020년 7월 19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위촉장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한 재난심리지원 전문가들로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안산온마음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90명으로 구성됐고,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외에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종사 인력 670명이 가동인력으로서 심리지원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격리 중 식욕부진, 불면증, 환청, 우울증, 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경기도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상담은 24시간 핫라인(T. 1577-0199) 또는 문자 및 전화상담으로 이뤄졌고, 자가격리 해제 후 필요시 대면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확진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T. 02-2204-0001)와 연계(886건)하여 심리지원을 진행했다.

●○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3기 위촉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을 확대 구성했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3기 구성 시 기존의 70명 규모를 90명으로 확대하여 위촉한 것이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3기는 2020년 7월 19일에 위촉과 동시에 바로 활동에 들어가서 2022년 7월 1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일로서 현장을 지키는 것이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G-PAT)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전문가들로 이뤄지며 재난상황 시 즉각적 현장 출동 및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2015년 조직된 이래 세월호 침몰, 화재·붕괴사고, 감염병(메르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심리지원과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했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에도 현장에 급파되어 심리방역의 선봉에 서서 활동했다.

1. 구성 : 90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9명, 시 ·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69명, 안산온마음센터 6명, 경기도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명)
2. 위촉자 : 도지사
3. 자격 요건***
   - 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경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 5년차 이상)
   - 경기도가 주최하는 재난심리전문가 강사양성과정 참여 및 정기교육 중 위촉 기간 내(2년) 16시간 이상 참여
   - 경기도지사 위촉으로 활동기간은 2년 이후 재위촉 여부 평가
4. 주요 역할
   - 소속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의 이차적 제공 추체로서 기능 수행
   - 재난발생 시 국가 또는 경기도 요청에 의한 재난심리지원 가동인력으로 파견업무 수행
   - 파견 시 컨트롤 타워의 결정에 따른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

*** 자격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경기도 재난심리지원 체계



구분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1기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2기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3기
인원	51여 명	70명	90명
위촉 기간	2016. 7. 19.~2018. 7. 18.	2018. 7. 19.~2020. 7. 18.	2020. 7. 19.~2022. 7. 18.
자격 기준	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경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3년차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경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5년차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경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5년차 이상)
위촉 대상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온마음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온마음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온마음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 전담 선별진료소

'24시간 정신응급센터 겸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이자 마음의 쉼터가 되어 주었다. 병상 부족, 코로나19의 병원 내 전파 우려로 인한 입원 기피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정신응급질환자들이 '24시간 정신응급센터 겸 선별진료소'를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심리방역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방역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여 신규 환자를 기피하여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원을 받아주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정신응급시스템의 마비로 정신응급질환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심지어 미치료 정신질환자로 인한 돌발사고의 우려까지 커졌다. 실제 지역 관할 경찰과 소방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해줄 병원을 찾지 못해 지나친 시간소모와 혼란이 가중됐다.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응급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됐다(2월 25일부터 3월 10일 약 2주 동안에만 정신응급대응 고충사례 26건 발생).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의 입원이 거부되거나 우울증 환자의 추락 및 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고도 발생했고 가족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조현병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이웃이 위해를 당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에만 100여 개가 넘는 정신과병원이 있지만 입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밤이 새도록 경찰과 센터 직원이 종종거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든 병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코로나19 음성검사를 받아 오세요.", "14일 동안 자가격리 한 후에 음성이라면 입원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불가합니다."라는 대답뿐이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이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고 결국 이러한 아우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내놓았으나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보호 치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도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들이 올라왔다.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그 결과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정신질환자(비자의 입원 필요시)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정신응급대응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대상자 발생부터 최종 입원까지 체계적 서비스(정신 및 감염병 진료 음압병동 운영,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제공하는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3월 23일부터 세계 최초로 '24시간 경기도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운영 선별진료소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음압병동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감염관리 시스템 적용이었다. 그것은 정신과 관련 일만 담당했던 정신과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에게는 낯선 영역이었다. 그렇기에 방호복을 입는 방법부터 벗는 방법, 병동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 확진가능성을 계산하여 환자 입·퇴실 시간 조율,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 A부터 Z까지 기초적인 감염관리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선별진료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일차적인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감염 관리뿐만 아니라 자·타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보호조치가 24시간 필요했다. 이에 안전요원을 투입하여 대상자 및 직원들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등 정신응급 선별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의 제한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인 입실 대상자 기준을 정했다.





음압병동 응급진료 대상자	음압병동 응급진료 부적합 대상자
1. 정신건강복지법 內 응급입원(제50조), 행정입원(제44조) 수반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는 1차 스크리닝 후 판단 2.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시급한 자 3. 자살 시도자, 신체적 위해자 4. 정신과적 문제로 공공 안전 위협하는 자	1. 선별진료 후 대상자의 후송 요청에 비동의 하는 경우 2. 자 · 타해 위험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자 3. 내 · 외과적 중대 질환자 및 신체적 치료가 우선인 자 4. 알코올 의존 대상자 및 주취(만취)자, 기타(단순 자해, 성적 일탈(sexual deviance), 발달장애, 물질남용, 인격장애 등)

선별진료소 운영 중에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종종 벌어졌다. 무작정 환자를 음압병동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입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만실인데도 불구하고 입실가능 연락도 없이 새벽에도 환자를 데리고 오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정신증상이 심한 환자로 인한 타해 위험 또는 선별진료소로 사용되는 격리병동 물건들이 파손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대상자가 신체협진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전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퇴실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입원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후송을 거부하여 퇴실이 안 되는 상황도 많았다.
음압병동 안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대상자들이 병실에 설치된 TV, 전화기, 냉장고, 침대, 문 등을 파손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중 음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압병동 내 인터락(한쪽 문이 닫혀야 다른 쪽 문이 열림) 시스템인 문을 강제로 열고 나와 흥분한 모습을 보여 새벽에 경찰이 긴급 출동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응급 상황이 반복됐기에 3교대로 운영되는 스텝들의 긴장도는 매일 밤 강도 높게 계속됐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검사가 목적이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상 퇴실 때까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격리보호하고 정신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퇴실 후 전원병원 대상 모니터링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대상자 연계 등 선별진료소 이용 후에도 대상자들의 사후 관리에 힘썼다.
현재 9월 21일 시점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느덧 180일을 넘겨가고 있다. 180일 동안 선별진료소 이용 문의 건수는 1,800여 건에 육박했으며, 총 133명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정신의료기관에 전원조치 됐다.
선별진료소를 이용한 133명의 환자들은 주로 경찰(53.8%)에 의한 의뢰가 가장 많았으며, 자.타해 위험은 타해(43.4%), 자해(30.8%), 자·타해(23.7%) 순이었고, 진단유형으로는 조현병(33.2%), 조울증(23.1%), 우울증(18.6%)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50대, 20대 순이었으며, 대부분이 정신과 경력(77.9%)이 있었고 퇴실 시 응급입원이 72.9%에 달할 정도로

응급한 정신질환자가 주이용군이었다. 만약 정신응급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응급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아찔한 사고는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신응급환자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원해 왔다. 이것은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사태에서 정신응급환자에에 대한 심리방역의 일환이었고 최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까지 낳았다.

또한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않았던 정신의료기관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됐다. 선별진료소 운영 초기에 코로나19 검사 및 정신과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10개(대학병원만 운영됨)에 불과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5배가 증가한 50여 개로 경기도 내 입원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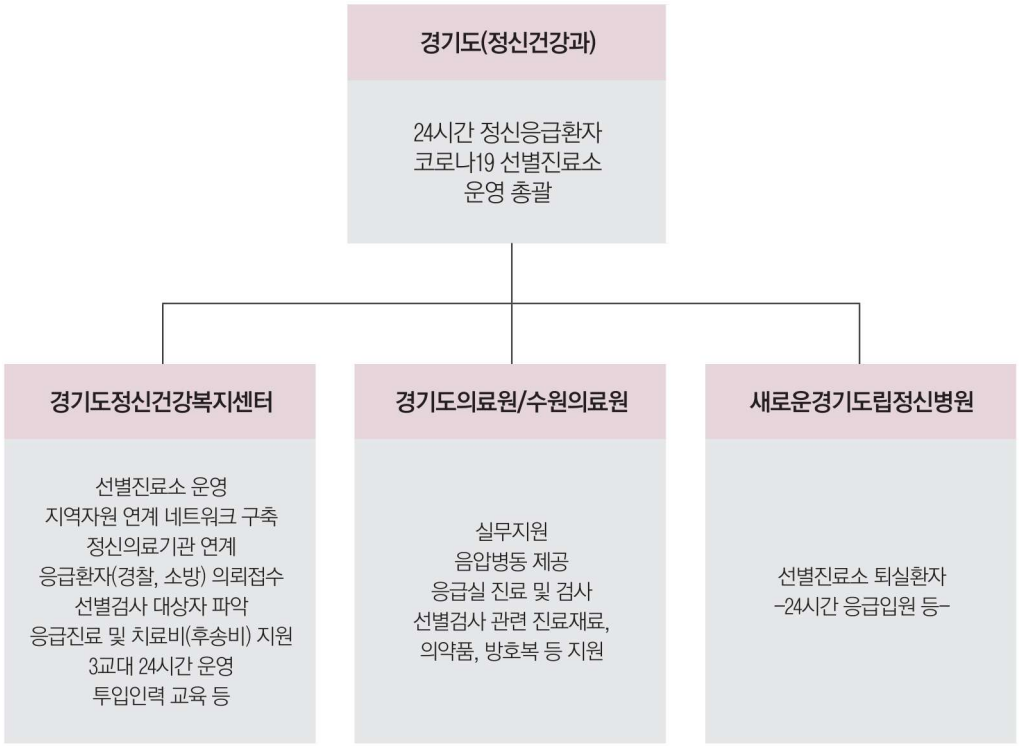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회복 및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재가동됐으면 한다. 물론 경기도는 이후 감염사태가 생겼을 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응급체계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치료에 진심을 다할 것이다.



국내 최초,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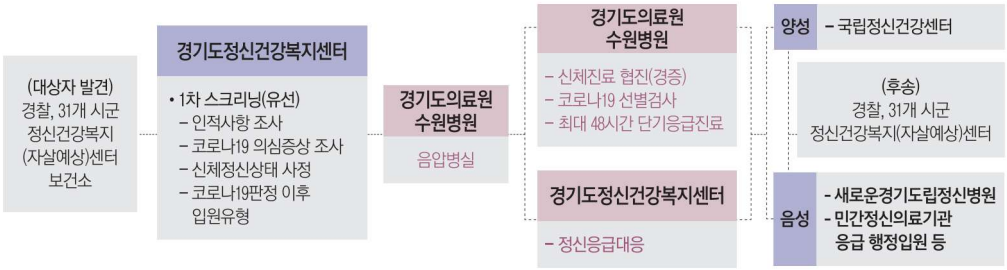
1. 정신응급환자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및 단기 정신응급진료 실시

- 기간 : 2020. 3. 23.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감염병동(2개 병상)
- 대상자 : 자 · 타해 위험자(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치료 시급한 자) 등



2. 국내 최초 경기도형 정신응급 및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 구축

-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예방 및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해소
- 정신분야 전문 인력을 통한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대응 선별검사 및 진료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4시간 정신응급병상 확보
- 정신응급대상자 발생부터 최종 응급입원까지 체계적 연계 서비스



▶ 경기도 정신위기대상자 코로나19 검사 및 정신응급대응 체계도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와 편의점 내 집기를 벽돌로 파손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을 쫓아가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A 씨. 경찰이 출동하여 흉기(식칼) 압수 후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로 이송했고 이송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음성) 판정 시까지 음압격리병상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심신안정을 취하게 한 후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 지역 경찰서 지구대

"대학병원 정신과 외래진료에 입원을 하려 했으나 입원병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도한 자해(할복) 시도 및 가지고 있던 정신과 약을 과량 복용하는 행동을 보인 B 씨. 경찰이 경기도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해 준 다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음성판정) 및 정신과적 응급진료를 하여 안정을 시킨 후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전원조치 했습니다."

–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배우자와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살을 기도한 C 씨. 경찰이 출동하여 C 씨를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했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결과가 나왔고 코로나19 진단에서 음성판정임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전원조치 해주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 경기도 협력병원

4

도민의 마음 돌봄 프로젝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무기력증 등 '코로나 우울'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의 필요성도 더 커졌다. 이에 코로나19 우울증,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분 전환을 돕고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쉼터 조성 등 다양한 마음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보급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취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섰다. 3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 유튜브 특집-코로나19 우울증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 콘텐츠는 총 15건으로, 경기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유명 유튜버, 인기 팟캐스터, 도민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우선 3월 12일과 19일, 21일에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공연 '브라보, 엄사장', '정나라&정하나 힐링 콘서트', '코로나19 안녕! 팝스와 함께해요'를 공개했다.

3월 26일에는 감성 어쿠스틱 듀오 '정흠밴드'와 드라마 '스카이캐슬' OST 'We all lie'를 부른 신인가수 하진이 속한 보컬그룹 '림하라'가 출연하는 미니콘서트 '방구석 라이브'가 펼쳐졌다. 콘서트는 유튜브 구독자들의 사연 소개와 출연가수들의 앨범 수록곡 및 각종 커버곡, 신청곡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4월에는 영화리뷰 유튜버 '거의없다', 헬스 유튜버 '조준' 등 유명 유튜버와 협업한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 거의없다는 '코로나19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추천영화 베스트3'을, 유튜버 조준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경기도 봄꽃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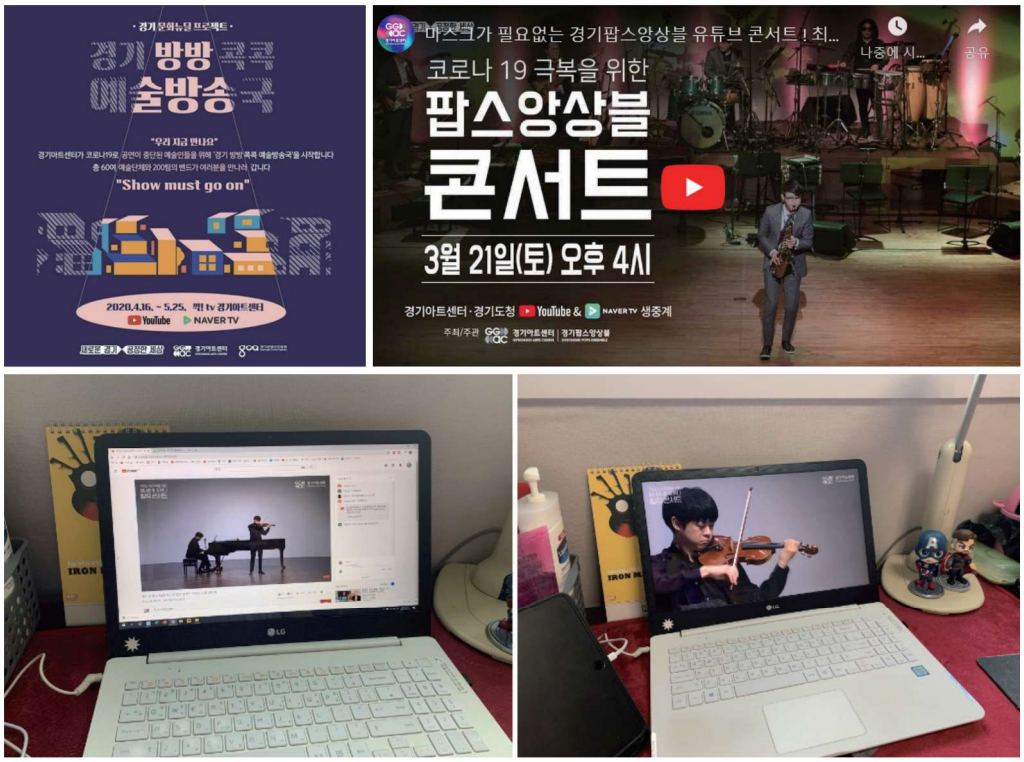
예능 팟캐스트 '잡스러운 연애'는 깜짝 게스트를 초대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즐기는 봄꽃축제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술쇼 비법,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 등 경기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다양한 영상들을 함께 발행하여 도민들의 코로나 블루 해소에 힘썼다.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캠페인 프로그램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user/ggholics)를 통해 소개됐다.

또한 도민들이 집에서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은 도민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심리지원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비대면(무관중) 공연 무대를 마련하여 공연비를 지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지원의 일환이기도 했다.

시즌 I(2020. 4. 16. ~ 6. 7.)에서는 도내 245개 공연팀이 경기아트센터 소극장.대극장.국악원 등에서 무관중 공연을 진행했다. 도는 공연비 9억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시즌2(2020. 7. 1. ~ 9. 19.)에서는 시군 예술인 공모사업 선정단체 약 400팀이 도내 7개 권역별 공연장에서 무관중 공연을 펼쳤다. 공연팀에게는 출연비를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한편 참여단체에게는 완성도 높은 공연 동영상을 촬영.편집해 제공했다. 영상은 경기아트센터 유튜브(꺅!티비!!)와 공연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시 게시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즐거운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들 단체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건비 지급 및 1,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었다.



▶ 유튜브 콘텐츠, 방방콕콕 방송국 활동 사진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코로나19 심리방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도민들을 위한 공간조성을 추진했다. 도민이 야외 공간에서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이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55개 사업지를 선정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모델 정립과 수범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28개 시군에서 106개 사업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장 확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별 시범사업은 시군별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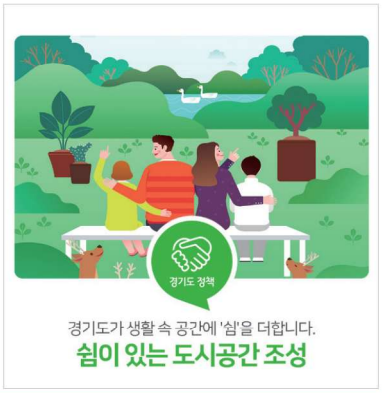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27개 시군에 각각 2개 사업, 하남에 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오산시 고인돌역사공원 등 공원공간에 21개 사업,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 등 도로공간에 15개 사업, 부천시 상동역 인근 등 공공공지에 12개 사업, 화성시 치동천 일원 등 하천공간에 7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은 생활 속 쉼과 소통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9년 12월 18일 정책브리핑에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민 추천 신청을 받아 950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공모를 진행할 때 시군으로 하여금 도민 추천 대상지도 함께 검토 후 신청토록 했고 이들 14곳을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는 등 도민 참여형으로 추진했다. 사업 대상지에는 벤치, 정자, 돌의자, 썬베드 등을 설치해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클럽, 노래방 등 밀폐된 실내공간보다는 개방형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총 26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 생활 속 보편적 '쉼' 공간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5

심리지원을 위한 안심정보 프로젝트

코로나19 심리방역은 정보전이었다.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여 인포데믹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심리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을 위한 안심정보 프로젝트'를 펼쳤다. 특히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경기도 심리면역 안내서' 등은 도민들 스스로 마음 치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

●○ 진짜 정보 적극 홍보

경기도 홈페이지, 31개 시군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갔다.

우선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가이드라인', '경기도 심리면역 안내서' 등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도민들에게 알렸다.

불안 공포 대처법 등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가이드라인'에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할 것, 힘들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기도 심리면역 안내서'에는 감염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증상, 심리면역을 위한 방법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 등이 안내되어 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심리지원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재난을 경험한 이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무료 긍정프로그램 '심리면역 온라인프로그램 'SPRING'(www.g-mind.or.kr)'을 자체 개발해 제공했다. 경기도 온라인 심리면역 프로그램 'SPRING'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심리학과 성격 강점에 기반 한 회복탄력 향상 마음 안정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긍정상태를 점검하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면역 프로그램이 제공돼 누구나 시간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가짜 정보 엄정 대응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했다. 특히 2월 3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 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고 이에 평택시는 시 공식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했다.

가짜뉴스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혼란을 주는 만큼 도는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도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가짜뉴스 및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포데믹에 엄정 대응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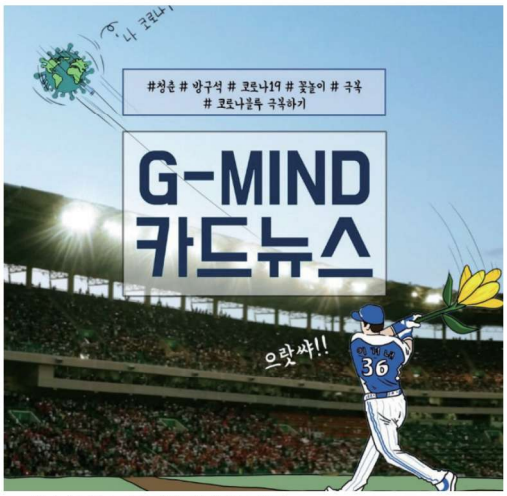
코로나19 안내서



아동 · 청소년용 코로나19 시청각 자료 및 카드뉴스



▶ 아동용 코로나19 시청각 자료



▶ 청소년용 코로나19 시청각 자료

코로나19 페이스북 홍보 및 정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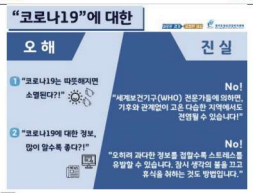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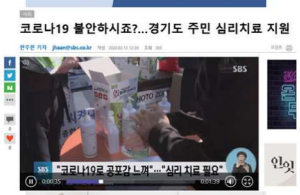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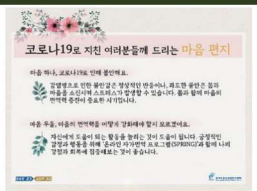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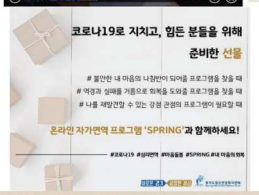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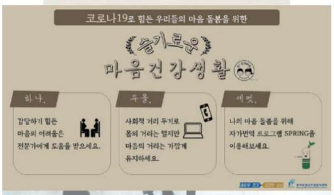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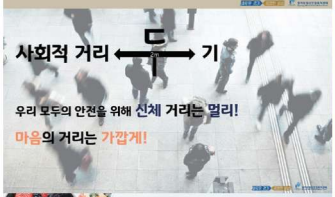




























6

사회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코로나 19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 상담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또 여름철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염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활동을 강화했으며, 심리적 자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토닥토닥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와 함께 심리지원 나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 도민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와 협업하여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해소를 돕는 등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시 심리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지원 중복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은 보건복지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점차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격리자는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심리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심리지원은 심리상담 176건, 상담 안내 138건으로,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추진하느라 예년에 비해 심리지원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 심리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도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상담 활동비, 상담활동 관리를 위한 인건비 부족 등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 토닥토닥 도민들의 마음 안아주기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사가 상시 대기하면서 코로나 블루, 재난 피해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 마음돌봄 토닥토닥 챌린지'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닥토닥 챌린지는 심리안정화 기법 중의 하나인 '나비 포옹법' 동작을 응용하여 스스로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동작을 통해 도민들에 대한 위로와 응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서 SNS에 해시태그(#토닥토닥챌린지, #토닥토닥캠페인)와 응원메시지를 함께 업로드하고, 다음 챌린지를 진행할 2명을 언급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름철에는 코로나19에다가 폭염까지 더해져 심리적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유선 심리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평년에는 9.8일인 데 반해 2020년에는 20~25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19로 무더위쉼터(복지관, 경로당)가 문을 못 열게 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 재해 · 재난 희생자와 함께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름폭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규모 재해·재난 현장에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 그 가족들의 심리적 불안, 공황, 스트레스, 우울, 자살충동 등 다양한 트라우마 관리·지원을 위한 활동이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충격 완화를 위해 즉각적인 심리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7

현장과 공감하는 심리방역

심리방역 현장에서 정기적인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이 원하는 것,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방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계속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갔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인 인식 조사, 심리방역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리방역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갔다.

●○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심리방역

4월 3일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심리방역 전문가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 증가 등 왜곡된 심리 반응에 대한 대비, 도민의 정서적 피로감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이는 취약계층(정신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한 보편적 복지 제공, 적극적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한 도민과의 연대감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심리방역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나갔다.

●○ 도민이 원하는 심리방역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불안 등 심리적 상황의 심각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심리방역 추진의 동기로 삼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등의 실질적인 의견을 파악했다.

1월 30일 ~ 3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도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자.의심자 격리 및 유입 차단,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홍보, 공공시설 관리 및 시원 등 도의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방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이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에 바라는 희망서비스는 "공공기관 등 복지서비스 연계(25%), 고위험군 지속적 사례관리(24%), 전화 및 SNS 등 온라인 상담(1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1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82%의 도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연구원에서 4월 30일 전국 17개 광역시의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수준이고 중증질환 및 타 재난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타나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47.5%가 우울감을 호소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47.6%로 평균 수준이고 대구가 65.3%로 가장 높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8일 ~ 31일까지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함께 의료·현장대응팀 총 1,1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대응 인력의 절반 이상이 "처우가 불공정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맡은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77.0%에 달해 높은 소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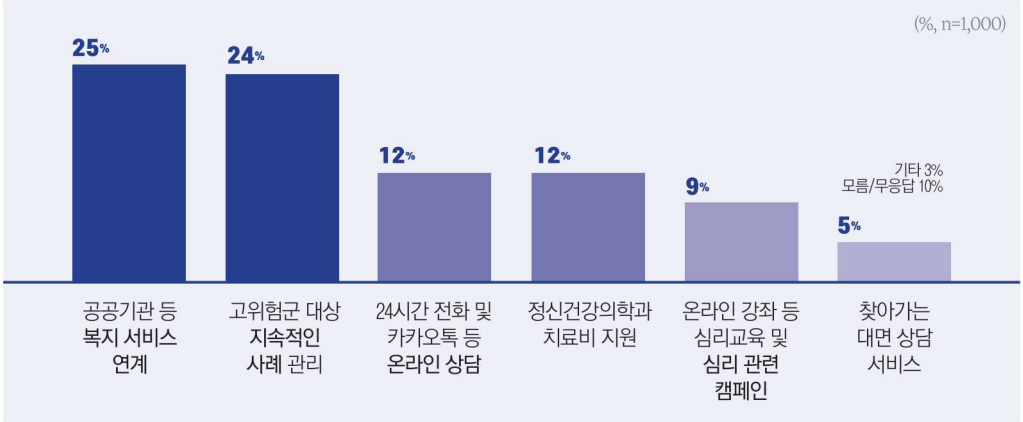
도는 다양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코로나19가 경제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 맞춤형 심리지원을 추진하는 등 정책에 반영했으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도민이 말하는 심리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자·의심자 격리 및 유입 차단,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홍보, 공공시설 관리 및 지원 등 도의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에 공공기관 등 복지 서비스 연계,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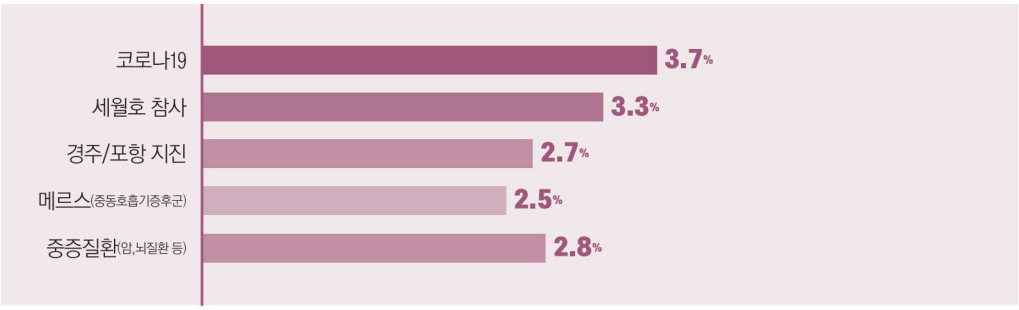


▶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에 바라는 서비스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 82%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수준이다."

– 경기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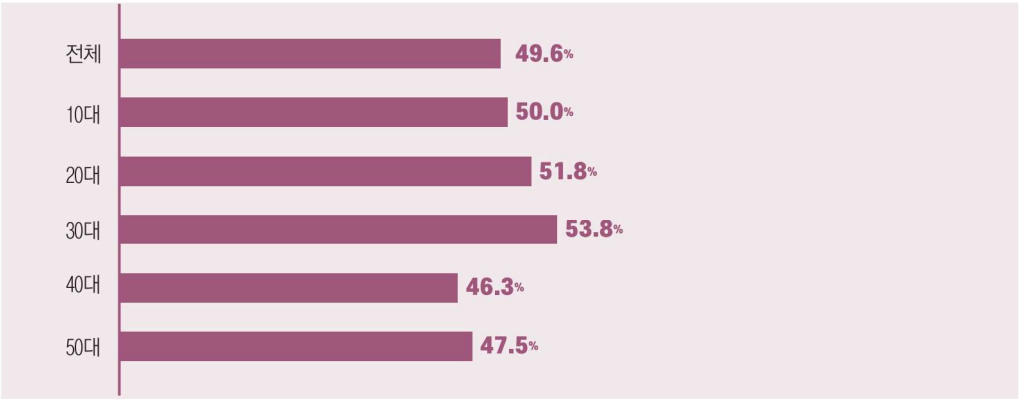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하다." 47.6% 경기도 vs 65.3% 대구



▶ 지역별 불안/우울감 수준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53.8 % (30대)



▶ 심리지원서비스 요구도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맡은 일을 계속 할 것이다" 77% (의료인)



V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응

1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294

2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대응 296

3 마스크 의무화 및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 300

4 도민과 의료인을 향한 긴급 호소 303

5 도지사 호소에 의료인들 나서다 307

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13

1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7~8월 김포, 고양 등 경기도 내 종교시설 및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각종 종교활동 및 소모임이 제한됐고 정규 미사, 예배, 법회 등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 2주간 정규예배 제외한 모든 종교활동 제한

8월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이고, 이중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였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정상 진행할 수 있었다.

앞서 도는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2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대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급증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는 동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광화문 집회 관련하여 전세버스 및 일간지 광고들을 역추적해 명단을 확보하는 등 명단 확보와 신속한 역학조사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진단 거부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한 신도 20명을 고발 조치했다.

●○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에 이어 두 번째 진단검사 행정명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을 매개로 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문판매 모임 집단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등 수도권 및 광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휴가 분산 사용"을 권장해 나갔다.
이동 및 대규모 밀접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유행으로 번질 수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됐다. 8월 중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페, 식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 2월 신천지대구교회와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 이은 대규모 감염 사례였다. 8월 22일에는 도내 일일 최고 1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8월 18일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에 이은 두 번째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서 석 달 만이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이었다.
또 집회 직접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도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신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했으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됐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 역학조사 및 명단확보 총력전

무엇보다도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집회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도는 자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경기지역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아 실제와 대조했으나 불일치하거나 자가격리 등 당국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체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야탑.화정역에서 확보한 서명자 명단을

즉각 경기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도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광복절 집회에 간 전세버스 4대를 찾아냈고 여기에 모두 137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정확한 명단 확인을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를 안내한 '종합일간지 광고' 내용을 역추적해 참석자 찾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8월 21일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이 8월 14일 자의 한 종합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를 제시하면서 광고에 나와 있는 지역별 담당자와 버스시간표 등을 확인해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지역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탑승자 및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확인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돌입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총력전 끝에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경기도는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역학조사 비협조와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등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 진단거부 신도 20명 고발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정한 기한인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9월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는데 고발 대상이 된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나갔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했다. 단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라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산세도 함께 증가했듯이 방역망에 허점이 생기는 곳엔 언제나 코로나19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이희영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도내 모든 시군은 지역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광복절 집회 관련 버스 탑승자 및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확인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돌입하십시오."

– 이재명 경기도지사,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3
마스크 의무화 및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는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의 전 직원들에 대해서 2주간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공무 외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8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대응 방안을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했다.



●○ 모든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방역의 본을 보이기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뭉쳤다.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이 2주간 대인접촉 금지에 들어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방역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감염으로 방역체계가 마비될 수도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공직자 호소문

4

도민과 의료인을 향한 긴급 호소

8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도지사는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이 전방위적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협조를 강조하고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동참해 줄 것과 의료기관이 병상 확보 등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최악 상황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 불가피"

휴가철을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을 계기로 급증하면서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2차 대유행'으로 보고 감염폭증에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 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 호소를 고(告)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도민을 향한 호소였다.

이 지사는 먼저 도민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리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도는 8월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둘째, 의료인을 향한 호소였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시설이 감당 못할 만큼 유행이 확산되면 가정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염두에 둔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을 강조했다. 의료역량이 감염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가정대기자 발생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격리중환자실, 일반격리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봄 대구.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서 여러 날 동안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을 향해서는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여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 많은 의료 전문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의료진의 희생을 추가 요청해야 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병원계에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상급병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셋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 등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에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바이러스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전 도민이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선을 다해 주고, 방역당국을 믿으며 방역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재삼 호소하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제나 힘든 고난을 인내와 배려, 참여와 헌신, 협력을 통해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리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도민, 의료인, 기업, 단체 등 도내 모든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5

도지사 호소에 의료인들 나서다

의료인을 향한 도지사의 긴급 호소 및 협력을 요청하는 간담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도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4주 만에 1,100명이 훌쩍 넘는 의료인들이 대거 지원한 것이다. 전문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받은 경기도는 홈케어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가정대기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그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상을 기다리는 '가정대기 환자 0명'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중환자실 확보 협조 호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가 중요했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8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중증환자 치료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밝히고 중증환자실 확보에는 민간병원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담 진료인력 확보였다. 문제는 공공병원이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회복기 환자를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한편 8월 2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병상 3곳,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6곳,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한림대 동탄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 총 58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중 사용 중인 병상은 88.9%인 519병상이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꾸준히 병상 확보에 주력한 결과 9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해 16개 병원에 670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확보하여 284개 병상(42.4%)을 사용했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보였던 6월 25일 15개 병원에 580개 병상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간 감염병 전담병상이 90개(16%) 늘어난 것이다.

●○ 긴급의료지원단을 향한 의료계

긴급 호소에 이어 간담회까지 진행되면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가운데 의료계도 화답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8월 20일부터 시작한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수많은 의료인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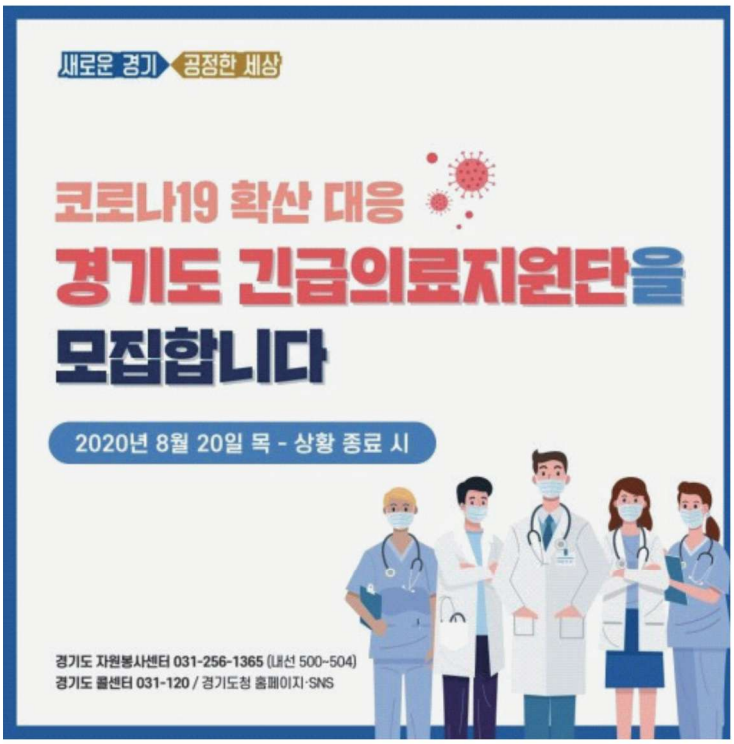
그 결과 9월 17일 오후 4시 기준 전문의료인력 총 1,159명이 지원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수많은

의료인들이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역에 헌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간호사가 47.6%인 552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265명, 임상병리사 80명 순이었다.

도는 모집된 의료인력 중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등에 총 83명을 배치했다. 9월 18일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4개 의료원에 64명, 생활치료센터 2곳에 9명 등 총 73명의 의료 인력이 활동했다. 나머지 의료인력은 전문인력풀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기했다. 대규모 확산에 따른 의료시설 마비 및 중환자 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춘 것이다.

한편, 의료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은 9월 18일 부로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 데다 방역 현장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대기인력 풀도 확보된 결과였다.

9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6.3%인 364병상이었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32명이 입소하고 있어 24%의 가동률을 보였고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736명이었다.





"의료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방역 현장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결과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다시 모집해 긴급 현장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

1. **모집 기간** : 2020. 8. 18. ~ 9. 18. (필요인력 확충 완료로 잠정 중단)
2. **자격 조건** :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자원봉사 참가 희망 의료전문인
3. **모집 현황** : 총 1,159명 (9월 17일 16시 기준)
4. **총괄** : 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5. 관리
   - 의료전문인 자원봉사 인력풀(직종 · 경력 · 지역 등) 구성 · 운영 및 현황 관리
   -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연계, 의료인력 자원봉사자 적재적소 배치
     (경기도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홈케어시스템, 감염병 전담병원 등)
   - 환자 급증 등 의료인력 절대부족에 대비, 적극 모집 및 홍보활동 전개

●○ 경기도형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가동

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했다.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부족 문제를 방지하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는 홈케어시스템 본격 시행에 앞서 홈케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8월 27일에는 31개 시군과 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교육도 실시했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자 가운데 병원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에서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을 결정했다.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이 되면 전화를 통해 전문의료진이 1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했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G-CoMS(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에 심리상태, 의식, 심폐기능 등을 입력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했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이송했다.

의료진 및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경기도청에서 주간 상근 및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24시간 확진자를 관리했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참여한 간호사 6명도 운영단에 배치돼 활동했다.

홈케어시스템을 시행한 결과 가정대기 환자를 대폭 줄이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시행 10일 만인 9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가정대기 환자 0명'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최고 260명에 달하던 가정대기 환자를 0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홈케어시스템 운영 덕분이었다. 또한 홈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상을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을 기점으로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확진자가 감소한 데다 병상도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홈케어시스템을 재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홈케어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었던 데는 긴급 의료지원단의 역할도 컸다.

▷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1. **기간** : 2020.8.25. ~
2. **장소** : 신관 1층(舊 평화협력과 사무실)
3. **운영 주체** :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4. **운영 인력 :** 12명(단장, 의료진 10, 공무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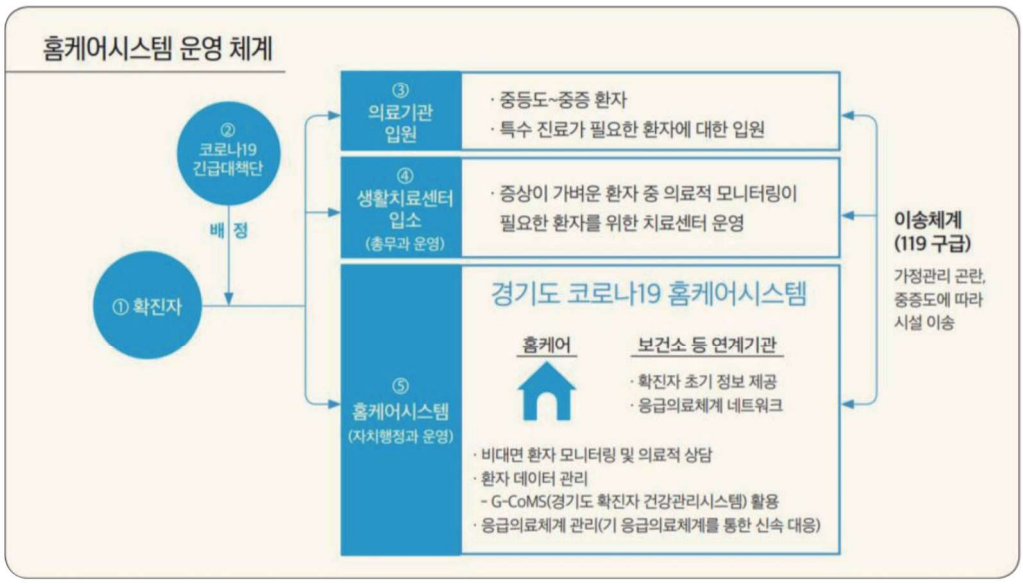
- (총괄 관리) 임승관(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
- (상담 등) 의사 4명, 간호사 6명, 행정공무원 1명(자치행정과)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의료진 변동 가능

5. **운영 방식 :** 24시간 체제(주간 상근, 야간 재택)

6. **주요 역할**

- 의학적 · 정신적 상담서비스 및 진료, 응급이송 등 연계 안내
- 가정대기 확진환자의 중증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조치
- 확진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시군 보건소 연계지원







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8월 19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서 8월 30일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되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된 데 이어, 다시 1주간 연장되어 9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14일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됐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고, 9월 1일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동

8월 19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3월부터 계속되어 온 정부의 방역정책이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게 됐다.

8월 중순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6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하여 9월 20일까지 시행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8. 31. ~ 9. 6)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9. 7. ~ 9. 13.)했다. 그 후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2.5에서 2단계로 하향해 시행했다. 또 추석 특별방역기간(9. 28. ~ 10. 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을 시행했다.

이렇게 두 달가량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10월 12일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해 나갔다.

●○ 도내 집합제한 행정명령

8월 14일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 움직임에 따라 도는 한동안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됐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PC방(4,389개소), 다방(1,300개소), 목욕장업(867개소), 학원·교습소(32,862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괄호 안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시점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 및 강화한 것이다. 생활 속에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였다.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됐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됐다.





VI 부록

1 코로나19 확산 과정 318

2 대한민국 방역체계 331

3 코로나19 관련 용어 334

4 방역현장의 이야기 341

1

코로나19 확산 과정

●○ 코로나19의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됐다.

-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20년 1월 9일 이 전염병의 병원체가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 코 ·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데,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다.

외국어 표기	coronavirusdisease 19, COVID-19(영어)
최초 발생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추정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음('20년 10월 기준)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진행
치명률	•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로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으로 이어짐

●○ 코로나19의 명명

-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고려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 WHO가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해 발표했다.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태양의 둘레에서 빛나는 코로나를 닮았다 하여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 최초 감염 발생과 중국 내 확산

- 코로나19의 최초 발단은 중국 우한에서였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시의 화난수산시장의 야생동물 판매상점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12월 31일 원인 불명의 폐렴 집단감염 발생 사실이 WHO에 보고됐다.
- 최초 발생일로부터 19일이나 지난 12월 31일에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 격리치료 중"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전염 확산 우려가 고조됐다.
- 중국 당국은 1월 1일 환자들이 다녀간 화난수산시장을 폐쇄했으나, 1월 11일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61세 남성)가 발생한 데 이어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를 앞둔 1월 18~19일을 기점으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넘어 수도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춘절대이동 이후부터 급격히 감염자가 늘기 시작했다.
- 중국 정부는 당초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1월 21일에서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 중국 내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중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우한 지역에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으나, 이미 많은 수의 우한 시민들이 중국 내 다른 도시와 외국 등으로 떠난 다음이었다. 2월 11일까지 중국 내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 중국 당국이 전염 사실의 은폐 및 사람 간 감염 사실 부인, 뒤늦은 봉쇄령 결정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중국과 홍콩에서만 648명이 사망했던 2003년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 WHO, 비상사태 선포(2020. 1. 30.)

-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30일 COVID-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2009년 미국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 때 첫 선포가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 공화국의 에볼라 상황에서 PHEIC가 선포된 바 있다.

●○ 전 세계 확산과 뒤늦은 팬데믹 선언(2020. 3. 11.)

- 2020년 1월 13일과 15일에는 태국과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밖 전염이 시작됐다.
-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중동과 유럽 대륙까지 대규모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됐다.
- 3월 들어 중국의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기에 들었다고 관측됐으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과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아메리카 등 그동안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던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여 3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110여개 나라로 발생국이 증가했으며 확진환자는 114,000여 명,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보고됐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미 확산된 3월 11일에 와서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WHO는 앞서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 당시 팬데믹을 선포한 바 있다. 전염병 위험 최고단계인 팬데믹은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 은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의미한다. 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1~6단 계의 경보단계를 설정하는데, 6단계가 팬데믹이다.

●○ 국내 1차 확산 과정(2월~7월 초)

-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의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나왔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외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 1월 27일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으며, 이 경계 단계가 선포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다.

- 이후 국내 확진자 수는 2월 17일까지는 30명 정도로 다소 안정적이었으나,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및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 2월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으로,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다.
- 정부는 3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 · 봉화군 ·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되며, 피해 복구비 및 방역과 생계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이 감염병으로 인해 선포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 3월 중순에 들어 신규 감염자 수가 두 자리 수로 감소하는 등 확산 추세는 가라앉았으나,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특히 서울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이태원클럽 발 집단감염,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산발적인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 국내 2차 확산 과정(8월 초~10월 초)

- 8월 여름휴가 여파에 이어 8.15광복절 집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띠자 방역당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과정

-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 1. 30., 1. 31., 2. 11.)
-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월 21일 대구 · 경북 청도 · 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 '심각'으로 상향
- 2월 26일 국회, 코로나3법 통과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5일 대구 ·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2020년 4월 9일 고3 · 중3 수험생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5. 4. ~ 8. 18.) 지급
-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 등교 개학,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 5월 26일부터 버스 · 택시 · 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5부제 폐지(6. 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6. 18.)
-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 7월 12일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폐지
- 8월, 여름휴가 여파 및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 감염 사례 발생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 · 경기지역(8. 16. ~ 8. 30.), 부산시(8. 17. ~ 8. 31.)
- 8월 18일,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 (8. 19. ~)

○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 수도권 유 · 초 · 중 · 고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고3 제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9. 6.) :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9. 13.)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9. 20.) 실시(9. 4. 발표)

○ 9월 13일, 2주간(9. 14. ~ 27.)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 2단계로 하향
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

○ 서울시 9월 28일 ~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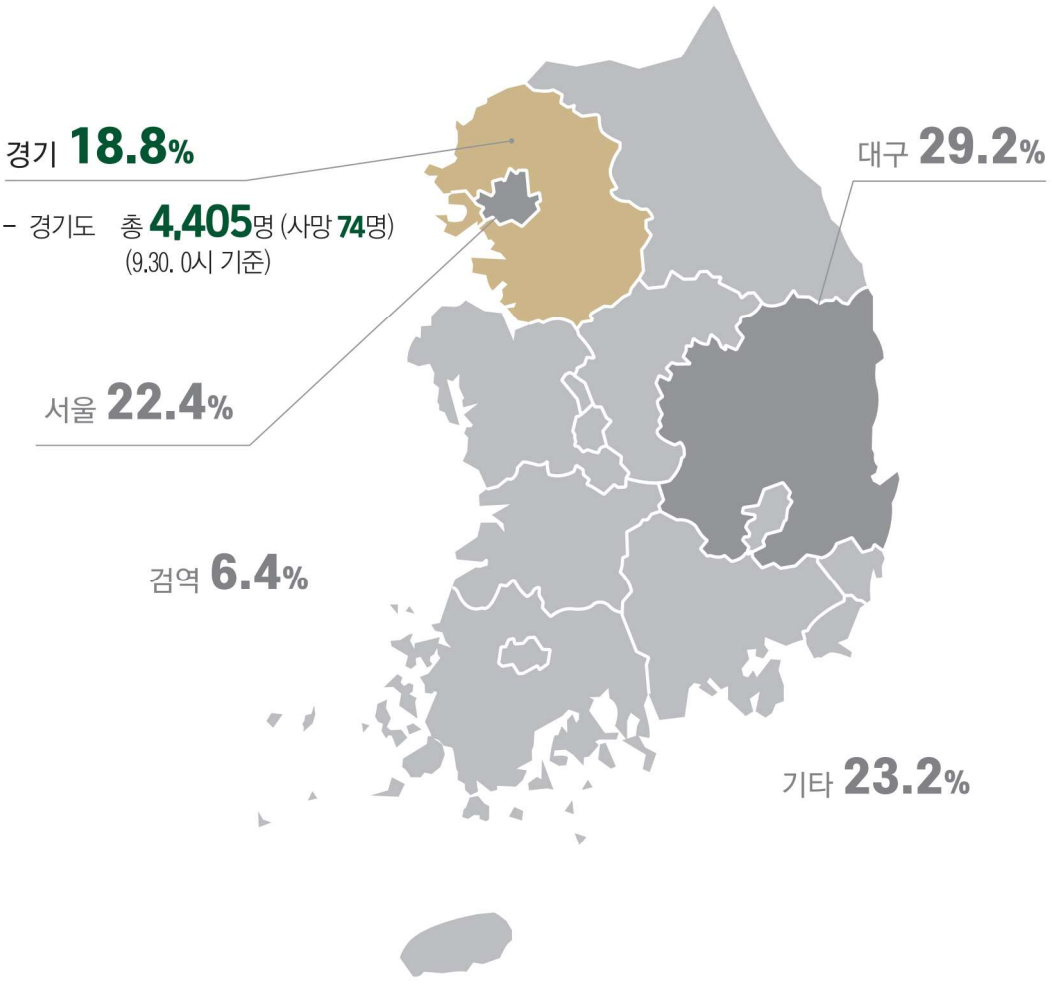
○ 10월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코로나19 발생 현황

- 세계 총 **33,478,638**명 (사망 **1,004,008** 명)
  (9.30. 9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한국 총 **23,889**명 (사망 **415**명)
  (9.30. 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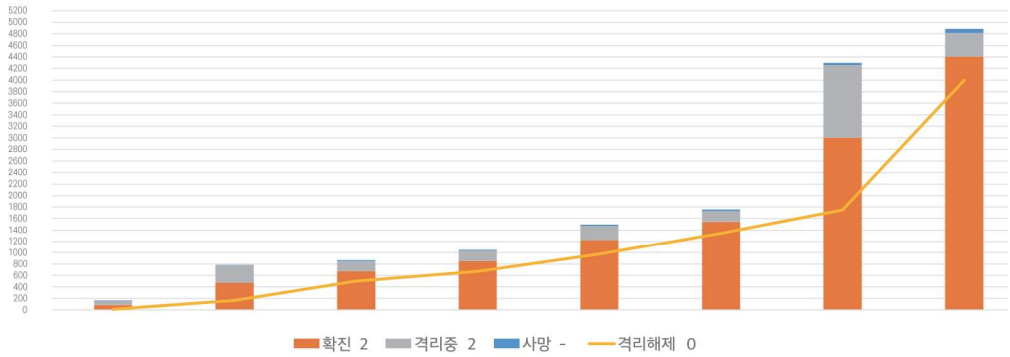
확진환자 지역별 비율



- 경기도 총 **4,405**명 (사망 **74**명)
  (9.30. 0시 기준)

○ 경기도 확진자 현황

일자별	1/30	2/29	3/30	4/29	5/31	6/30	7/30	8/29	9/30
확진	2	87	471	677	853	1,223	1,546	3,005	4,405
격리중	2	77	306	174	179	249	184	1,254	410
격리해제	0	10	165	503	674	974	1,342	1,751	3,995
사망	-	1	6	15	19	23	31	40	74



○ 시군별 확진 현황

지침에 따라 최초 인지 보건소 기준으로 구분

	구분	성남	고양	용인	부천	평택	수원	남양주	안양	안산	군포	의정부
총계	계	410	397	373	354	315	276	202	201	182	170	170
	국내	386	373	325	335	121	230	183	191	140	163	163
	해외	24	24	48	19	194	46	19	10	42	7	7
	구분	김포	화성	시흥	광명	파주	양평	광주	포천	구리	하남	이천
	계	149	140	138	124	121	92	82	71	70	61	60
4,405	국내	132	106	127	117	102	91	70	65	65	57	57
	해외	17	34	11	7	19	1	12	6	5	4	3
	구분	양주	가평	오산	안성	과천	의왕	연천	동두천	여주		
	계	47	45	32	29	24	23	16	16	15		
	국내	41	43	25	17	23	19	16	16	14		
	해외	6	2	7	12	1	4	0	0	1		

●○ 재원투입현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 · 2차 추경, 예비비, 국고보조금,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자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총 6조184억원 투입

(단위 : 억 원)

계	道 자체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기금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계	1회 추경	2회 추경	예비비		소계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재난관리 기금	재해구호 기금	
60,184	9,928	9,527	73	328	33,456	16,702	5,200	5,000	4,089	2,413	98

道 자체사업 : 9,928억 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9,928	
道 재난기본소득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	1회 추경
민생안전 지역경제 회복지원	소 계	1,706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1,000	1회 추경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500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78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5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보증(중소기업지원)	123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소 계	394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284	1회 추경
	○역학조사활동 지원 인건비 등	22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 지원	4	
	○감염병 병원체 검사	9	
	○청사유지 관리	2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	52	2회 추경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8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3	
예비비	○경기도 감염병관리기관 운영지원 ○코로나19 대응 대규모선별검사센터 설치운영 ○코로나19 중증환자진료 민간종합병원지원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328	

국고보조금 사업 : 33,456억 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33,456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1~4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1,529	
민생안전 지역경제 회복지원	소 계	1,57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1,429	
	○코로나19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150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소 계	348	
	○보건소 구급차지원	23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이동형 X-ray)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34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1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3	
	○코로나19관련 경기도의료원 방역도우미 운영	2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45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1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132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17	
	○코로나19 확산방지 안심식당 지원 식사문화개선	2	
	○의료인력 훈련상담 치유지원	45	

중소기업육성자금 : 5,200억 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육성자금	5,200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업체당 5억원 이내)

소상공인지원자금 : 5,000억 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소상공원지원자금	5,000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소상공원 자금지원(업체당 1억원 이내)

재난관리기금 : 4,089억 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4,089	
道 재난기본소득	3,857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1호 생활치료센터	19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스팀 멸균소독기, 해외입국 도민 대상 인천공항 홍보부스 설치 등
제2호 생활치료센터	11	○생활치료센터 보호복, 홍보물제작, 환자이용시설 멸균소독 등
제3호 생활치료센터	12	○생활치료센터 의약품 구매, 방역소독, 의료용품, 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제4호 생활치료센터	12	○생활치료센터 통신공사, 방송공사, cctv공사, 청소용역 등
제5호 생활치료센터	11	○의약품 구매, cctv설치, 의료폐기물 수거, 격리시설 공사 등
경기도 수도권2 생활치료센터	12	○구조구급 소요물품, 방역소독, 의약품 구매, 환자용 침구류 구매 등
소방재난본부	96	○코로나19 이송관리 물품(마스크, 감염보호복, 휴대용적외선체온계) 등
도 의료원	40	○uv소독기, 초음파진단기, 열화상카메라, 인공호흡기 등
선별진료소	3	○선별검사센터 살균제, 메가폰, 접이식 의자, 보호장비 등 구입
임시생활시설	2	○해외입국자 의료물품, 안내배너 등 홍보물 제작
보건환경연구원	14	○비접촉식 제온계,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 구매 등

재해구호기금 : 2,413억 원

교부일자	금 액	지원 시 · 군	주 요 내 용
계	2,413		
道 재난기본소득	2,285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3월	54	과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차)
		타 시 · 도(대구, 경북)	○도 특산품키트, 마스크 등
		시흥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2차)
		화성시, 안산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3차)
		31개 시 · 군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도특산품키트)
		수원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4차)
		광주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5차)
4월	16	시흥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6차)
		구리시, 수원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7차)
		파주시 외 5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8차)
		수원시, 성남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9차)
		30개 시 · 군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2차, 도특산품키트)
		안양시 외 3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0차)

교부일자	금 액	지원 시 · 군	주 요 내 용
5월	5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1차)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2차)
6월	18	수원시 외 4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3차)
		광주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4차)
		남양주시, 연천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5차)
		안양시 외 4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6차)
		화성시, 가평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7차)
7월	25	고양시 외 5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8차)
		수원시 외 9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19차)
9월	10	성남시 외 8개 시 · 군	○격리자 개별구호물자 지원(20차)

재난안전특별교부세(행안부→道) : 98억 원

교부차수	금액	주 요 내 용
계	98	
1차(2.3.)	6	○마스크 ·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소모성 물품) 구입 ○생활수칙 안내서 제작 등 홍보활동 소요비용
2차(2.14)	21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호복 · 소독약품 등 진단 · 소독 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3차(2.26)	37	○경기도 의료원(6개) 코로나19 대응 필요장비 구입 (마스크, D레벨 보호구 세트 등)
4차(3.18)	29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학원 ·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활동에 우선 집행

(참고)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 44,548억 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44,548	
道 재난기본소득	13,019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1,529	○전국 1~4인 가구당 차등지급(40~100만 원)

2
대한민국 방역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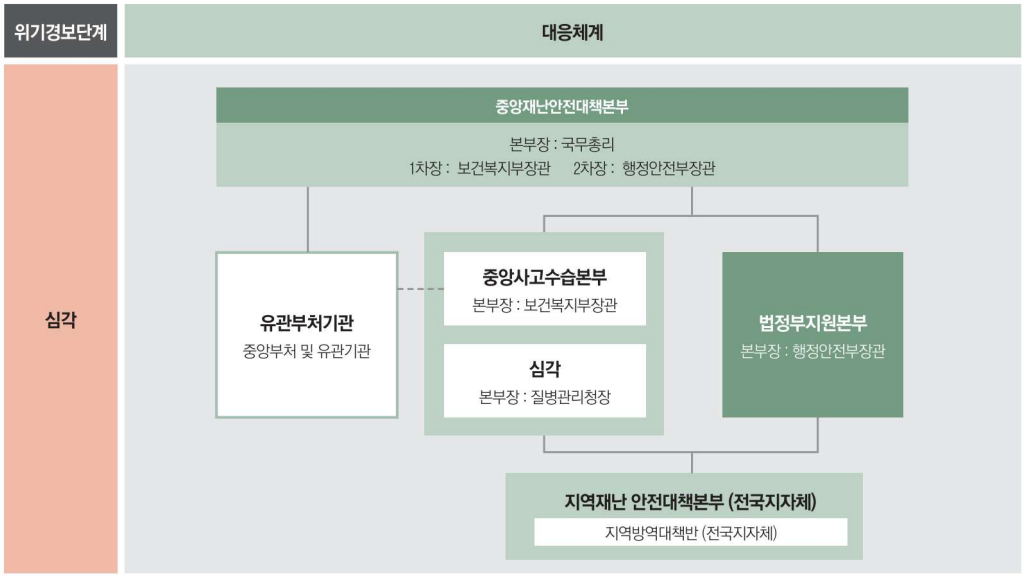
●○ 한국 정부 대응체계 (2020. 2. 25. 기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2020. 2. 23.)됨에 따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를 지원했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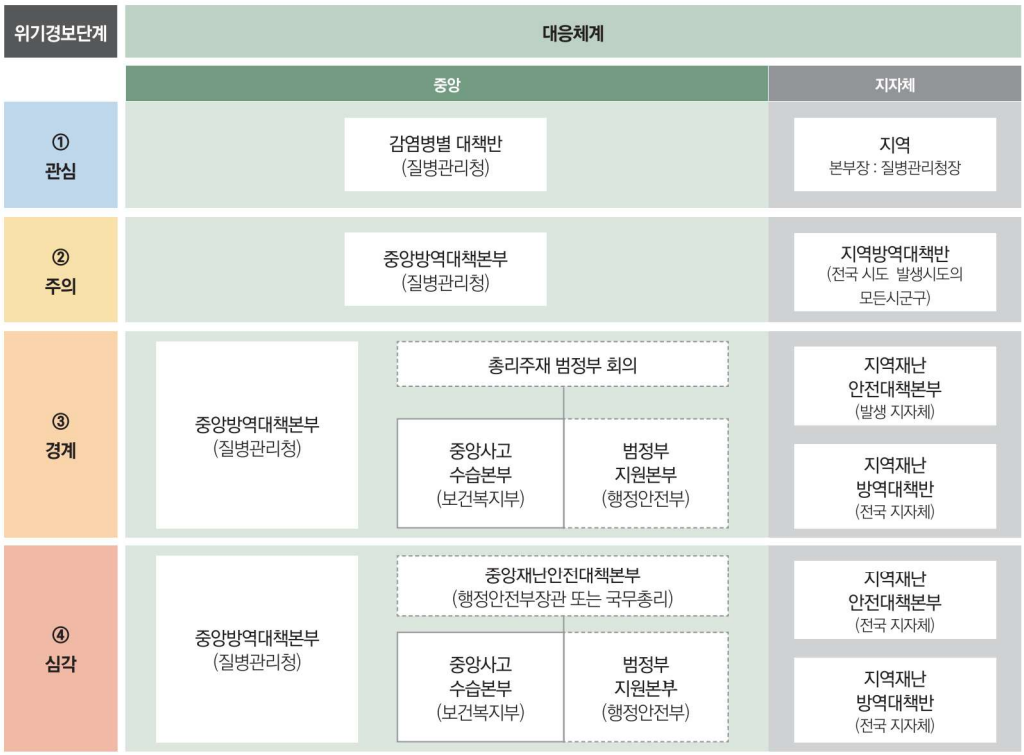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을 지원받았다.

-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관하도록 요청
-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범정부적 대응체계



중앙 및 지자체 대응체계 비교



3
코로나19 관련 용어

●○ 코로나19 사례 정의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영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감염병의 수준을 구분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보의 단계별 조치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 국내 감염병 유행 확산 시에 가동된다. 정도에 따라 주의-관심-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감염이나 전국적 확산 단계에 발령하는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국외 환자 유입 차단, 검역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 · 도 및 관할 시 · 군 · 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 · 운영 • 검역 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 발생지역 시 · 도 및 관할 시 · 군 · 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명칭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다. 세계 보건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나 특정 전염성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선포한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상황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1개에만 해당하더라도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선포한다.
2009년 신종 플루 확산 때 처음 선포됐으며, 2014년 폴리오,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5차례 선포한 바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6번째로 선포했다. 이 선포에 따라 발생국가와 위험국가에 대한 보건의료시설 강화, 능동감시 등 관리개선,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백신 승인 등의 국제적 조치와 지원이 강화됐다.

능동감시 대상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격리되지는 않으나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능동적으로 감시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스크 5부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의 중복 구매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공급 정책이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의한 개인 구매기록, 1인당 1주일간 2매로 구매 제한, 생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약국부터 우선 시행했으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시스템 가동과 함께 시행됐다.

선별진료소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이며,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곳이다. 응급실 외부에 별도로 마련하기도 한다.

슈퍼 전파자

바이러스 감염자로서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8명 이상 감염시킨 사람을 뜻하는 용어. 전염병 감염의 경우 80%가 슈퍼 전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개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자각 증상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 슈퍼 전파자로 후일 판명된다.

음압병실

기압 차를 이용하여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로 '음압격리병실'이라고도 한다. 음압병실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의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춘 병실을 의미한다. 이 때 병실 공기는 병원체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가 달린 별도의 배기시설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자가격리

자가격리는 확진환자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나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으로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에게 시행하는 조치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1:1 담당자로 지정되어 관리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자가격리 중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피해야 한다.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코호트 격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 '코호트'는 원래 특정한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의학에서의 '코호트'는 특정 공간에 있는 특정 질병 감염자나 감염증 발생 환자와 의료진을 의미하며, 이들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를 말한다. '동일집단 격리'라고도 한다.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며,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 · 주거안정비, 사망 ·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되고, 전기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 ·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WHO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적이 있으며,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 전 단계는 '에피데믹'(감염병 유행)이다.

1차 감염 · 2차 감염 · 3차 감염

1차 감염은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2차 감염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1차 감염된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람 간 감염으로 확인되며,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차 감염은 2차 감염된 확진환자에게서 사람 간 전염된 경우를 말하며, 2차 감염자의 역학적 이동경로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유행병으로 발전)이 있어 감염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2020년 2월 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 권고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

장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K-방역을 위하여 2020년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등 총 5단계로 개편됐다.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 적립금인 3년간 경기도 보통세 평균연액의 1% 이상의 금액을 재난, 재해 대비 및 예방, 긴급복구 활동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영하기 있는 기금이다.

-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여 '20. 1월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 매칭(도의 경우 2,316억 원)으로 인정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간부문 지원에도 사용가능토록 한 바 있다.
- '20. 10. 1. 코로나19에 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은 4,583억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전환 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외출 ·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 조치	– 위험도 높은 활동 ·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유행권역)** 위험시설 ·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4
방역현장의 이야기

힘내라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구급대 전준영 소방사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제한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소방서에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환자 이송을 맡은 나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장시간 보호복 착용 등으로 상체에 심한 피부염을 앓게 됐고 면역력 저하, 체력 저하는 이제 새로운 나의 체질로 굳어져 버렸다.

환자를 이송하는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내부에는 언제나 사이렌 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좁은 공간에서 앉아있느라 엉덩이가 뭉쳐 올 때쯤이면 병원에 도착한다. 과거의 활발했던 병원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조명은 최소한으로 되어있었고 사람은 다니지 않는다. 응급실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돌아설 때면 마음이 짠하다. 그러나 쓸쓸한 마음에 젖어드는 것도 잠시일 뿐 환자를 병원에 인계한 후에도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병원 인근 구급차량 소독이 가능한 소방서에서 구급차량 소독을 한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지곤 했다. 결국 자정을 넘겨 귀소를 해서 겨우 한숨을 돌릴라치면 다시 울리는 구급출동 벨 소리...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쳐 있던 내 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피곤은 사치였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의료진, 소방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의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래본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웃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통합방재단 김형민 공무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면서 각 단체 협조를 받아 정왕1동 통합방재단이 구성됐다. 활동 초기에는 무거운 방역통을 짊어 매고 처음 해보는 방역 소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에 단체원들 모두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았고 우린 서서히 지쳐갔다. 그러던 즈음 또 다시 요양원의 대규모 발발 뉴스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통합방재단 일원이며 동 자율방재단 단장인 장갑수 단장은 "고통과 질병으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라며 지친 우리를 독려했고 우리는 젖 먹던 힘까지 끄집어내겠다는 자세로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전쟁터였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여기도 저기도"라며 손짓을 하시며 방재단의 발걸음을 재촉하셨고 이에 방재단원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뛰어다녔다.

9개의 단체 70여 명의 단체원들이 3,500시간이 넘는 시간의 유례없는 방역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왔다. 공무원 1년 차 정말 힘들고 바쁘게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통합방재단원들과 함께 방역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단체원들의 봉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코로나19가 사라질 그날까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다.





재난지원금 교부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경기도 파주시 금촌3동 박장호 공무원

2020년 4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비롯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교부'는 시군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계속 이어졌다. 전례가 없던 전 국민 지급 업무는 시작부터 고민이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교부를 해줄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교부 방법은 무엇일까? 등을 고민하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었다.

담당자뿐 아니라 동 직원들, 파견된 시청 직원들 그리고 지역단체들의 지원 등을 받으며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달리고 달려야 했다. 비록 고된 나날이었지만 재난지원금을 교부하면서 우리 동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수많은 형태의 가족형태 및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주위에 많다.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불빛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으로 주민과 하나 되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규모 집회에도 코로나19 걱정 뚝!

경기도 용인시 김소희 시민안전담당관

집회 첫날인 8월 1일 토요일 재난관리팀은 대규모 집회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날도 덥고 비까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은 이미 많은 집회 참가자가 모여 있었고, 경찰 인력까지 배치되어 있어 혹시라도 무증상자 확진자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집회는 신고한 장소 내에서만 진행됐으며, 참가자 전원 마스크 쓰기, 명단(성명, 핸드폰 번호 등) 작성 및 발열 체크 확인,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 방역수칙이 그 어떤 현장보다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다.

우리 재난관리팀은 집회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렸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점검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책임감 등 성숙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 이렇게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들이라면 이번 코로나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양혜영

코로나19 확산 초기.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한 분이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발열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었고, 정확한 절차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종하신 분 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솔직히 출장 검체를 준비하면서 임종하신 분을 대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담이 되고 겁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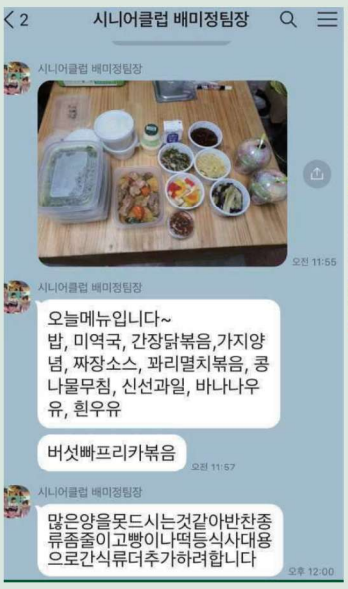
자택 앞으로 가니 먼저 경찰서에서 나와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나는 보호복을 입고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 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가족 분들을 보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 검체를 하기 위해 임종하신 할머님이 누워계시는 침실로 들어갔다. 막상 얼굴을 뵈니 두려운 마음보다는 돌아가신 후에 또 검사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할머님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하면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택에서 나왔다. 다행히 다음날 검사 결과는 음성!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지는 그때를 다시 회상해보면서 우리들에게 예전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감염병관리팀, 어떤 일이든지 발 벗고 나서주는 보건소 직원 분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머잖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힘내자~

자가격리 산모를 위한 따뜻한 밥상

경기도의왕시 보건위생과 김미자

관내의 00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곳에는 총 48명(산모 18, 신생아 18, 보호자 3, 직원 21)이 있었다.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동시간대 접촉자에 대해 전원 자각격리 조치하기로 하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자택으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을 알렸다. 그런데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 중 2명이 산후조리에 필요한 밥을 지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토로해 왔다. 고민 끝에 부시장님께 산모들의 사정을 보고 드리고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거주지 2개 동사무소 단체(동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하여 주말에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갈비탕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오전동, 청계동). 일반음식점 사장의 지원으로 산모가 먹을 수 있는 미역국과 밥을 제공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 의왕시니어 클럽을 통해 8일간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영양만점 산모용 도시락을 제공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보건소 직원, 오전동과 청계동 복지담당자, 시니어클럽 직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매일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자가격리 된 산모와 신생아에게 훈훈한 인정을 전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경기도의 기록

앞서 가는 길
함께 걷는 길
G방역

발 행 일 2020. 12. 24.

발 행 처 경기도 안전기획과
(031-8008-8411)

제작·용역 카피에스스토리 주식회사
(카피라이터 박은몽)

경기도청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www.gg.go.kr

본 제작물의 출판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3395-99-0 비매품